

10 YEARS OF AURI
WORKS & ACHIEVEMENTS
ON ARCHITECTURAL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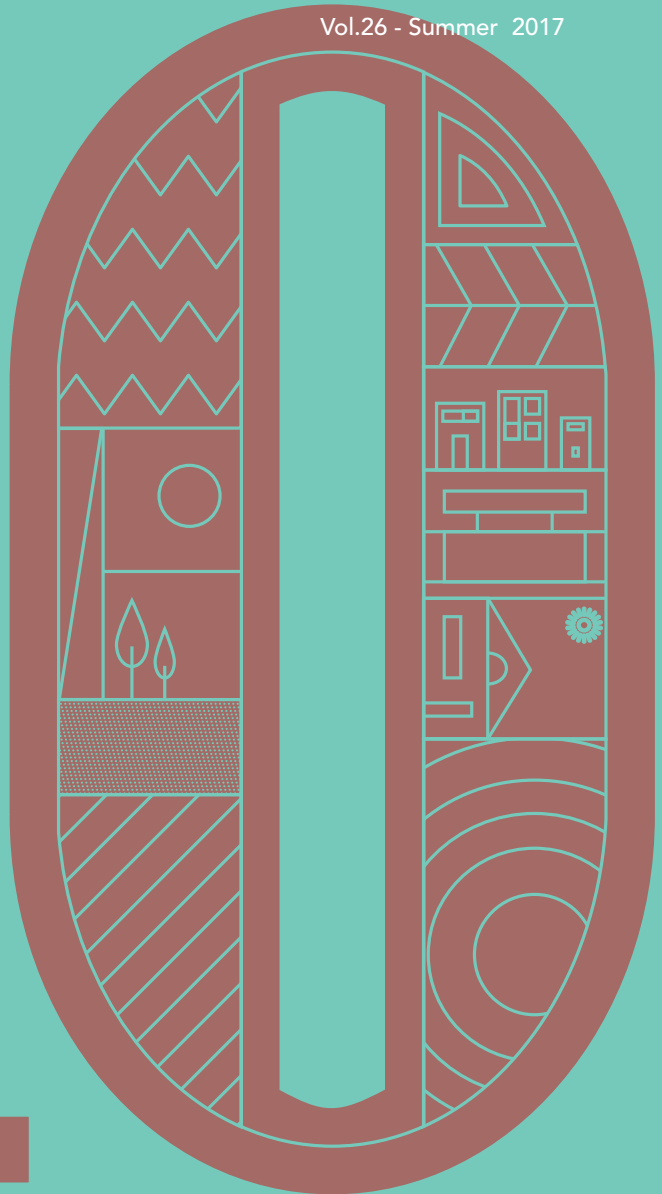
건축과 도시공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만드는
건축도시정책 전문저널

Vol.26 - Summer 2017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다. 그간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면서 더욱 짙은 연구활동과 사업의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축과 도시공간의 발전을 견인해왔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앞으로의 발전과 방향을 모색할 이유는 분명하다. 이번 호 정책이슈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0년의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한다.

건축정책 10년, auri의 노력과 성과



(a u r i)

건축과 도시공간

Vol. 26
Summer 2017

발행
2017년 6월 30일

발행인
김대익

편집책임
성은영

편집
고효진, 이미영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편집부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www.auri.re.kr
information@auri.re.kr

디자인
디자인인트로
02.2285.0789
www.gointro.com

ISSN
2288-2332

〈건축과 도시공간〉은 건축·도시 분야 정책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정책전문지입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습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정책이슈 및 건축도시 동향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투고가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원고가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또한 본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기획에 대한 의견이나 필진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메일을 통해 제안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표지

‘기초(基礎)’는 건축물이나 다리 같은 구조의 무게를 받치기 위하여 만든 밑받침을 의미합니다. 완성된 건축물 외관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저 아래 튼튼하게 다져진 토대 없이는 그 위에 공고한 무언가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건축과 도시공간>에서는 건축의 가치를 발견하고, 고유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차곡차곡 기틀을 마련해 온 10년의 노력을 돌아보고, 이를 든든한 토대로 삼아 건축·도시 분야의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건축정책 10년, auri의 노력과 성과

시론: auri 10년, 건축·도시는 문화가 되다	김대익	006
「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으로 건축정책을 시작하다	김상호	010
건축도시공간 정책을 위한 주춧돌을 마련하다	유광흠	016
좋은 공공건축, 풍요로운 생활공간을 만들다	임유경	020
한옥정책과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를 세우다	신치후	026
공간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다	서수정	032
보행도시, 좁은 길을 걸어오다	오성훈	038
녹색건축, 건축을 넘어 미래를 꿈꾸다	조상규	043
장소 중심 도시재생을 실천하다	박성남	048

auri 개소 10주년 기념 좌담회

auri의 미래는 우리 건축문화의 미래입니다		052
--------------------------	--	-----

통계자료실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심경미	058
---------------------------	-----	-----

건축도시동향

해외동향	미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과 의미	박정호	064
	지역자산을 커뮤니티 소유로, 영국의 지역공동체 입찰권리제도	김건	070
국내동향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과 기대효과	조영진·윤호선	076
해외단신	2017 미스 판 데 로에 유럽 건축상 발표 외		082
국내단신	도시재생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협업체계 구축 외		089

세계의 건축·도시 싱크탱크

공공의 계획역량을 끌어올리는 네덜란드 정주환경연구소	강빛나래	096
------------------------------	------	-----

장소탐방

도심 속 생명력 넘치는 시민공간 - 배곧생명공원	송인선	106
연평도의 삶과 일상이 쌓이는 곳 - 연평 도서관	정이삭	118

auri 소식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134
· '역사도시 유적지 주변의 공공건축, 도전과 과제' 세미나 개최	139
· 2017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개최	140
· 2017년 제1차, 제2차 지식강연회 개최	141
· 2017년 제1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	142
·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143

건축정책 10년, auri의 노력과 성과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다. 그간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면서 질 높은 연구활동과 사업의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축과 도시공간의 발전을 견인해왔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앞으로의 발전과 방향을 모색할 이유는 분명하다.

이번 호 특별기획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0년의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한다.

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개소식

2007. 8. 1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개소식

일시: 2013년 11월 17일 (수) 17:00-20:00 | 장소: 이크로타워 8층 42호



「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으로
건축정책을 시작하다
006

시론: auri 10년, 건축·도시는 문화가 되다 | 건축정책과 auri의 지난 10년은, 건축과 도시공간을
가격(價格)이 아닌 가치(價値)로, 양(量)이 아닌 질(質)로 그 무게 중심을 옮기고, 경제발전에 차치되
었던 우리 건축·도시의 문화(文化)를 다시 만들어가는 여정이었다.

「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으로 건축정책을 시작하다 | 「건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무한한 공공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생활 전반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선진 건축강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건축도시공간 정책을 위한 주춧돌을 마련하다 | 개소 이래 지금까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우리
나라의 건축·도시공간 관련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과 계
획수립 등을 지원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의 건축·도시공간이 보다 살기 좋고 품격 높은
곳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좋은 공공건축, 풍요로운 생활공간을 만든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개소 초기부터 공공건축이
국민의 행복과 도시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
행하였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으로 공공건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한옥정책과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를 세우다 |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자산 관련 정책
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기존의 정책과 사
업시행 그리고 새로운 정책과 사업준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공간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다 | 마스터플랜에 따라 개별 단위사업
과 디자인이 결정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복합 차원에서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자인 거버
넌스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며, 기획단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행도시, 좁은 길을 걸어오다 | 심각한 수준의 우리나라 보행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는 어떠한 크기, 어떠한 측면의 노력과 상상력이 필요한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부단한 지적 노력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녹색건축, 건축을 넘어 미래를 꿈꾸다 | 녹색건축은 지구 생태계나 인류의 생존이라는 거창한 목표
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건축물의 디자인과 설계·시공·운영의 전 과정에서 녹색건축을 구현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며, 미래 건축에 있어서는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 중심 도시재생을 실천하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앞으로도 한국형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정책의 발전과 실현을 위해 장기적 비전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도시
재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세밀한 지역 맞춤형 시책들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시론:
auri 10년,
건축·도시는 문화가 되다
006

「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으로
건축정책을 시작하다
010

건축도시공간 정책을 위한
주춧돌을 마련하다
016

좋은 공공건축,
풍요로운
생활공간을 만든다
020

한옥정책과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를 세우다
026

공간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다
032

보행도시,
좁은 길을 걸어오다
038

녹색건축, 건축을 넘어
미래를 꿈꾸다
043

장소 중심 도시재생을
실천하다
048

auri 10년, 건축·도시는 문화가 되다

김대익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건축정책과 auri의 지난 10년

2017년은 대한민국 건축계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 삶의 질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건축정책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며, 3년마다 열리는 건축분야의 국제올림픽격인 UIA 세계건축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또한 올해로 창립한 지 꼭 10년이 되는 auri가 앞선 건축계의 기념비적 행렬의 앞과 뒤에서 발을 맞추고 있다. 특히 건축정책과 auri의 지난 10년은, 건축과 도시공간을 가격(價格)이 아닌 가치(價値)로, 양(量)이 아닌 질(質)로 그 무게 중심을 옮기고, 경제발전에 차치되었던 우리 건축·도시의 문화(文化)를 다시 만들어가는 여정이었다.

「건축기본법」을 시작으로, 민간과 시장에만 맡겨왔던 건축을 공공성의 영역에서 바라보기 시작했고,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다룰 정책과 이를 작동하게 할 시스템들이 구축되었다. 그 정책의 그림은 ‘건축정책기본계획’으로 수립·시행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3.2.)」, 노후한 기성 시가지에 대한 개발 보다는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6.)」, 건축자산의 보

존과 활용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4.6.)」, 건축 문화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013.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5.)」 등 신규 법률이 제정되고,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건축법」과 「경관법」(2013.8.)이 개정되는 등 정책 목표에 따른 체계적 제도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건축정책을 실행하고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 선도의 다양한 시범사업들도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auri는 관련 연구를 통해 법률 제정과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국가한옥센터·도시재생지원기구 등의 조직을 통해서 각종 사업과 포럼·서적 발간·교육 등을 실시하고 건축정책을 지원하며 숨 가쁘게 달려 왔다. 좋은 건축과 도시공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계, 산업계, 국민들 사이에서 때로는 싱크탱크이자 코디네이터로, 또는 서포터즈임을 자임해 왔다고 하겠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개소식(2007)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좁은 골목길에 마주한 낡은 단독주택은 재개발 대상이고 곧게 뻗은 신작로 주변에 새로 생긴 높은 아파트가 그 도시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택’을 단지 투자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작고 재산가치가 적더라도 각자의 다양한 삶을 담을 수 있는 협소주택, 전원주택, ‘한옥’ 등의 내 집 짓기가 부러움의 대상되고 있다. 또한 구시가지, 공장지대, 달동네였던 서울의 북촌, 경리단길, 성수동, 부산의 감천마을처럼 손때 묻은 도시의 시간과 흔적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가치로 이끌어내는 ‘삶의 공간’들이 각광받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건축자산’은 사찰과 궁전 등 종교와 정치 지도계급의 유산들이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이제 인천과 군산의 근대건축 유산이나 전주 한옥마을의 생활형 한옥군이 우리의 삶터이자 건축문화유산으로 재평가받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은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생소한 단어였지만, 체육·문화 시설의 서비스가 공간복지의 척도가 되고 녹음(綠陰)이 푸르른 집 근처 공원이 주거환경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아울러 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져 ‘녹색건축물’ 조성의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 건축물과 관련해서도 철거보다는 필요와 기호 맞게 고쳐서 사는 일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크게 증대하였다.

요컨대 내가 사는 집과 일터, 동네, 도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직접 공간만들기에 동참하면서, 전문가들이 쓰던 ‘주거’, ‘한옥’, ‘공공건축’, ‘녹색건축’, ‘도시재생’ 등의 용어들이 일상어가 될 만큼 시민의 지식과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이제 건축과 도시공간이 주변인의 삶과 사회를 관통하는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대응하고 선도해 온 건축정책의 방향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실현한 것은 도시건축 공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논의의 흐름을 바꾸고자 하는 auri를 비롯한 각계의 다양한 노력과 그 노력들에 부응해 온 시민이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어떤 것이 좋은 건축, 아름다운 도시인가에 대한 합의 없이 공급과 생산에만 치중했던 건설과 개발의 시대를 지나고, 좋은 건축과 도시공간의 가치를 함께 탐구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특히 지난 10년의 건축정책과 공간의 변화를 경험한 우리가 만드는 다음의 10년과 미래의 건축 및 도시공간은 더욱 진일보할 것이라는 확신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빈집 등 도시쇠퇴 문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기술 발달에 의한 미래 공간구조의 재편 등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건축·도시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산으로서 공간을 대하는 책임 또한 더욱 무거워졌다.

이에 국민이 매일 생활하고 일하는 공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시스템의 철학을 주도하는 건축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auri의 소명도 결코 가볍지 않다. 현재의 소임은 일상공간을 개선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체계를 개선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건축정책과 건축도시디자인 체계 정비를 통해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지원하는 일이다. 특히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인 ‘도시재생’의 추진에 있어서도, 쇠퇴된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만의 주민과 건축, 도시공간의 특성과 문화에 맞게 풀어서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어내는 데 주요한 조력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위한 사회적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건축도시공간 정책의 지적 토대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실현 가능한 건축도시공간사업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10년도 auri가 건축도시공간연구의 선도자로서 참여주체들의 창조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적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확산하는 보고(寶庫)이자 촉매(觸媒)로서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으로 건축정책을 시작하다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획조정실장

건축정책의 기본 틀, 「건축기본법」의 제정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과 사회적 공공성 확보, 문화적 공공성 실현이라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건축기본법」이 제정된 지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건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급속한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 체제하에서 철저히 민간의 영역으로, 개인의 욕망과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던 우리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무한한 공공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생활 전반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건축기본법」에서는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와 같이 건축정책을 국가적 정책의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이나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시행, 민간전문가 참여 및 설계공모 활성화 등 다양한 건축문화 진흥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양한 건축정책을 심의하고 국가적인 정책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다. 최근에는 「건축법」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2015.8.11.),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였다.

건축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정비

「건축기본법」이 시행된 이후로 건축 관련 정책의 수립과 이를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이 제정 혹은 정비되었는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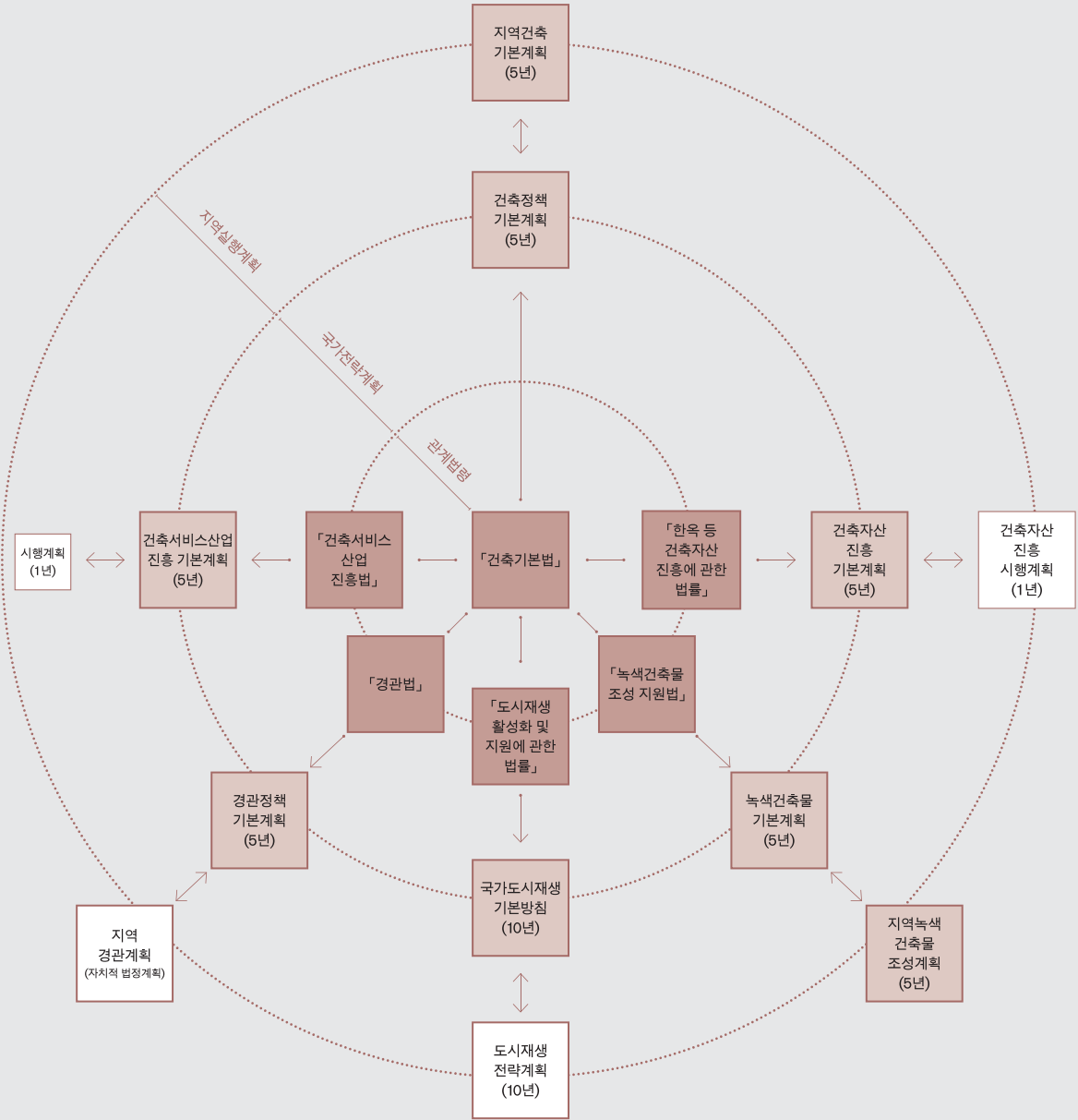
「건축기본법」 개요

목적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 이바지를 목적으로 제정(2007.12)		
기본 방향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주요 내용	건축정책의 수립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건축문화의 진흥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민간전문가의 참여 / 설계공모의 시행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건축정책 국회보고 / 건축 기본조사 지역건축위원회 구성·운영	한국건축규정의 운용 한국건축규정의 공고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이를 통해 건축정책을 필두로 건축·도시 분야 연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틀이 갖춰지게 되었으며 현재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계획, 건축자산 진흥기본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경관기본계획 등이 수립 또는 시행 중이다. 또한 제도의 틀 속에서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공공건축지원센터, 녹색건축센터, 국가한옥센터, 도시재생지원기구 등 건축정책 지원 전담기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건축정책 관련 법령 및 계획 간의 상관관계

- 법정 의무계획
- 지자체 법정계획(의무X)



출처: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재구성

건축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중장기 로드맵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가계획인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인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으로 위계가 설정되어 있다. 국가가 추진하는 중장기 건축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수립권자이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시행이 이루어진다.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국가계획의 틀 안에서 지역의 건축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역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광역건축기본계획은 시·도지사사가 그 수립권자로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에 해당하며, 기초건축기본계획은 기초단체장이 지역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은 현재 2차 계획이 시행 중이며, 광역건축기본계획은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수립 시기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17년 현재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1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경기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1차 계획의 시행이 완료된 시점으로 현재 2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은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를 비전으로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 분야 녹색성장 기반 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환경디자인 향상’, ‘건축·도시 환경개선’, ‘녹색 건축·도시 구현’,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여섯가지 전략과 이를 구체화한 18개 실천과제(세부 실천과제는 113개)로 이루어졌다. 계획의 성과에 대해서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2년 단위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113개 세부 실천과제 중 108개 과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이룩한 대표적 성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3.2.) 제정 등 관련 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한 것과 함께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54건),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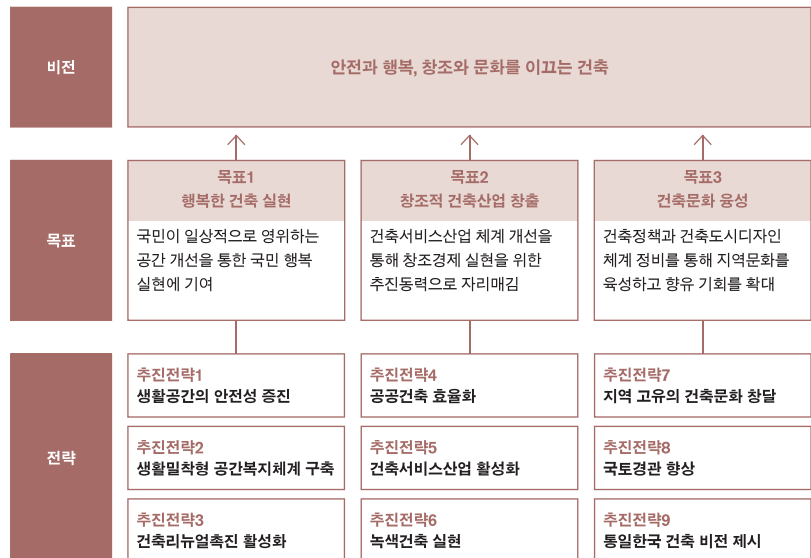
재생 선도사업(13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38건) 등 국가적 차원에서 선도·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건축제도를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리뉴얼(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로 개편한 것과 더불어 건축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자체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폐지한 것(1,171개 숨은 규제 중 1,139개 폐지)도 중요한 성과로 들 수 있다.

나아가 국민들의 일상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제도를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층간소음 방지 기준(2015.5.), 실내건축 기준(2015.10.), 범죄예방 설계 기준(2015.4.),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2015.12.) 등 각종 건축기준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다.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2020)은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을 비전으로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체계 구축’, ‘건축 리뉴얼 촉진 활성화’, ‘공공건축 효율화’, ‘건축 서비스산업 활성화’, ‘녹색건축 구현’,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국토경관 향상’, ‘통일한국 건축비전 제시’를 9대 전략으로 제시하고, 24개 실천과제를 설정하였다.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행을 통한 정부 정책 지원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행 과정에서는 지난 제1차 계획을 통해 달성한 건축도시 관련 정책에 관한 정부 부문에서의 기반구축 성과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017년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축도시 관련 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건축도시 분야에서는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방식을 탈피한 지역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나 다양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의 실현, 어린이·노약자 등과 관련한 전 생애 단계에서의 차별 없는 공간복지 실현 등이 화두가 되고 있다.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선진 건축강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건축도시공간 정책을 위한 주춧돌을 마련하다

유광홍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간문화연구본부장

건축 관련 법제의 방향성 정립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개소 이래 우리나라 건축·도시공간의 변화를 이끈 많은 정책대안을 마련해 왔다. 일반적으로 정책대안은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해 채택 가능한 여러 정책안을 말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은 해결해야 하는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제약 등을 종합하여 정책목표를 세우고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집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수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치나 기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실행수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합하여 부르는 말이다. 따라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률과 관련 하위규범을 제정 또는 정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고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제정된 법은 활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한 조문을 통해 실효성을 획득하게 되며, 건축 관련 법령은 사회변화나 기술발전과 같은 시대흐름을 반영함으로써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게 된다.

2007년 연구소 개소 당시 건축 관련 법률은 「건축법」과 「건축사법」이 건축 관련 법과 제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축 관련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건축법」은 1934년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근거하고, 1962년 제정된 이래 부분개정이 누적된 대표적 구시대 체계의 법률이었다. 1963년 제정된 「건축사법」 또한 건축사 자격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제한적 범위를 규율하고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전반적으로 건축 관련 법제는 복잡한 입법체계와 범규범으로서의 방향이 모호하고, 법집행자가 운용하는 데도 혼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었다. 또한 관련 법령들과의 체계적 통일성이나 상호연관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점증적으로 누적되어 복잡하고 별개적이며, 정합성이나 상호연관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와 여건변화에 따른 건축 관련 법제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었다. 그리고 성장지상주의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로 전환되어 쾌적한 건축·도시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었고, 물리적 환경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로 인해 대량공급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탈피한 새로운 건축정책의 방향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 전환 요구는 2008년 시행된 「건축기본법」에 의해 건축문화의 진흥과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에 대한 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건축 관련 정책의 수단으로서 법제의 체계적 정비에 대한 필요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다.

2007 「건축기본법」

- 2016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전라남도)
- 2015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국토교통부)
- 2015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
- 201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세종특별자치시)
- 2014 충청남도 건축관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충청남도)
- 2013 국가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전방안 연구
- 2012 건축도시디자인 및 경관 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국토교통부, 매년)
- 2012 건축정책 성과보고서 작성 연구(국토교통부)
- 2012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전라북도)
- 2011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경기도)
- 2009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전략과 추진과제 연구(국토교통부)
- 2009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관리운영(국토교통부, 매년)
- 2009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국토교통부)

20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2014 용도지역제도를 고려한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책 연구
- 2014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 201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연구
- 201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연구(국토교통부)
- 2011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방안 연구

2014 「경관법」

- 2014 경관 정책 기본 계획 수립 및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연구(국토교통부)
- 2012 건축·도시 디자인 및 경관 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국토교통부)
- 2009 경관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201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2015 건축사 역량 강화 및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마련 연구
- 2013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연구
- 2013 국가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전방안 연구
- 201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2)
- 201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 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국가건축정책위원회)
- 201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1)
- 2010 건축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연구
- 2010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프로세스 개선 및 이미지 효율 제고 방안(국토교통부)
- 2010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교육 선진화 방안(국토교통부)

201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015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을 위한 주요 쟁점 분석
- 201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마련 연구(국토교통부)
- 2014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
- 2013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 2013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 2012 지역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기반 마련 연구(국토교통부)
- 2012 한옥 등 건축자산의 관리 및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지원 연구

20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15 도시재생사업 종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국토교통부)
- 2015 도시재생 사업 지원 및 관리 등을 위한 연구(국토교통부)
- 2015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2014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을 위한 용역(국토교통부)
- 2014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사례 및 중장기 운영방안
- 2013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례 연구

건축·도시 관련 법적 기반 구축과 지자체의 계획 수립 지원

그동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건축 전반의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기반하여 유효하고 실질적인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제반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건축·도시공간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법령의 제·개정 및 세부 시행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건축기본법」을 시작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적 기반 마련은 물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건축·도시공간 관련 국가기본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개소 이래 지금까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축·도시공간의 가치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립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나라의 건축·도시공간 관련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과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여 왔다. 이러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건축·도시공간이 보다 살기 좋고 품격 높은 곳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유광흠·진현영(2010), 「건축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 유광흠 외(2012), 「지역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기반 마련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좋은 공공건축, 풍요로운 생활공간을 만들다

임유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에 주목하다

지난 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 날 오후에 서울 은평구의 구산동도서관마을에 들렀다. 도서관은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동네 주민들로 북적였다.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책을 보고 신문을 보거나 야외 마당에서 여름 햇살을 즐기는 등 도서관 구석구석에서는 주민과 아이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구산동도서관마을은 기존 골목과 주택을 도서관으로 개조한 프로젝트인데 골목과 주택의 앞마당, 다세대 주택 안의 아기자기한 공간들이 그대로 남아 숨 쉬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도서관 하나가 주민의 일상과 동네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다양한 공공건축물이 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학교, 어른들이 행정 업무를 보고 때로는 취미 활동을 하는 주민 센터와 복지관, 책을 읽고 빌리는 도서관,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화의 집, 이 모든 건축물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공공건축물은 이렇듯 도시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자 우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학문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공공시설의 적정 공급을 위한 방법론 연구가 이루어졌고 건축 분야에서는 공공청사와 학교·박물관 등 시설별 건축계획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공공건축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환



구산동도서관마을 전경



구산동도서관마을 내부

경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바라보고 직접적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부족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07년 개소 초기부터 공공건축이 국민의 행복과 도시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공공건축 통합화, 디자인품질지표, 공공건축 조성 절차 합리화, 건축디자인 기준, 시설별 공급기준과 계획기준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다섯 차례의 공공건축 설계포럼을 열어 설계자와 발주자,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는 공공건축의 중요성과 품질 향상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의 탄생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다수의 연구와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현황을 진단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공공건축 기획이 부실하고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한 문제, 가격 입찰 방식으로 설계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디자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공건축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자 요구와 장소 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미비하고 전문가 또한 부족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건축 조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세계 주요 국가는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조직을 운영한다. 미국 연방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의 공공건축서비스(Public Buildings Service: PBS), 영국의 ‘건축·건조환경위원회(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CABE, 이후 Design Council에 통합)’, 프랑스의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다부처위원회(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Qualité des Constructions Publiques: MIQCP)’가 대표적 사례이다.

2010년 11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건축 총괄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주요 골자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협동으로 2011부터 2년에 걸쳐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원기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1차연구도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2011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2013년 1월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을 일반사업으로 편성하여 공공건축 통합계획 수립 지원, 설계공모 대행, 공공건축 기획업무 지원 등 다수의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개소식(2013)

터 설립을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이루어졌고, 2014년 초에는 연구소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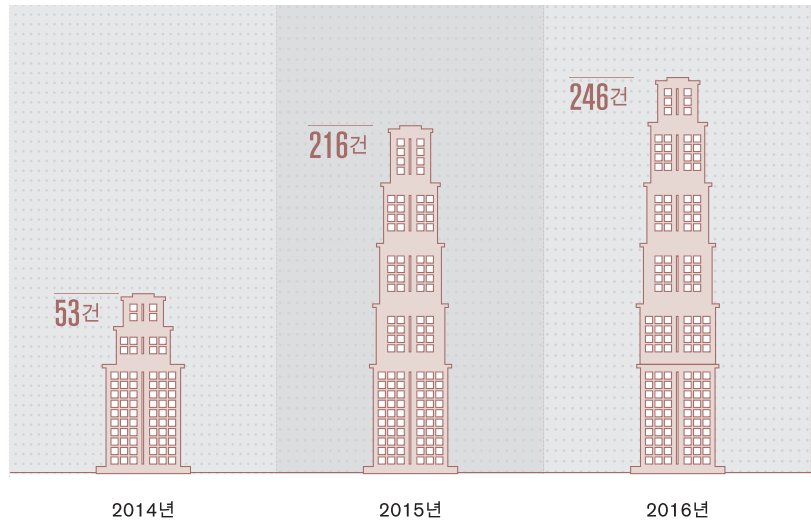
2013년 6월에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조항이 포함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 6월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중앙건축위원회 심의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보고를 거쳐 6월 23일에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법정 센터로 지정받게 되었다.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와 성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공공건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공공건축에 대한 디자인 관리 체계 개선, 매뉴얼 개발, 제도 개선 연구 등 공공건축의 조성에 필요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법정 업무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자문에 대한 응답,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로 구성된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는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일이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의 주안점을 확인한다. 2014년 6월 법정업무를 시작하여 2014년 53건, 2015년 216건, 2016년 246건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는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의 발주와 기획, 디자인 관리,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공공건축 조성 전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이러한 자문 업무는 매월 약 30건정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은 연 1~2차례 공공건축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월 평균 업무 건수는 2014년 7.4건, 2015년 18.0건, 2016년 20.4건, 2017년 상반기 25.0건이다.



시한다.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공공건축의 합리적인 조성과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건축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며, 현재 지적기반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전검토와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법정업무 외에도 지원업무와 연구를 수행한다. 지원업무에는 개별 부처의 공공건축 기획 지원, 지자체의 공공건축 통합계획 수립, 제안공모 또는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의 공모 대행,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업무가 포함되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외교부·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와 강릉시·익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 조성 업무를 지원하였다. 모두가 공감하는 공공건축의 지향점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 역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중요한 업무이다.

2016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한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6%가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사업 추진의 예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각종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명시된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절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

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공건축 정책 확산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새로운 역할

연구소 개소 이후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2007년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건축의 공공성이 천명되었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공공건축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 서울시에서는 총괄건축가를 선임하고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공건축의 새로운 실험을 이어가고 있고, 충청남도는 ‘충남 공공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공공시설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 부산시, 경북 영주시 등 여러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공공건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고 공공건축 질적 향상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역시 변화해야 한다. 우선 좋은 공공건축의 지향점과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보다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지원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 기준과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가 중심이 되고 장소 특성을 반영한 공공건축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 기준과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 지자체의 관련 조직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하여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축적하고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여 공유하고 전파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서수정 외(2011),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 서수정 외(2012),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16),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및 개선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옥정책과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를 세우다

신치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장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서 한옥의 등장

최근에 각종 보도 매체와 방송을 통하여 한옥과 한옥마을에 대한 소식이 자주 등장한다. 양옥이라는 주거 유형에 자리를 내어주고, 문화재 중심의 보존 대상이었던 한옥을 이제는 체험과 거주를 위한 대상으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한옥 주택용지를 분양한 경상북도 청도청 이전 신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나타난 높은 분양률은 한옥마을에 대한 국민들의 고조된 관심을 잘 보여준다.

2008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중심의 주택 보급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일관된 고층 주거의 공급으로 인한 과밀화된 도시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민들의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이 커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른 은퇴 인구 증가, 최근의 전세난,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라 국민들의 주거문화 패러다임이 아파트 중심에서 다양한 주거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인문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과 함께 참살이(well-being)나 치유(heal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이러한 배경에서 고조되었으며, 높아진 관심을 실제 살기 위한 건축으로 연결하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한옥 진흥 정책의 전개와 국가한옥센터의 탄생

범정부적 한옥관련 정책의 시작은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2007~2011)’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며 생활화·산업화·세계화가 가능한 한글·한식·한복·한옥·한지·한국음악(국악)을 선정하여 보존 및 연구지원,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분야별 대표 브랜드 육성, 한류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 등을 추진하였다. 한옥 분야는 전통 한옥건축의 보전·관리 및 활용, 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한국식 정원모델 개발,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한옥건축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공공시설 한옥디자인 보급 확대라는 다섯 가지 과제를 수행하였다.

‘국격 향상을 위한 신(新)한옥플랜(2010~2014)’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산림청이 주축이 되어 ‘2020년 한옥 르네상스 시대 실현’이라는 비전과 한옥을 보급·확산하고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여 국가 품격을 제고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옥보급 확산, 한옥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화, 한옥의 보전관리, 한옥의 적극적 활용 등 네가지 부문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현대생활에 적합하도록 한옥의 기술을 혁신하고 건축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한옥기술개발 R&D 연구사업’ 등 한옥정책 실천방안이 이때 마련되었다.

본 계획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 2011년 ‘국가한옥센터’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설립하였으며,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국가한옥센터 개소식(2011)

국가한옥센터의 역할과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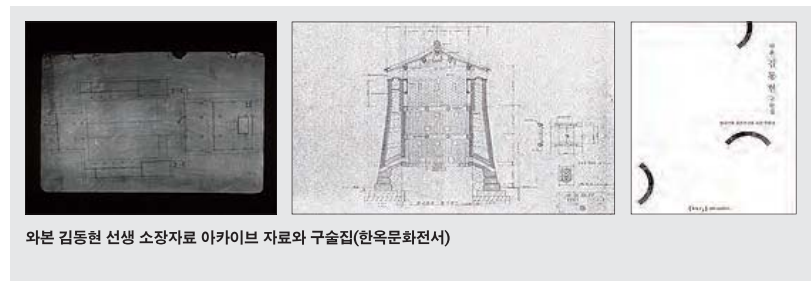
국가한옥센터에서는 ①한옥정책 지원 ②한옥문화 보전 ③한옥산업 진흥 ④한옥조사정보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와 조사를 진행하였다.

우선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옥 진흥정책 기반 조성’ 단계로 정책기반, 산업기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된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단계의 성과로는 관련 연구조사와 더불어 「한옥등건축자산법」 제정을 지원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북 전주시, 경북 영주시, 안동시, 경주시, 김천시, 고령군, 성주군 등 전국 10개 광역·기초지자체 한옥 기초통계 조사자료를 구축하였다. 국가한옥포털을 운영하여 한옥 기초 통계 자료를 포함한 한옥관련 정보들을 집대성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매년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여 한옥포럼을 열기도 하였다. 이 밖에 다양한 콘텐츠의 단행본과 동영상 등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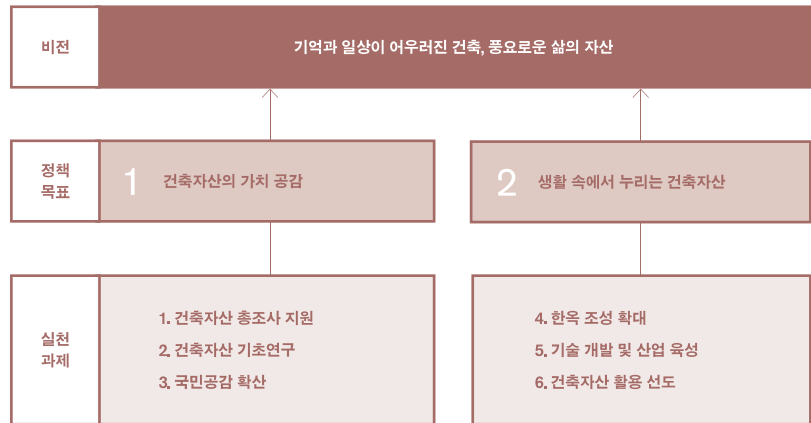
한옥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한옥센터의 주요 활동



전통건축자료 아카이브 및 구축 및 한옥문화전시 발간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아울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관·산·연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시범적으로 서울한옥지원센터 내에서 관계 공무원, 국가한옥센터 서울연구팀, 한옥 장인 등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옥관련 현장밀착형 연구 조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서울 우수한옥·한옥인 인증제’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경주 지진피해 한옥에 대한 전수 조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였다.

한옥 진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모여져 2015년 6월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국토의 품격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자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기존의 정책과 사업시행 그리고 새로운 정책과 사업준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지자체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관련 사업들이 활발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를 창출하고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법의 시행이 지자체의 건축문화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한옥센터의 개소와 범정부적 한옥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통하여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신축 한옥은 6,133채로서 매년 평균 1,533채가 신축되었으며 약 3,000억 원이던 시장이 약 5,000억 원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이 기간 중 용도별 한옥의 특성은 근린생활시설이 43%, 주택이 36% 정도로 분포하며 펜션(한옥숙박체험)·카페·음식점 등으로 한옥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 한옥 활용을 위한 사업들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옥건축 시장의 규모는 여전히 적은 편이고 신축시장보다 증개축 시장이 더 큰 상황이지만, 경제상황과 기타 외부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는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보다 규모로서의 경제로 키우기 위한 정책과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며 한옥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이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옥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2016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공간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다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연구본부장

장소만들기와 건축디자인기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설립되던 2007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디자인정책을 시행하던 시기였다. 지역마다 가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간판정비사업이 추진되었고 마을만들기와 함께 벽화그리기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공공디자인의 이름으로 루미나리에 설치, 가로등과 벤치, 키오스크 등 가로시설물 디자인도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지역의 장소가 갖는 문화와 역사적 이야기를 담아 내지 못하고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시각적 효과에 집중하였다는 비판도 많았다.

「건축기본법」 제21조의 ‘건축디자인기준’은 이처럼 일회적이고 키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정책사업을 ‘지역특성이 살아 있는 좋은 장소 만들기’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소만들기를 위한 통합적인 공간계획’을 실현하는 과정과 원칙을 담고 있다.*

통합적인 공간계획이란 첫째, 다양한 분야 간 협력적 계획을 의미한다. 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과 관련한 건축·토목·전기·기계·공공

* 당시 연구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디자인기준 작성을 의뢰받았을 때, 건축디자인기준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행정담당자와 연구진·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많았다. 개별 건축물에 대한 형태와 색채, 디자인 수준까지 담아야 한다는 행정 측의 요구에 해의 선례를 살피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수차례 토론을 거친 결과 건축디자인기준은 ‘디자인 과정에서 참여주체가 지켜야 할 원칙과 디자인 프로세스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디자인 등 각 분야가 분업하여 작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장소단위에서 건축물과 공공공간, 가로시설물이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와 시공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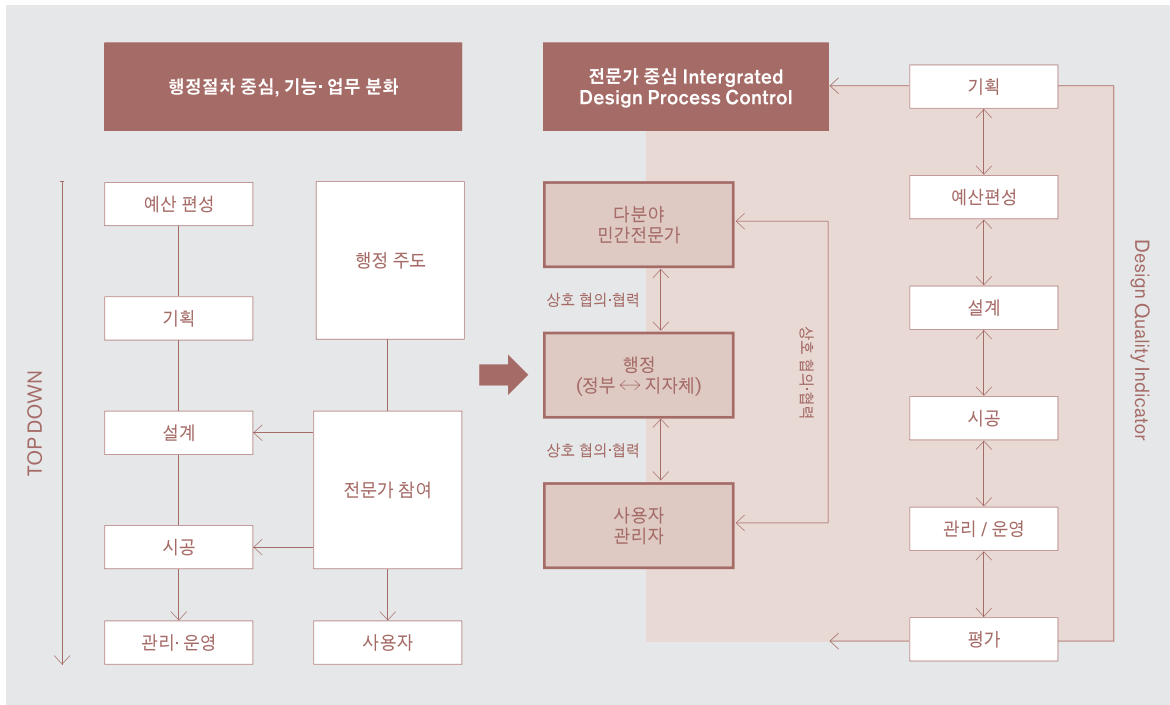
둘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문·지리적 특성, 역사·문화적 환경 여건,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고려하여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셋째는 부서 간 협치행정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부서가 시행하는 사업을 장소에 따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기도 하고,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공간계획이란 ‘기획-계획 및 설계-시공-유지·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를 디자인 가치 중심으로 전 단계를 연계하고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통합적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건축디자인기준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디자인 거버넌스 방안을 담고 있다. 장소만들기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좋은 디자인(good design)’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성과 사유재산권리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에 건축디자인기준에서는 행정, 건축가, 주민, 토지주와 건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 형성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기능과 조정권한을 갖는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거버넌스의 핵심은 개별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획-계획 및 설계-시공-유지·관리’로 이뤄지는 건축디자인기준의 각 과정을 ‘행정 중심의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디자인 가치 중심의 디자인 프로세스’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초기 기획단계의 디자인 원칙과 방향이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단계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전문가·행정담당자·사용자·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설계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시공단계에서는 시공의 편의성과 재료 선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설계안이 변경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사후감리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디자인 거버넌스와 장소만들기를 목적으로 한 건축디자인기준은 2008년 국토교통부장관 방침으로 고시되었다.



건축디자인기준의 실현, 통합마스터플랜과 건축디자인사업으로 시작

건축디자인기준 수립 이후 연구소는 건축디자인기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서 영주시 공공건축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공공건축 통합마스터플랜은 영주시에 산재해 있는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을 ‘지역활성화를 위한 촉매 요소’로 보고 잠재자원과 버려진 공간을 찾아내 거점장소를 만드는 과정을 담아냈다. 특히 도시 쇠퇴 과정에서 빈 점포가 늘어나 시장 기능을 상실한 전통시장, 철도하부 공간과 공공건축물의 마당,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는 의회 창고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장소 간 연계와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영주시는 공공건축 통합마스터플랜을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로서 디자인관리단장을 위촉하였고, 전담행정조직으로 디자인관리단이 설치되었다. 특히 디자인관리단장은 인구 10만 명인 소도시 영주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부서별 사업을 장소중심으로 집중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을 연계하도록 부서 간 협업을 유도하고 개별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후 영주시는 디자인관리단장을 중심으로 3명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디자인단장을 도와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코디네이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영주시는 공공건축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에 근거하여 장소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시장활성화사업 등의 국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개별의회 빈 건물을 리모델링한 비보잉센터, 음식문화체험관, 노인복지관 조성 사업 등 개별 단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건축국가제도를 활용하여 기획업무를 강화하고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확대하는 등 디자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근대건축물 경관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디자인단장의 조정하에 도로과에서 실시하는 상하수도 설치와 도로정비사업의 착공시기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주시는 공공건축 통합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이나 주체 간 의사결정 과정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일례로 도립도서관과 이웃하고 있는 세무서 마당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세무서와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업무협의를 수행하였으나 세무서의 반대로 도립도서관 마당만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디자인을 유도하는 것만큼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 간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부서 간 협업이 여전히 쉽지 않았다. 동일 대상지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2개 과가 계획안을 작성하기도 하고 사업부서와 건축물의 운영관리 부서가 분리되어 있어 실제 운영을 고려한 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건축디자인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소위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이라는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건축디자인시범사업이었다. 건축디자인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공모 과정을 거쳐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계획수립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수립 이후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비용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건축디자인시범사업은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건축디자인시범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추진협의회는 계획 과정을 총



민간전문가 지원 시범사업 워크숍

괄·조정하는 디자인총괄계획가와 실무팀을 비롯하여 담당공무원, 관련 기관담당자, 주민대표, 지역시민단체, 지역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행정주도의 디자인 관리업무를 ‘디자인전문가 중심-행정지원’ 구도로 전환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총괄·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디자인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디자인총괄계획가 중심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될 경우 사람에 따라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지역별로 기획단계와 마스터플랜 수립단계에서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디자인검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디자인검토위원회의 또 다른 목적은 지자체 공공사업에서 기획업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예산확보 때 간단한 계획서 한 장으로 끝났던 기획단계를 디자인 검토과정을 거쳐 별도의 업무단위로 구분하였다. 기획업무는 디자인총괄계획가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의 대상이나 범위 및 참여주체별 세부역할 등 명확한 과업범위를 설정하고, 경제적 측면과 공공적 측면에서 면밀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물리적 계획 방향뿐 아니라 지역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획업무는 국비지원사업에서 공모 방식이 확대되면서 ‘사업구상서’라는 형태로 보편화되었다.

건축디자인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건축디자인시범사업은 2009년 제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42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다.

디자인 거버넌스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

건축디자인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단위로 시행하는 디자인 거버넌스 체계를 확장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디자인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민간전문가 파견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민간전문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디자인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민간전문가 시범사업 대상인 부여군의 경우 문화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부여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대상지에서 도시재생팀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도시디자인팀의 경관계획 수립과 간판정비사업, 경제과의 야간조명사업을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가장 우선 검토해야 할 고도보존기본계획의 구역지정 결과를 받아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고도보존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간판정비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빈집활용사업 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칫 계획안으로 끝날 수 있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었고, 일회적인 사업으로 끝날 수 있던 간판정비사업이나 야간조명사업은 장소의 디자인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현재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중소도시는 기획능력과 코디네이션 기능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하여 대도시나 수도권외의 전문가가 파견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밀착형 디자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용도와 기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공유경제에 기반한 물리적 공간계획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처럼 물건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물건과 담겨야 할 프로그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스터플랜에 따라 개별 단위사업과 디자인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복합 차원에서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자인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며, 기획단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디자인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운영한 10년 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장소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디자인 거버넌스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행도시, 좁은 길을 걸어오다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연구본부장

보행환경연구의 시작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보행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2009년 기본 과제로 수행한 ‘보행환경 다면평가시스템 구축 연구’가 처음이었다. 이 연구는 보행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행환경과 관련한 종합적 이해가 부족하고, 과학적 기반에 근거하는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에 대해 학술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보행환경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 행태적인 현상에 대한 측정과 해석, 그리고 주관적인 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 등 세 가지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이 초기 연구의 가장 일반적인 합의였다. 그러한 방향성에 따라서 추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보행연구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 연구소의 계속사업으로 발굴·선정되어 시행된 보행환경 평가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은 ‘보행환경에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좋은 보행환경을 구현하는 데 요구되는 필요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종합화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수천 건에 이르는 광범위한 문건을 수집·분류·탐색·정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보행환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요인들을 12가지로 정리하여 ‘보행도시: 좋은 보행환경의 12가지 조

건'으로 2011년 말일자로 발간하게 되었다. 처음 기획할 당시에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기획단계부터 거의 3년 여의 시간이 소요되고서야 완성되었다. 선행연구를 집대성하는 과정에서 시작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보행사업 연구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예상보다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던 것이다.

행태 기반의 실증적 접근으로서의 보행연구

이러한 이론적 탐구의 역정과 병행하여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어 시행해 온 것은 행태적 현상에 대한 측정과 해석이다.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만으로는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재현가능하고 반증가능한 근거를 생산하는 기술적 측면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게 되었다.

보행 행태 조사를 위해 윌리엄 화이트(William Whyte)나 얀겔(Jan Gehl) 등 기존의 보행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된 동영상 촬영기법을 참고하여 다양한 촬영장비와 방법론을 적용·시도하였으며, 조사원의 수작업에 기반한 단순계수부터 GPS트래커와 스마트폰, 나아가 영상해석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법을 비교·분석·실험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보행량 데이터, 지속적인 현장조사 및 분석기법에 대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반복해 왔다. 그러한 시행착오 속에서 관련기술들의 기술적 한계를 확인하면서 현 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 수준을 잠정적으로 정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보행환경 조사분석 매뉴얼'로 2013년에 발간하였다. 이 매뉴얼은 보행사업에 적용되던 매우 구체적인 분석기법을 단계별로 수록하여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지는 않는다.

표준화를 위한 우리의 방법론적 고민은 현실 속의 대상지들에 대한 주기적인 답사와 분석활동을 통해 검토·반추되었다. 서울 주요 상업지역 4곳, 주요한 지방도시 10개의 상업지역 대상지에 대한 답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보행량, 보행밀도, 보행속도, 보행쾌적, 가로활동빈도 등 표

준화된 조사·분석 방식을 보정해 갔으며, 그 결과를 각각 ‘보행환경과 행태: 조사분석 보고서’의 이름으로 2013년과 2014년에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대상지는 매우 한정적이었으나, 개별적인 답사 과정에서는 실제 보고서에 담긴 것 외에도 많은 작업과 고민이 이루어졌으며, 보행행태 분석에 대한 지식축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버려진 이면도로에 대한 긴급처방: 보행자우선도로

우리는 보행환경 일반에 대한 행태평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리적 개선을 위해 가능한 설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작업과 병행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사례분석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함의가 큰 사례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조사와 답사·분석을 통해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데이터, 계획과 예산, 평가까지 포함하는 설계를 위한 참고서적을 기획하였다. 그 결과가 2013년에 발간된 ‘도시설계를 위한 도시설계 1권’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행환경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차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의 대안으로 이른바 공유도로(Shared Street)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고, 그 성과와 한계를 공간적인 데이터를 포함하여 분석해 제시하였다.

공유도로에 대한 이러한 연구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의 도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연구성과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대상지

좌 용산구 녹사평대로

우 강동구 양재대로



유도로 개념으로 보행자우선도로가 2012년에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는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물리적 평가, 행태적 평가, 인지적 평가를 시행하여 이후의 시범사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보고서를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설계과정과 평가과정에 주도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18곳에 이르는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확대·보급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보행자우선도로의 설계에 대한 연구와 수반하여 법적인 정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는데, 그 내용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개선연구’와 ‘보행자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담아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발간하였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를 설치하기에는 너무 좁은 국내 이면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마지막 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법의 전 사회적 확대를 위해 법적인 측면, 설계적인 측면, 시공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어렵고 돈 안되는 보행정책의 가능성

우리나라의 보행정책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보행테마파크 또는 차량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되는 틈새시장으로서만 그 명맥을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보행자 교통사고 1·2위를 다투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특히 횡단보도나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희생자의 상당수는 어린이와 노인이다. 그들은 의사결정자가 아니기에, 가족과 이별당하는 무서운 제비뽑기를 매일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보행환경의 개선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가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활력과 장소성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현실적인 보행환경의 열악함은 그러한 노력에 냉소를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생존을 다투는 이들 앞에서 매력과 장소성을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다.

그러나 보행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보행정책 성과평가체계 개발연구’를 2016년에 시범적으로 간행하였고, 공공 분야의 보행정책에 대한 진지한 평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적인 가로의 개선대안을 마련하고 보급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할 때 당면하게 되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전형적인 문제상황에 대한 개선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보행자 사고가 집중되는 횡단보도와 이면도로에 대한 고민 역시 지속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로다이어트 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행관련 사업의 총량은 아주 미미하고 그 내용은 너무도 피상적이다. 심각한 수준의 우리나라 보행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크기, 어떠한 측면의 노력과 상상력이 필요한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부단한 지적 노력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우리 사회에서 보행환경이 가지는 의미는 아직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걷기 좋은 도시는 안전하고 쾌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마지 않는 문화적으로 활기차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매력적인 미래의 도시다.

녹색건축, 건축을 넘어 미래를 꿈꾸다

조상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미래 건축의 필수 조건, 녹색건축

건축물은 1차적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환경 조절체의 기능을 수행한다. 건축물의 환경 조절 기능은 냉난방·조명·환기를 말하며,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2030년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약 8억 5,100만 톤이며, 이 중 건물 부문의 배출 전망치는 1억 9,720만 톤으로 전체의 약 23.2%를 차지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과제이다.

녹색건축은 지구 생태계나 인류의 생존이라는 거창한 목표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모두가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선택할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이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은 환경 조절 성능과 직결된 것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은 재실자의 건강과 쾌적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녹색건축을 통한 에너지 비용의 절감은 건설비용 증가를 충분히 상쇄한다. 녹색건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며, 미래 건축의 필수 조건이다.

* 환경부(2016.12.),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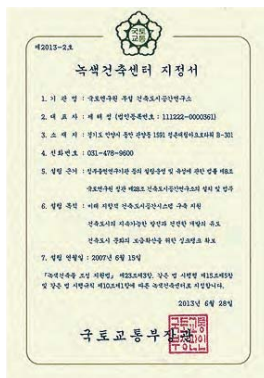
국가 정책으로서의 녹색건축을 싹 틔우다

지금은 녹색건축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정부에서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산하에 녹색건축과를 설치·운영하면서 독립된 업무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녹색건축은 건설 기술 분야와 주택 분야에서만 한정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녹색건축이 건축 및 도시공간 정책의 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저탄소 녹색성장’이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본격화되면서부터다.

새로운 국정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소에서도 ‘친환경 근린개발을 위한 도시설계 기법 연구(유광흠 외, 2009)’, ‘저탄소 공동주택 디자인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조상규 외, 2010)’를 시작으로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체계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I)(유광흠 외, 2010)’,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U-City 실현방안 연구(오성훈 외, 2010)’,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체계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II)(유광흠 외, 2011)’, ‘도시공간개선사업의 저탄소 계획요소 적용에 관한 연구(유광흠 외, 2012)’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녹색건축과 관련된 기초 과제들을 다수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현존하는 다양한 인증 기준 및 기술 포트폴리오, 관련된 해외 정책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방안 연구(이민석 외, 2011)’를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초안이 마련되었고, 이후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2012년 2월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당시 「건축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녹색건축 관련 내용을 독립시켜 정부가 건축물의 성능기준 강화, 인증체계 정비, 에너지소비 총량제 도입, 관련 전문 자격제도 신설, 녹색건축 지원센터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지자체의 의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녹색건축 실현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이후 정부는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수립되는 녹색건축 분야 정책 계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녹색건축센터 지정서

한 사례 연구(오성훈 외, 2012)’를 수행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준비를 지원하였고, 뒤이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연구(오성훈 외, 2013)’를 수행하였다. 또한 2013년 6월에는 우리 연구소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아 녹색건축 정책 개발과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녹색건축 확산을 위한 노력

이후 연구소는 국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연구소에서 직접 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였고, 서울특별시·경기도·강원도·전라북도의 계획 수립은 자문위원회와 TF 참여를 통해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매뉴얼>(2015)을 발간하여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거나 수립 중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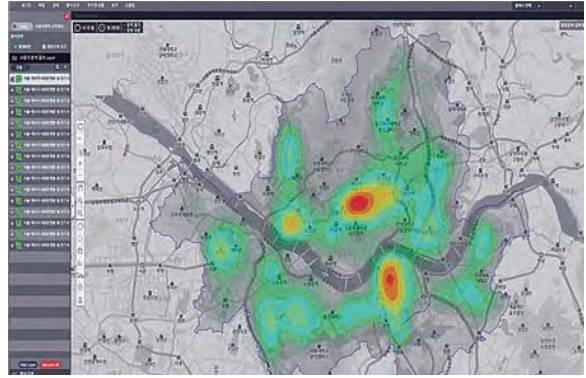
녹색건축 분야의 기초 연구과제도 꾸준히 발굴·수행해 왔다. ‘녹색건축 정책 수립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구축 및 분석(조상규 외, 2013)’, ‘용도지역제도를 고려한 건물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책 연구(김승남 외, 2014)’,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공공·민간 분야 활용방안 연구(조상규 외, 2016)’를 통해 기초적인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통계 구축부터 출발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건축물 에너지맵 서비스 개발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녹색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엄철호 외, 2014)’,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연구-건축규제 및 기부채납 기준을 중심으로(김승남 외, 2016)’를 통해 실제 정책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과제 수행뿐 아니라 녹색건축정책의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활동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13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을 기획·주관하였다. 2015년부터는 매년 녹색건축포럼을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한마당



2016 녹색건축한마당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전시 부스



건축물 에너지 소비지도를 통해 본 서울시 전력사용량 분포

자료: 조상규·이은석(2016) "국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소비 지도 개발 결과와 시사점", avribrief 제 144호

행사의 정책세미나와 전시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녹색건축 분야의 관·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보다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건축의 미래를 위한 과제

다른 모든 정책 분야가 그러하지만 녹색건축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정확한 정보가 더욱 중요하다.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여건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녹색건축 정책의 사회적 비용과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이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회의론과 개별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 진정한 녹색건축 구현을 위해서는 개별 건축물 단위의 녹색건축을 넘어 동네 단위, 도시 단위로의 확장 및 정책 연계를 꾸준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입지에 따라서 실현 가능한 녹색건축의 수준은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결국 녹색건축 개념을 확장하여 녹색도시-지역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도 지구단위계획 제도 등에 일부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향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제로에너지 빌딩 의무화 등을 위해서는 녹색건축의 도시 및 지역정책과의 연계방안 마련에 필요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앞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녹색건축에 대한 지원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행히 녹색건축은 그 자체로 경제적 편익을 달성할 기술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초기 투자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세련된 금융 지원 프로그램 개발, 도시재생 등과 연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건축물 지붕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등 다각적인 사업 추진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미래 먹거리’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과 녹색건축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물리적 인프라와 정보,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도시로, 건축물 에너지 소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어는 스마트시티 구현의 필수 요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 에너지 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 개인정보 보호 문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실증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연구소가 지난 10년간 녹색건축 관련 연구 분야에서 걸어온 발자취를 간단하게 되돌아보았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도움으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건축의 실현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지속가능한 건축,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녹색건축 분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환경부(2016),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p.68.
- 2 조상규·이은석(2016), “국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소비 지도 개발 결과와 시사점”, auri Brief, 제144호.

장소 중심 도시재생을 실천하다

박성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장

도시재생지원기구 auri의 역할

200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는 쇠퇴 도시, 쇠퇴 원도심,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재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이 시기부터 국내 도시재생 정책의 발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나름 의미 있는 결실을 거뒀다.

2009년에 발간된 ‘중소도시의 도심 활성화 전략으로써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연구’와 ‘근대건축물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지역 건축 자산과 외부 공공공간을 활용한 재생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였다. 2010년에 발간된 ‘단독주택지 재생을 위한 주택 관리 및 정비 지원방안’은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에 대한 선구안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2011년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방안’, 2012년 ‘근린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헴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에서는 장소성·공공성 강화 및 유헴 지역자산 활성화 차원의 재생 전략을 제시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도시 쇠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서 건축 자산, 도시 공공 공간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면서 도시기능의 회복, 쇠퇴 주거지역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공간복지 향상, 장소성 강화를 통한 쇠퇴 원도심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대한 다차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러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 결실은 도시재생 정책의 제도적

근간에 녹아 있다. 2013년 4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서는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 전략의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 2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도시재생 정책의 지속적 발굴과 한국형 도시재생 선도모델 발굴을 통한 사업 파급효과 확산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지원기구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재생지원기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과 민간의 가교 역할과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시행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정책발전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기능 중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 발굴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을 확산하고 있다.

2014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은 제도적 기반 구축과 더불어 추진되었는데,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경계기반형 2곳과 근린재생형 11곳의 도시재생이 시작되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의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지원 등을 담당하며, 선도지역 중 5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는 국내 도시재생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획 컨설팅 및 기반구축 지원을 통해 지역 재생사업의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도시재생 지원기구 업무와는 별도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는 지속되었다. ‘도시재생 지원기구 운영사례 및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 지원기구의 중장기적 역할을 제시하고, ‘생활환경 개선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지원제도 연구’를 통해 근린재생에서의 마을기업이 지닌 역할과 연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다.

도시재생 정책 실행에 기여

2015년도부터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 계획단계를 넘어 사업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재생 지원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관리 운영 지원을 지속하였다. 도시재생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 2015년에 수행한 ‘도시재생



도시재생 사례와 매뉴얼 등을 담은 발간물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와 ‘도시재생사업 종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시재생 제도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아울러 지원기구 업무 이외에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재생 전략 다양화를 위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여 정책 발전 및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 연구’에서는 인구 감소 쇠퇴 도시의 전략적 재생 접근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마을재생 거점모델로서 공유주거 조성·운영 매뉴얼’에서는 공유 주거 모델을 주거지 재생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장 기반의 협업 작업도 강조하였는데, 쇠퇴 지역인 부산진구를 대상으로 ‘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실험적으로 계획하고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 접근의 실제적 적용을 강조하였다.

2016년에는 선도지역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단계를 지속함과 동시에 4월에는 신규 국비지원 도시재생 일반지역 33곳을 추가 선정하여 지역의 도시재생 추진이 확대되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원기구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관련 가이드라인 발전을 지원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였다. 도시재생 참여자의 목소리를 담은 ‘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 단계의 경험과 과제’, 지역 협업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을재생’, 마을재생 전략 사례집 ‘장소 중심의 마을재생의 열 가지 키워드’, 도시재생 사업 분석집 ‘마을재생 리뷰-도시재생 선도지역의 계획 및 사업 특성’ 등을 통해 지역 근린 재생사업의 추진 및 경험 확산을 촉진하였다.

지원기구 업무 이외에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제시하는 도시재생 전략의 다양성은 경제, 사회, 물리환경적 복합적 차원을 아우르는 연구로 확대되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도시재생사업 청년층 참여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쇠퇴지역 공폐가 재생 및 활용 정책 방안’,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방안’,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 기금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대표되는 연구들에서는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의 통합적 총체적 접근을 강조하며, 앞으로 진행될 도시재생 정책의 다양성 확대와 도시재생의 효과적 확산을 염두에 둔 시사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2017년도 들어서는 선도지역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시재생의 지속성 증진과 효과 확산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자립형 도시재생 지속 전략 및 공동체자산 신탁 등을 활용한 지속 전략 등을 강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도 및 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영주 군산 등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창의적 사업 추진과 사업 지속 관리를 위한 시범적 협업 연구를 통해 시책을 발굴 확산하고자 대응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과 auri의 기대

2017년 5월에 출범한 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강조하면서 국내 도시재생은 그 범위가 확대되고 복합적 접근이 강조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일자리 확충과 노후 주거지 정비 강화, 지역생활 복지 향상은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 어젠다의 주요 목표로서 작동할 것이다. 또한 기존 도시재생 정책 목표로 강조된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 가치, 경관 회복, 주민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가 어우러져 지역 기반의,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 확대를 통해 쇠퇴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어 도시재생의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국내 도시재생의 확산과 아울러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도시재생 부문에 있어 역할 증대가 요구될 것임에 틀림없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그동안 장소 중심의 지역생활 복지 향상, 노후 주거지 공간정비의 강화, 정주환경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문화 가치 증진,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복합적 도시재생 접근을 위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벌여왔기 때문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앞으로도 한국형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정책의 발전과 실현을 위해 장기적 비전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세밀한 지역 맞춤형 시책들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auri의 미래는 우리 건축문화의 미래입니다

일시

2017년 6월 14일 11:00

참석자 (가나다순)

김진애 전 대통령자문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제18대 국회의원
민현식 건축사사무소 기오현 고문
박인석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윤영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초대 소장

진행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획조정실장

<건축과 도시공간> 2017 여름호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개소 10주년을 맞아 개소 당시의 취지와 다짐을 다시 상기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참석자들은 연구소가 지난 10여 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 많은 공헌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면서 더욱 질 높은 연구활동과 사업의 추진으로 건축·도시공간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상호 | 연구소가 설립된 지 어느덧 10년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연구소의 설립부터 저희 연구소를 지켜봐 주셨던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개소 당시를 떠올려 볼 때 당시 연구소에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김진애 | 연구소 개소 이전에 ‘건축’이라는 명칭이 쓰인 정부부처 위원회나 공공기관이 전무하였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았던 대통령자문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가 ‘건축’을 다루는, 건축을 명칭으로 사용한 첫 번째 정부위원회였죠. 당시에 건축계로부터 두 가지 염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건축’을 다루는 국책연구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우리나라에도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국가의 ‘건축정책’ 방향을 제시할 건축기본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컸지만 여러분들이 열정을 기울여 주셨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신 덕에 위원회가 발족한 첫 해에 auri가 개소한 데 이어「건축기본법」도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첫 시작, 첫 발을 떼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당시 auri에 기대하는 것은, 건축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문화 국가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국민들도 그 중요성을 느끼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운영태 | 2007년 빈 방에서 시작한 auri가 어느덧 10년이 되었다니, auri 초대 소장으로서 감회가 깊습니다. 당시에 '건축정책'이라고 하면 무척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건축이라는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였습니다. 공공 영역의 건축은 '건축을 규제하는 제도'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초대 소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건축의 공공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건축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 올리면서 제도의 틀 안에 자리잡도록 하느냐가 당면과제였고, 그것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우리 auri에 기대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연구소명에 '공간'과 '도시'를 넣어야 한 것도 '건축'으로 좁혀서는 공공성을 드러내기 어렵고, 통합된 시각으로 발전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공공의 역할이 민간의 활동에 도움이 되고, 전반적으로 도시 경관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려면, 그래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김상호 | 연구소의 그간 성과나 건축계에 기여한 바를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auri에 기대하는 것은,
건축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문화 국가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애

MIT에서 도시계획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통령자문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
건축 분야 국책연구기관 설립을 보고하였고,
이후 auri 설립이 본격 추진되었다.
<인생을 바꾸는 건축수업>(2012) 등
다수의 저서가 있으며, TBS 김여준의 뉴스공장
'김진애의 도시이야기' 코너에 참여하고 있다.

민현식 | auri가 설립된 후 공공 부문에서 많은 변화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동안 「건축기본법」의 제정, 건축 분야 정책연구 등 아직도 유아단계에 있는 건축 분야의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건축을 설계하는 현장에 있는 건축가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실제 사용자가 겪을 여러 문제들과 관련하여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에까지 힘을 쏟는 데 부족하였기 때문에,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auri로 인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애 |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총평을 하면 그 당시와 비교해 볼 때 auri의 탄생, 「건축기본법」의 제정, 국가건축위원회의 발족 등으로 인해 건축정책의 수준이 올라가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데 기여한 바는 분명 있습니다. 다만 원래 건축분야가 민간이 주도하는 영역이자 시장 영역이 크다 보니 통합이나 협력이 쉽지 않습니다. auri의 탄생으로 건축 분야 정책연구의 전문성은 높아졌지만 건축산업의 중심인 건축 실무진과의 네트워크는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온영태 | 건축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처음이다 보니, auri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의 공공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였지요. 당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벌였고, 이 또한 건축문화의 발전에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auri에서는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역량이 건축물 조성 기획단계에서부터 발휘되어야 한다고 보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식을 바꾸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고, 실제 사례로부터 보여주자는 생각에서 영주와 제천의 도시재생사업에 역량 있는 공공건축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건축계로부터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이 일은 건축사들의 역할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주위를 환기시키는,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건축의 개념을 단지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공간으로, 도시로 확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했고, 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없던 시절과 비교하면, auri로 하여금 많은 인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박인석 | auri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건축을 둘러싼 문제 상황은 10년 전과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auri가 설립되었고, 염원으로 만들어진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설치되고, 특히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가 탄생하게 되

는 발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건축정책 방향에 맞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부분적이거나 의미있는 실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와 일련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auri는 아주 중요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 덕에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날카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제 상황은 마찬가지지만 이를 인식하는 우리의 눈이 날카로워졌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진전이라는 것이지요.

김상호 | 우리 건축문화의 경쟁력, 선진국들과 견주어 볼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윤영태 | 핀란드의 경우 의료서비스나 물류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반드시 공간정책 측면을 고려해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축정책이 이 정도의 위상을 가져야 하는데, 현실은 제일 마지막에 단계에 건축 행위가 일어납니다. 어린이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조성 단계에서부터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려되어야 하는데 예산 등 모든 것이 정해진 이후에 설계가 의뢰되는 단계에서 건축가들의 역할이 발휘됩니다. 건축물 조성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행 등 합리적인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할 듯 합니다.

박인석 |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축 행위와 관련된 제도는 「건축법」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된 많은 법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도 다르고요.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과거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건축법」이 1962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뒤늦게 생긴 법률인 「건설기술관리법(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건축 행위는 토목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에 관련된 각종 기술업무 중 설계만 건축관련법에 따르고 있을 뿐, 기획부터 감리까지 모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로 취급되면서 진행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축공사 관련 행위 일체를 분리하고 기획단계부터 시공단계 사후설계관리에 이르는 법적 기준과 절차를 건축에 맞도록 만드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입니다.

민현식 | auri가 그간 해 온 많은 연구와 실현된 프로젝트 가운데, 취지와 결과는 좋더라도 시민들 또는 건축가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하여, 실제 실적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다는 그것과 관련된 다른 법규나 제도와의 관계설정 미흡

“건축의 개념을 단지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공간으로, 도시로 확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했고, 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없던 시절과 비교하면, auri로 하여금 많은 인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었습니다.”



윤영태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경희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를 지냈다.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 주택공사·토지공사 기술심의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재직하였다.



박인석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건축이 바꾼다>(2017), <아파트 한국사회>(2013)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이러한 체계와 일련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auri는
아주 중요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 덕에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날카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협정제도’의 경우, 지극히 소규모의 건물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조금만 규모가 커지면, 「건축법」 특히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민간에서 건축 설계를 하면서 맞닥뜨리는 문제 중 아주 어려운 사항이 심의제도입니다. 합리적인 심의제도와 건축행정의 효율화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진애 | 우리의 도시환경은 상당 수준 나아지고 있는 편이지만 농촌 환경 등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건축환경을 개선하고 건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auri 위상을 독립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auri의 역할이나 건축정책의 역할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낮지요.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아질수록 우리 건축의 사회적 역할, 공공적 기여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 auri가 앞으로 뒤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와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온영태 | 공간을 다루는 큰 방향을 설정하는 것, 시작 단계에서부터 건축 전문가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허가나 심의 등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 세 가지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건축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현식 | 민간 건축시장에서도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제도 마련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와 닿는 제도라 함은 건축주들의 이익과 관련된 첨예한 문제들입니다. 현대사회는 무엇보다 기술의 발전 속도와 사회의 여건 변화는 더 복잡다기해지고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분야는 우리 삶의 전반에 다 걸쳐 있는 분야인 만큼 민감하게 사회의 변화 속도에 반응할 수밖에 없지요.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건축 유형들도 많아졌지만, 건축제도나 법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옛 (준)공업지구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소위 ‘지식산업센터’, 역세권에 집중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장기투숙객을 위한 ‘아파트형식의 호텔’, 이미 오래전에 정착했지만, 또 다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커피숍’,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집중하여 연구해야 할 다양한 거주형식과 이미 주택이 아닌 거주형 건물들 등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건축법」에 규정한 마땅한 ‘유형’이 없기 때문에, 불법과 편법이라

는 기형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 유형과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사후 평가와 모니터링도 면밀히 따져 보았으면 합니다. ‘한때,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변질되었거나 버려졌는가?’ 등 평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건축이나 도시설계에 구체적으로 쓰일 ‘계량적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설계현장에 자료와 데이터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설계의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벌써 폐기되어야 마땅한 일본판 ‘건축설계 자료집성’을 뒤적거리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만들어진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들이 민간 건축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식 | 건축분야의 인식 제고와 법·제도적 기반을 닦아가는 데 있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토목과 건축의 산업규모 비중은 몇 대 몇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7대 3 정도로 토목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건축산업 규모가 토목 산업 규모의 3배입니다. 그만큼 민간의 건축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토목직 공무원 수가 건축직 공무원 수의 세 배이고, 법과 제도도 건축이 토목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흔히 SOC 분야인 토목이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건축 분야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중요한 산업입니다. 건축문화는 물론 산업 측면에서도 건축이 제자리를 찾아 진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auri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진애 | 설계를 하는 데 있어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지요. auri도 마찬가지죠. 좋은 정책 수요처를 만난다면 정책을 만들고 연구하는 데 더욱 큰 시너지가 발휘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려면 정책 수요처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내야 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의사결정자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게 하려면 정책에서의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건축 분야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건축을 포함하고 있는 법·제도가 여러 분야, 여러 부처에 얹히고설켜 있는 현실이 그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기도 하지요. 국토교통부는 물론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환경부·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부처,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삶에 다가서는 건축 풍토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민현식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학과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원장을 지냈다. 원도시건축 등을 거쳐 건축사사무소 기오현 대표로 일했으며, 미국건축가협회 명예회원(Hon. FAIA)으로 활동하였다. <건축에게 시대를 묻다>(2006), <민현식 architecture 1992-2012>(2012) 등의 저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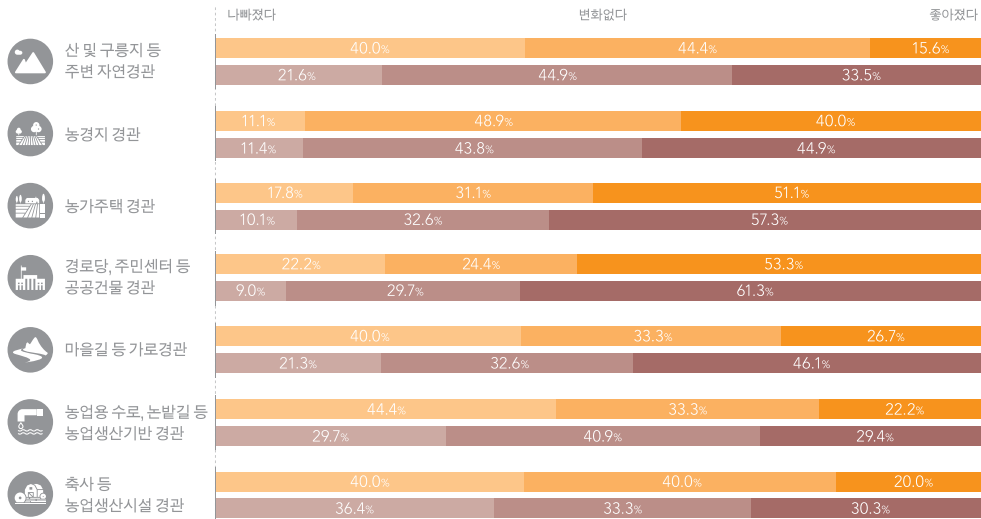
“민간 건축시장에서도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제도의 마련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들이
민간 건축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농촌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 국민 555명(도시지역 거주자 494명, 농촌지역 거주자 61명)과 전문가 45명 모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일반 국민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역·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비례 할당하였으며, 전문가는 농촌경관업무 담당 공무원·연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2016년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 동안 실시하였다.

Q 「경관법」 제정 후 10년 동안 농촌경관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는지?

일반 국민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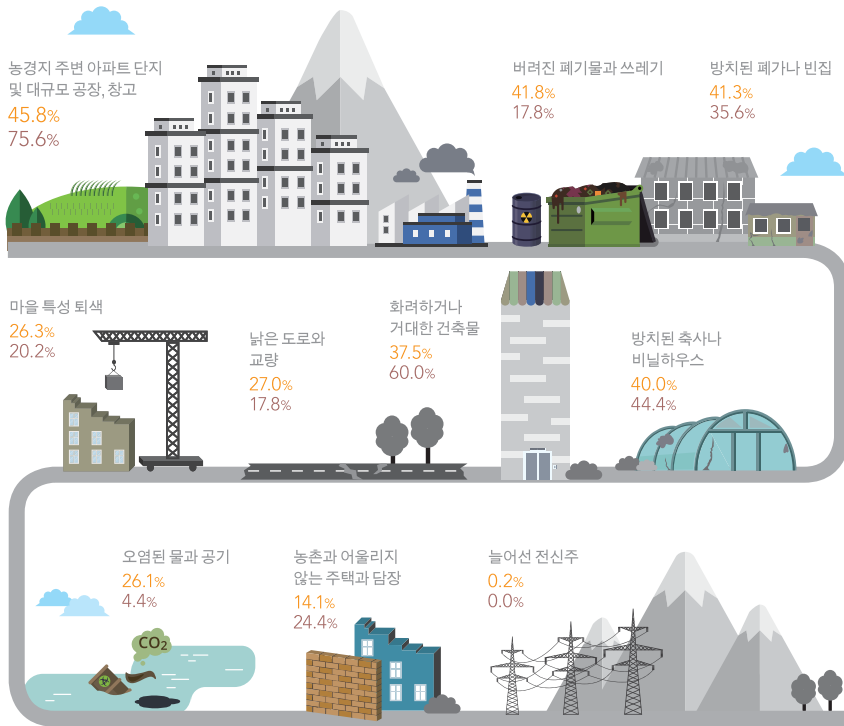


A 공공건물과 농가주택 경관은 좋아졌으나, 가로경관과 농업생산기반 경관은 오히려 나빠짐

「경관법」 제정 전인 10년 전과 비교해 '경로당·주민센터 등 공공건물 경관'과 '농가주택 경관'은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50% 이상이 크게 좋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농경지 경관'과 '마을길 등 가로경관' 등도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은 '마을길 등 가로경관(40.0%)'과 '농업용 수로, 논밭길 등 농업생산기반 경관(44.4%)'이, 전문가들은 '축사 등 농업생산시설 경관(36.4%)'과 '농업용 수로, 논밭길 등 농업생산기반 경관(29.7%)'이 오히려 10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Q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일반 국민
전문가
1+2+3순위 종합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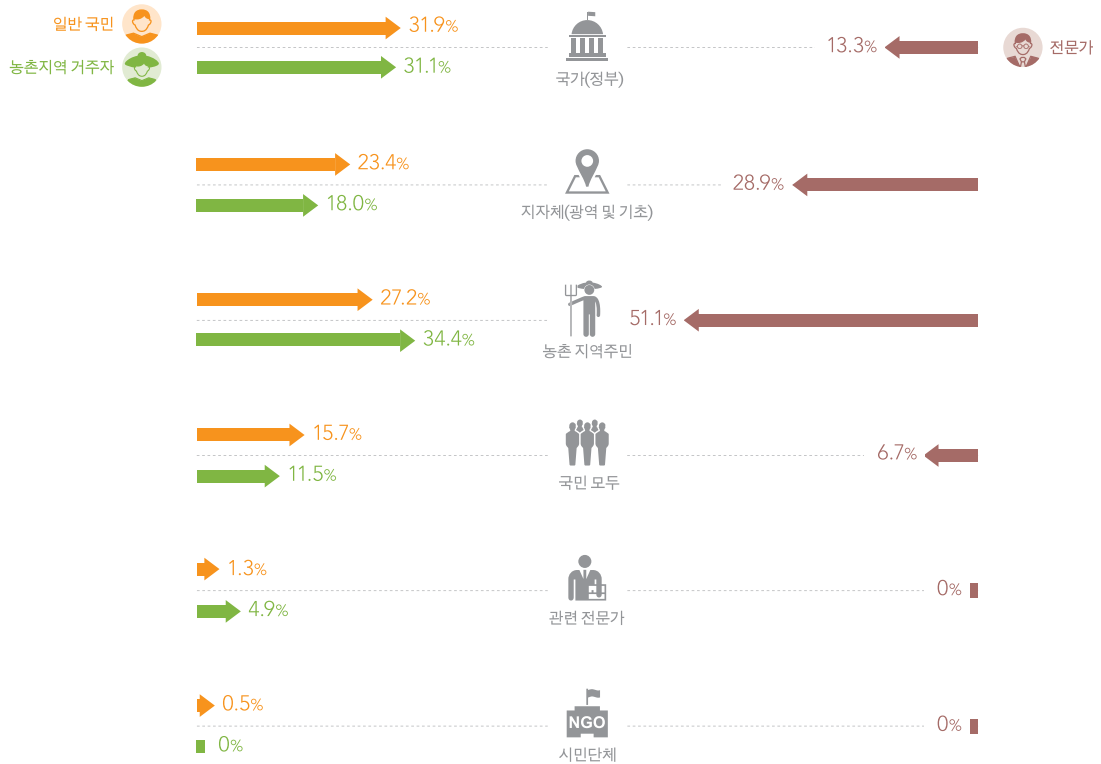


A 농촌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대규모 건축물과 개발을 요인으로 지적

일반 국민과 전문가 공통적으로 '농경지 주변에 개발된 아파트 단지와 대규모 공장·창고', '펜션·음식점 등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화려하거나 거대한 건축물'처럼 대규모 건축물이나 개발을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에 '방치된 축사나 비닐하우스', '폐가나 빈집', '폐기물과 쓰레기' 등 농촌경관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방치 문제를 농촌경관 훼손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Q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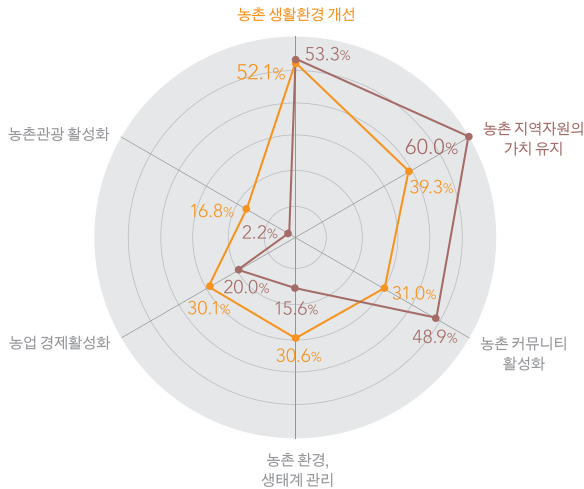
일반 국민
전문가
농촌지역 거주자
1순위 응답 기준



A 지자체와 농촌 지역주민이 중요한 주체

일반 국민들은 1순위 응답에서 '정부'(31.9%)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 중 농촌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1순위로 '농촌 지역주민'(34.4%)을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아, 스스로를 농촌경관 보전·관리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은 '지자체 - 농촌 지역주민 - 국가' 순으로,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주민 - 지자체 - 국가' 순으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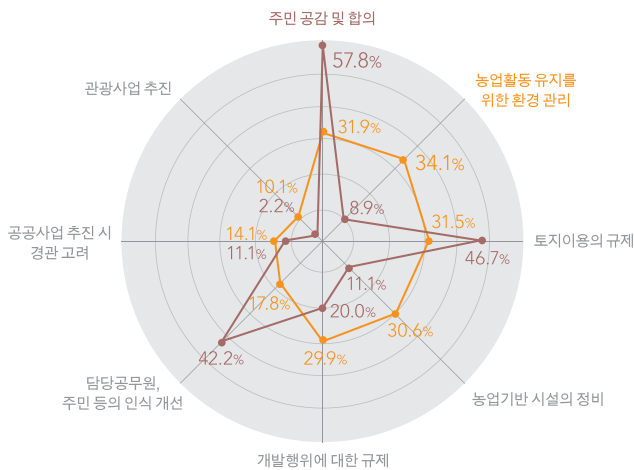
일반 국민
전문가
1+2순위 종합 응답 기준



Q 농촌경관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A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자원의 가치 유지가 중요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촌 지역자원의 가치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일반 국민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 쪽에 더 무게를 두는 반면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자원의 가치 유지'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Q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은?

A 주민 공감과 합의, 농업활동 유지를 위한 환경 관리가 필요

일반 국민들은 '농업활동 유지를 위한 환경 관리', '주민 공감 및 합의', '토지이용의 규제' 등을 농촌경관 보전·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민의 공감 및 합의'가 선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토지이용의 규제'와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건축과 도시공간

Vol. 26

Summer 2017

건축 도시 동향

Trend Repo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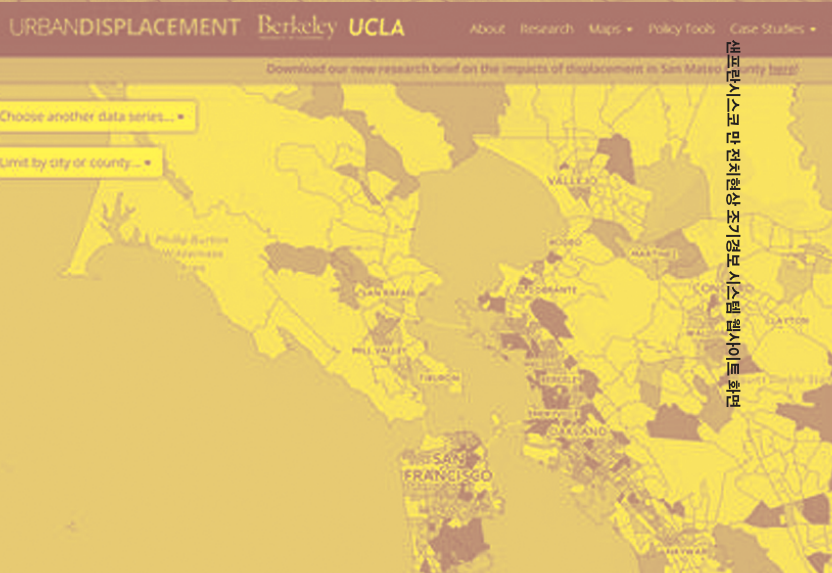
최근 미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조기경보 및 예측 시스템 개발과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시스템을 고찰함으로써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국에서는 2011년 제정된 지역주권법을 근거로 '지역공동체 입찰권리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특정 지역의 중요한 자산들을 지역공동체가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진행 과정, 기대효과를 짚어본다.



공동 자산화 이후 아이비 하우스 펄의 모습



타임스퀘어 보행자 공간과 방문객들의 모습



샌프란시스코 만 전역 현상 조기경보 시스템 웹사이트 화면

해외

미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과 의미
064

지역자산을 커뮤니티
소유로, 영국의 지역공동체
입찰권리제도
070

국내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과 기대효과
076

미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과 의미 |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은 주로 미국 대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근린을 대상으로 주거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단계별로 진단하고 그 변화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니터링함으로써 가까운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자산을 커뮤니티 소유로, 영국의 지역공동체 입찰권리제도 | 공유의 개념이 강조되는 도시재생의 환경개선논리 속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공동체 및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토지가치의 상승을 공유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과 기대효과 | 이제 막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건축자산 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삶의 일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산관리 주체이자 업무수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미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과 의미

박정호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도시계획 및
개발학 박사수료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이란

최근 미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조기경보 및 예측 시스템 개발과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미국 대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근린(neighborhood)을 대상으로 주거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단계별로 진단하고 그 변화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니터링함으로써 가까운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및 예측 시스템을 고찰함으로써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및 진행 사례

시스템 개발 동향

2016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가 대략 11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다. 대부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당 도시 소재 대학교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 시(city) 당국에 의해 사용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시스템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수치·그래프·지도·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형태를 띠기도 하고, 연구 프로젝트 자료와 보고서 같은 오프라인 서비스 형태로 개발되기도 하였다.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의 최종 소비자는 주로 시 당국이나 해당 도시 안에 위치한 커뮤니티 단체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공간 범위는 거의 대부분 해당 도시의 행정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도시의 주요 현안으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 사례와 주요 내용

시스템 적용 도시	시스템 형태	개발처	공간범위	목표	사용처	사용형태	정책효과
살럿	근린 변화 분석	살럿 시	도시	균형 및 포용적 발전 방안 모색	시 정부, 커뮤니티 단체	내부 보고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음
시카고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일리노이대학교	도시	변화 측정 및 도구 제공	커뮤니티 단체	보고서 및 온라인 지도	있음
휴스턴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및 위험지표	지자체 이니셔티브 지원단체(LISC)	도시	LISC의 활동 지원	LISC, 커뮤니티 단체	내부 보고서	있음
로스앤젤레스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로스앤젤레스 시	도시	그랜트 프로그램 이니셔티브 선정 지원	시 정부	내부 보고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음
미니애폴리스	주택시장 지표	미네소타주립대학교	트윈시티	대화 시작, 정책입안자 및 주민에게 정보 제공	커뮤니티 단체, 시 정부	보고서 및 온라인 지도	있음
미니애폴리스 지역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및 위험지표	미네소타 환경보호센터	지역	토론 지원,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편입 획득	커뮤니티 단체	보고서 및 온라인 양방향 지도	없음
포틀랜드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및 위험지표	포틀랜드주립대학교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점 확인	커뮤니티 단체	보고서 및 온라인 지도	있음
세인트루이스	근린 활력 지표	미주리주립대학교	도시	재활성화 중인 근린 파악	커뮤니티 단체	온라인 보고서	있음
샌프란시스코 만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및 위험지표	버클리대학교	지역	근린의 변화패턴 및 도시정책 설명	지방정부, 커뮤니티 단체, 지자체 공무원	보고서 및 온라인 양방향 지도	있음
시애틀	근린 유형 및 젠트리피케이션 위험지표	퓨젓사운드 (Puget Sound) 지역의회	지역	계획 수립 시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	지방정부, 커뮤니티 단체	온라인 보고서	있음
워싱턴 D.C. (개발 중)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및 위험지표	메릴랜드대학교	지역	대중교통 주변의 변화 이해	지방정부	온라인 지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음

주: 버클리대학교 도시 전치현상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로 수행된 설문조사에 기반하며, 정리된 11개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 이외에도 유사한 형태의 연구프로젝트가 다수 수행되고 있음

자료: Chapple and Zuk 2016 <표 2> 참조

로 대두된 이후에 1990년부터 2010년 또는 2014년까지의 추세를 주로 미국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그보다 더 오래된 1970년을 시스템의 시작점으로 삼기도 하였다.

시스템 내용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의 핵심 내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근린에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화를 젠트리피케이션과 전치현상(displacement)을 중심으로 측정하여 수치와 지도로 보여주는 데 있다. 우선 공간적으로는 대부분 미국 통계청 센서스트랙(census tract)을 근린(neighborhood)이라는 측정 단위로 정의하였다. 근린별로 측정된 과거 20~30년의 추세는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사용된다. 대부분 주거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과 전치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업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과는 다소 개념적 차이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카고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간격으로 시카고 안에 위치한 근린의 변화를 열세 가지 변수로 측정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종합지표를 도출하였다. 젠트리피케이션 유형은 크게 사전단계·진행단계·후기단계로 구분하여 연도별 지도에 표시되었으며, 시계열적 변화는 별도로 지도화하였다.

포틀랜드 연구진은 근린별로 측정된 인구구조와 주택시장 변화를 기반으로 전치현상에 대한 취약성을 예측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있어서는 포틀랜드 전체 평균에 비해 세입자나 유색인종이 많고, 평균학력이 낮으며, 소득이 적은 경우에 해당 근린이 전치현상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택시장의 경우에는 집값이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근린, 집

값이 상승하고 있는 근린, 그리고 주변에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근린으로 구분지었다. 인구구조와 주택시장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중기 및 말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안하였다.

버클리대학교 연구진은 도시 전치현상(Urban Displacement)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샌프란시스코 만 주민이 기존 커뮤니티의 외부로 밀려나는 전치현상을 초기단계, 위험단계, 진화단계, 심화단계로 구분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지자체 차원의 전치현상 대응정책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전치현상을 저소득층 근린에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기존 저소득층 주민이 외부로 밀려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형 전치현상과 중산층 및 고소득층 주민 위주의 근린에서 많지 않던 저소득층이 줄어드는 사회적 배제형 전치현상으로 구분하였다는 데 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중산층과 고소득층 근린에서 저소득층이 줄어드는 변화도 전치현상의 한 형태로 포함시켰다는 데서 다른 조기경보 시스템과 차별화된다. 근린별로 모니터링한 결과는 지도로 제작되어 온라인에서 접속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샌프란시스코 만 정책당국자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의 정책적 활용 사례 및 시사점

미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은 주로 지자체의 정책 개발에 활용되거나 공청회처럼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도시정책에는 여러 요인이 고려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마련되는 데 얼마만큼

젠트리피케이션 초기단계

- 하단의 위험, 진화 및 심화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근린의 경우에는 초기단계로 진단

사회적 배제 초기단계

- 하단의 위험, 진화 및 심화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근린의 경우에는 초기단계로 진단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단계

-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활기
- 대중교통중심도시개발(TOD)
- 역사적 건물
- 민간 부문 저렴주택 감소
- 고용중심지

사회적 배제 위험단계

-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활기
- 대중교통중심도시개발(TOD)
- 역사적 건물
- 민간 부문 저렴주택 감소
- 고용중심지

젠트리피케이션 진화단계

- 기존 저소득가구 수와 민간 부문 저렴주택 수 감소
- 저소득가구 신규 유입 수 감소
- 총가구 수 유지 및 증가

사회적 배제 진화단계

- 기존 저소득가구 수 감소
- 기존 민간 부문 저렴주택 감소 또는 저소득가구 신규 유입 수 감소
- 총가구 수 유지 및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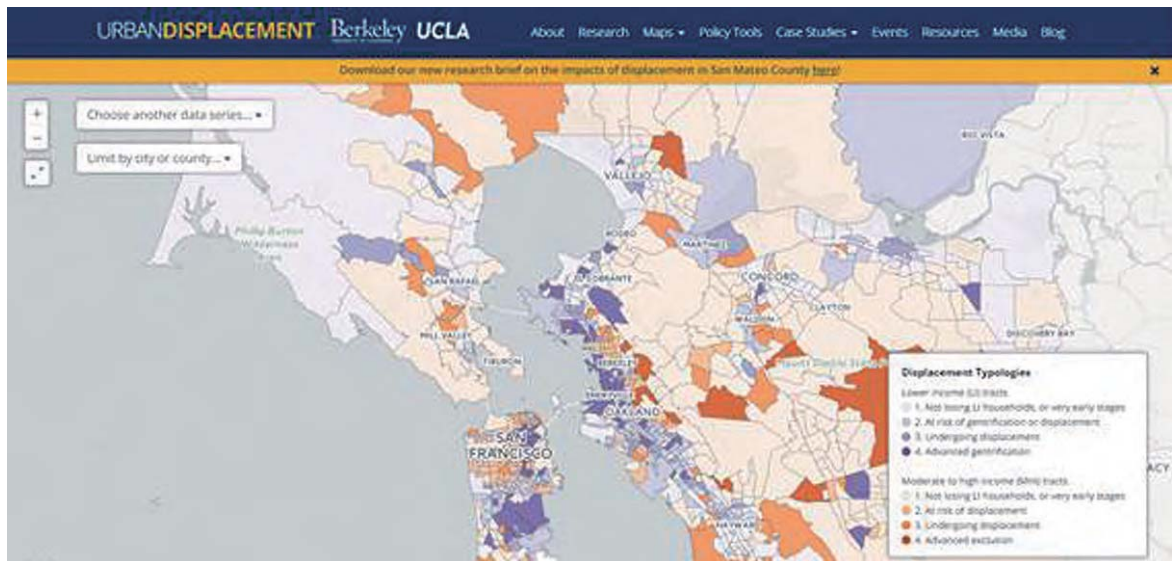
젠트리피케이션 심화단계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 근린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취약
 - 인구구조 변화
 - 부동산 투자 활기

사회적 배제 심화단계

- 총가구 수 대비 기존 저소득가구 수의 비중 대폭 축소
- 저소득가구 신규 유입 수 대폭 감소

자료: <http://www.urbandisplacement.org/map/sf>



샌프란시스코 만 전치현상 조기경보 시스템 웹사이트 화면

자료: <http://www.urbandisplacement.org/map/sf#>

기여하였는지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은 새로운 정책의 입안뿐 아니라 기존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데도 이용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주택수요 추정 때에도 목표 연도의 인구·가구·주택 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근린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이용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거주지나 근방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되었음을 처음으로 인지하고 주변 이웃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같이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상당히 여러 근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대도시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점차 가속화되거나 반대로 수그러드는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하다. 도시정책 입안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참여와 의견에 상당한 무게가 실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 경고적(wake-up call) 기능이야말로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자 의의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시스템 개발자는 아직까지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경고 시스템의 예측 기능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 당국의 정책입안자와 같은 최종 수요자는 시스템을 통해 믿을 만한 예측 기능까지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가까운 미래의 변화를 가늠해 보기도 한다. 특히 일부 부동산개발회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을 응용하여 향후 주택수요가 높은 근린을 자체적으로 예측함으로써 개발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여전히 근린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시스템이 이용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구축 방법론과 정량적 자료가 개선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처럼 정성적인 근거자료도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확한 예측력이 결여된 젠트리피케이션 예측 시스템은 단지 부정확한 결과를 내놓을 뿐 아니라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한 개발 행위나 시민 참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결론

미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은 주로 주거지역에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니터링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단계별로 유형화함으로써 정책입안자, 일반 시민 등 최종 사용자들에게 기본적인 사전 경고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이 정확히 어떠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얼마나 활용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 대도시를 둘러싼 도시담론과 나아가 구체적으로 주택의 수급, 근린의 변화, 사회적 배제 등 도시의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만은 명백하다.

다만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의 미래 예측력에 있어서는 유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전치현상이 인근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전치현상 예방책 가운데 어떠한 정책이 도시 여건별로 가장 효과적인지 등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주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에는 상업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공유와 사유를 넘어 중간적 성격의 지역자산 공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고,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건물주·임차인·구 간 상생협약 체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영상 및 리플릿 제작, 젠트리피케이션 캠페인 실시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큰 틀의 정책을 마련하거나 또는 특정 지자체의 관련 주체들이 협심하여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모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활동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구축된 자료는 일반에게 모두 공개되어 관련 주체들이 빠짐없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필요하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가는 데 있어 미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은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하다.

참고문헌

- 서울시 성동구 홈페이지. <http://www.sd.go.kr/sd/main.do>.
- 최명식(2017),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역 자산 공유방안', 국토정책 Brief No.613, 세종시: 국토연구원.
- Bates, L.(2013), *Gentrification and Displacement Study: Implementing an Equitable Inclusive Development Strategy in the Context of Gentrification*, Portland, OR: Portland State University.
- Chapple, K.(2009), *Mapping Susceptibility to Gentrification: The Early Warning Toolkit*, Berkeley, CA: Center for Community Innovation.
- Chapple, K., & Zuk, M.(2016), "Forewarned: The Use of Neighborhood Early Warning Systems for Gentrification and Displacement", *Cityscape: A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18(3).
- Nathalie P. Voorhees Center.(2015), *Gentrification and Neighborhood Change: Helpful Tools for Communities*,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 Lees, L.(2012), Gentrification. In A. T. Carswell (Ed.), *The Encyclopedia of Hous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2015), *Urban Displacement Project: Executive Summary*.

- Zuk, M.(2015), *Regional Early Warning System for Displacement Typologies Final Project Report*.
- Zuk, M., Ariel H. B., Chapple, K., Gorska, K., Loukaitou-Sideris, A., Ong, P., and Thomas, T. (2015), *Gentrification, Displacement, and the Role of Public Investment: A Literature Review*, San Francisco: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지역자산을 커뮤니티 소유로, 영국의 지역공동체 입찰권리제도

김건
웨스트민스터대학교 도시재생
박사과정

영국의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1970년대 이후 영국의 도시들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관리되고 통제되던 방식(Managerialism)에서 변화해 지방 분권과 시장경제의 논리가 도입된 기업가주의 방식(Entrepreneurialism)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도시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영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탈산업화와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민관협력체계(Private-Public Partnership) 등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민영기업이 도시개발의 정책 시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00년대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New Labour Government)의 근린재생정책(Neighbourhood Renewal)과 2010년대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연합정부(Coalition Government)의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의 도입 등을 통해 그 참여 주체는 일반 시민들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2011년 제정된 지역주권법을 근거로 새롭게 등장한 ‘지역공동체 입찰권리제도(Community Right to Bid)’는 특정 지역의 중요한 자산들을 지역공동체가 공유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 지역공동체 입찰권리는 최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같이 토지의 사용가치와 이용가치의 불균형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을 ‘토지가치의 공유’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Harvey, D. (2002), "From managerialism to entrepreneurialism", *The Blackwell City Reader*, pp.456~463.

지역공동체 입찰권리제도의 도입과 의의

영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2010년 데이비드 캐머런이 이끄는 보수당 연합정부가 집권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 연합정부는 경제 침체의 대응책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소위 ‘큰 사회, 작은 정부(Big Society, Small Government)’를 기조로 한 도시정책을 추진해 왔다. 즉 이전 진보 노동당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재정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도시 르네상스(Urban Renaissance) 등의 도시정책들을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2011년 지역주권법을 제정하여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지역주권법은 10개의 편(part)과 29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지역공동체 권리(community rights) 근린지역계획(neighbourhood planning) 주택계획(housing) 지방분권(empowerment of cities and other local areas) 등 4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법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여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자치권을 보장해 주고,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환경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그중에서도 지역공동체 권리(community rights)와 관련된 조항은 지역개발 과정에 주민 개개인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필요시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직접 공공사업 추진도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이 지역공동체 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자체가 제공해 오던 공공서비스를 지역공동체가 대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역공동체 발언권리(Community Right to Challenge), 지역 내 소규모 부지에 대해 공공에 이익이 되는 공간을

공동체가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역공동체 건설권리(Community Right to Build), 그리고 지역 내에 공공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지역의 자산으로 등록하여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역공동체 입찰권리까지 크게 세 가지 공동체 권리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지역공동체 입찰권리는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공동 소유권으로 환원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잠재적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2012년 제정된 지역공동체 입찰권리제도는 스코틀랜드 지방정부가 2003년 수립하여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 구입권리제도(Community Right to Buy)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지역공동체 입찰권리행사를 통해 특정 지역에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지역공동체가 앞장서 지역자산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영국 전역에 마련된 것이다.

이 제도의 실행을 위해 영국 중앙정부는 우선 지역주권법의 5편 3장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가 지역자산목록(List of Assets of Community Value)을 작성하도록 강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 목록에 등록된 자산을 소유주가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당국에 보고하고 지방당국은 이 정보를 지역공동체에 바로 공유하도록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만약 소유주가 매각하고자 하는 정보가 공개되고 입찰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가 있다면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는 그 지역공동체에 6개월의 유예기간(Moratorium)을 준다. 그 기간에 소유주는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

* Tallon, A. (2013), *Urban Regeneration in the UK*.

** 지역주권법 원문, Localism Act 2011,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1/20/pdfs/ukpga_20110020_en.pdf

지역공동체 입찰권리의 행사 절차



할 수 없고 해당 지역공동체와 매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물론 유예기간 이후 협의가 결렬될 상황에 대비하여 소유주는 유예기간 중 제3자와도 협의를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단 지역자산목록에 등록되고 유예기간이 명시되어 공고된 자산의 경우에는 투자매물로서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6개월의 유예기간 중에 토지 소유주는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와 매각 협의를 하도록 유도된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형태를 살펴보면 공동체 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보증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공익신탁(Charitable Trust) 등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식을 주로 취하게 된다. 영국 하원 국회 도서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총 122개의 지역에서 지역공동체 입찰권리가 발휘되었고 11개의 부동산은 지역공동체가 매입하여 사회적 기업을 운

영하고 있다.* 그중 영국 최초로 지역공동체 입찰권리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런던 아이비 하우스 펍(Ivy House Pub)의 사례를 통해 자금 조성과 조직 운영 등 지역 자산화의 개발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자산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런던의 아이비 하우스 펍

2015년 기준 영국 내 지역자산목록에 등록된 총 1,800여 개의 자산 중 500여 개 이상이 대중술집, 즉 펍(Pub)이다.** 이는 펍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류

* 영국하원 국회 도서관 보고서(2015), 「지역사회 가치의 자산(Asset of Community Value)」, <http://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SN06366/SN06366.pdf>

** 영국하원 국회 도서관 보고서(2015), 「지역사회 가치의 자산(Asset of Community Value)」, <http://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SN06366/SN06366.pdf>

의 장으로 영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런던 남부 서더크(Southwark) 지역에 위치한 아이비 하우스 펍은 영국 내 최초로 지역자산목록에 등록되고, 또한 최초로 지역공동체 입찰권리가 성공적으로 발휘된 사례로 기록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후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930년대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아이비 하우스 펍은 지역 주민들의 크고 작은 행사들, 예를 들어 결혼식·음악공연·반상회 등의 생활밀착형 행사들을 위한 장소로 자주 활용되면서 지역 내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서더크 지역에서 진행된 일련의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변의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고 투자가치 또한 상승함에 따라 아이비 하우스 펍과 같은 소규모의 상점들은 존립 자체가 위협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실제로 2012년 4월 펍의 건물주는 계약 만료일 일주일 전 펍 운영자에게 건물 매각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계약 만료일 이틀 후 펍 건물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엔터프라이즈 인즈(Enterprise Inns)에 50만 파운드에 매각된다. 하지만 주변 부동산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렸던 엔터프라이즈 인즈는 일주일 만에 펍 건물을 75만 파운드에 매물로 다시 내놓게 된다.

이에 아이비 하우스 펍을 지키고자 했던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입찰권리 행사가 가능한 유한회사 형태의 지역공동체(Ivy House Community Pub Limited)를 결성하게 된다. 우선 이 지역 공동체는 대상 건물이 제3자에게 바로 매각되어 재개발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영리 자선단체인 페컴 소사이어티(Peckham Society)와 함께 지역자산(Assets of Community Value) 임명 과정을 진행하여 2012년 10월 해당 건물을 영국 최초의 지역자산목록에 등록시키는 데 성공한다.

그 결과 아이비 하우스 펍 지역공동체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획득하여 지역공동체 입찰 준비를 시작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중간지원 조직인 로컬리티(Localities)가 입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로컬리티는 2011년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조직(National Network of Community-led Organisation)이다. 지역주권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아 신생 지역공동체들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권리(community rights)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이비 하우스 펍 사례의 경우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 입찰권리 행사를 위한 법률적 조언과 자금마련 지원을 해주었다. 구체적으로 아이비 하우스 펍 지역공동체는 로컬리티의 도움을 받아 건축유산기금(Architecture Heritage Fund)으로부터 55만 파운드, 사회목적투자기관(Social Investment Business)으로부터 45만 파운드의 자금을 확보하여 펍을 81만 파운드에 낙찰받고, 영국 최초로 지역자산에 등록된 공동체 소유의 지역 커뮤니티 펍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성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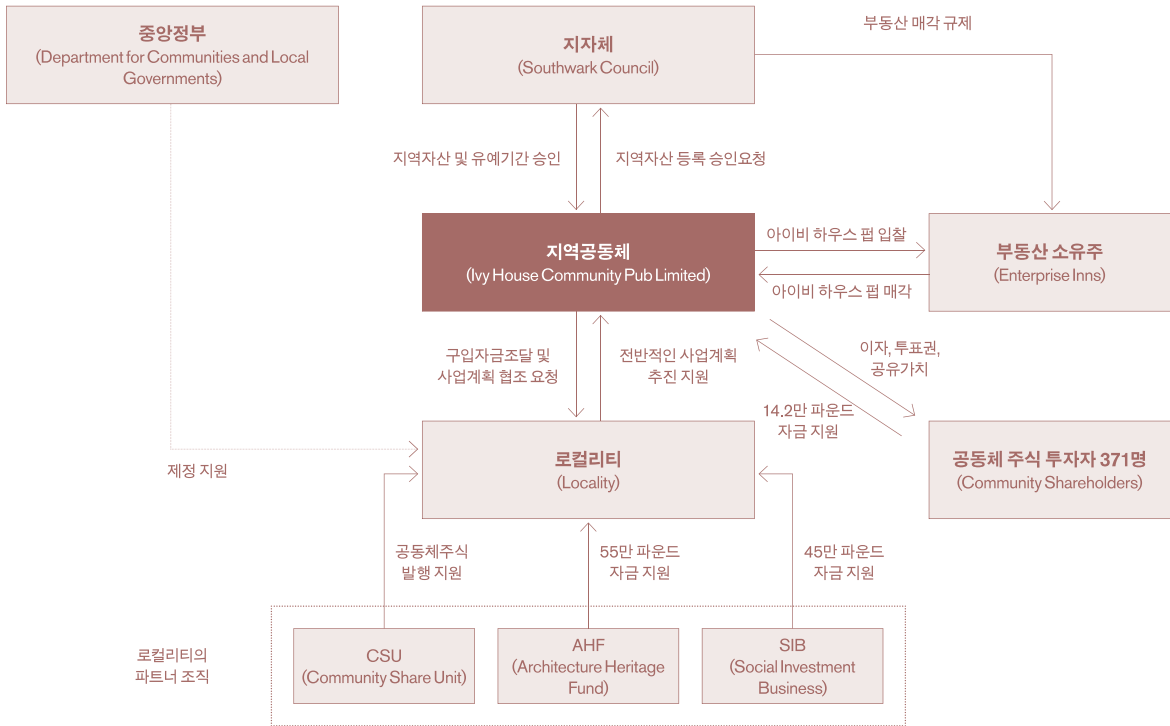
이후 지역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이비 하우스 펍 지역공동체는 로컬리티의 도움을 받아 지역공동체 주식(Community Share)을 발행하였고 총 371명의 지역 주민이 공공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운영자본 14만 2,000파운드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공동체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371명의 공동체주식 소유주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가 설립되었고 중요한 안건들은 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민주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한 운영체

* 로컬리티 홈페이지, <http://locality.org.uk>

아이비 하우스 펍의 입찰과 자금조달 구조

자료: <http://www.ivyhouseunhead.com/>



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전 직원을 지역 주민들로 고용하면서 펍의 소유부터 개발·이용·운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지역자산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시장논리로 강행되는 도시개발 과정 속에서 사라져가는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도시재생 대응책의 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나오며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지양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시대에 우리 도시의 모습들은 토지의 사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가 중시된 개발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배타적 재산권 행사가 보장된 토지 소유권자들은 소유 자산들을 더 많은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배타적 토지의 소유권 행사에서 기인한 투기적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럽의 공공기관들은 우선 지역 내에 공공의 가치가 있는 자산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토지 소유권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놓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토지의 사용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개인 또는 정부의 자산들에 대해서는 그 가치가 적극 공유될 수 있도록 부동산의 재산권을 공유적 형태로 변동하려는 대안적인 정책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다.

2012년부터 영국에서 시행된 지역공동체 입



공동 자산화 이후 아이비 하우스 펍의 모습

자료: 아이비 하우스 펍 홈페이지(<http://www.ivyhousesunhead.com>)

찰권리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지역공동체 입찰권리는 지역 주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 또는 정부의 부동산이 거래시장에 노출되었을 때 민간자본보다 선제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토지가치 공유형 도시재생’이 실현될 수 있는 대안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기안심상가 운영이나 건물주-임대인 상생협약 등의 대안적 정책모델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공유의 개념이 강조되는 도시재생의 환경개선논리 속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공동체 및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토지가치의 상승을 공유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적 환경에서 최소한 지역의 중요한 자산들만은 국유와 사유의 경계를 넘는 제3의 소유영역, 즉 지역

공동체가 함께 소유한다는 ‘토지가치의 공유’ 개념 속에서 의미 있는 변신을 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로컬리티 홈페이지, Locality, <http://locality.org.uk/>(검색일: 2017. 5. 14.)
- 아이비 하우스 펍 홈페이지, The Ivy House Community Pub, <http://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SN06366/SN06366.pdf>(검색일: 2017. 5. 14.)
- 지역주권법, Localism Act 2011,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1/20/pdfs/ukpga_20110020_en.pdf (검색일: 2017. 5. 12.)
- BBC(2014), The Great British Pub, BBC RADIO, <http://www.bbc.co.uk/programmes/p01q4lr7/p01q4hb5>(검색일: 2017. 5. 8.)
- Harvey, D.(2002), "From managerialism to entrepreneurialism: The transformation of urban governance in late capitalism", *The Blackwell City Reader*, pp.456~463.
- House of Commons, Library(2015), Assets of Community Value, Briefing Paper, London, <http://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SN06366/SN06366.pdf>(검색일: 2017. 5. 12.)
- Tallon, A.(2013), *Urban Regeneration in the UK*, London, Routledge.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과 기대효과

조영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윤호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들어가며

2015년 6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고유의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고, 미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은 8개 장과 4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우수 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한옥의 진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옥등건축자산법」 제7조에서는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 이행사항으로 위임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건축자산의 기록·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정보체계는 건축자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 정보 허브로서 건축문화 진흥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건축물 기록·관리 중요성 인식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자산 정보체계 운영

건축자산 정보체계(Architecture Asset Information System)는 건축물의 속성 정보인 1차 정보를 수집·기록하고 수집된 정보의 분석·가공을 통해 2차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목적에 맞게 최종 서비스하는 일련의 플랫폼이다.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수집·기록·관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공간환경·기반시설을 의미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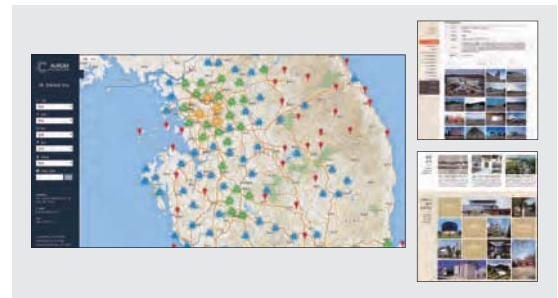
** 법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①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건축물 기록 관리에 대한 논의는 2000년을 전후하여 학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로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2010년을 전후로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반영한 건축 관련 아카이브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대표적 사업으로 목천건축아카이브를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 김중업 건축박물관, 한국건축가협회의 현대건축아카이브 등을 들 수 있다.

2007년 건축·도시공간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설립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자산 정보체계 수립을 위한 여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건축·도시정책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정보체계는 도시명소, 국내 주요 건축자산 정보를 연구소에서 직접 수집하여 구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정보의 생산과 구축·유통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원시적 정보체계라 할 수 있다.

건축자산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원은 정보 특성상 공공이 많아 이에 대한 정보이용권한을 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4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내 주요 건축상을 주최하는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상, 한옥공모전, 공공건축상 대상, 신진건축사대상 등 주요 건축자산에 대한 정보의 이용권을 득하고 2016년부터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축문화제의 주요 수상작에 대한 이용권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확보하였다. 이렇게 원시적 자료수집 방식의 체계화를 통해 본격적인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도로 공공 분야 건축자산에 대한 정보체계가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인 아우름(www.aurum.re.kr)에는 11개 유형의 건축상, 총 2,214개(2017년 5월 기준) 수상작 정보가 전자지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자산 온라인서비스 화면
자료: www.aurum.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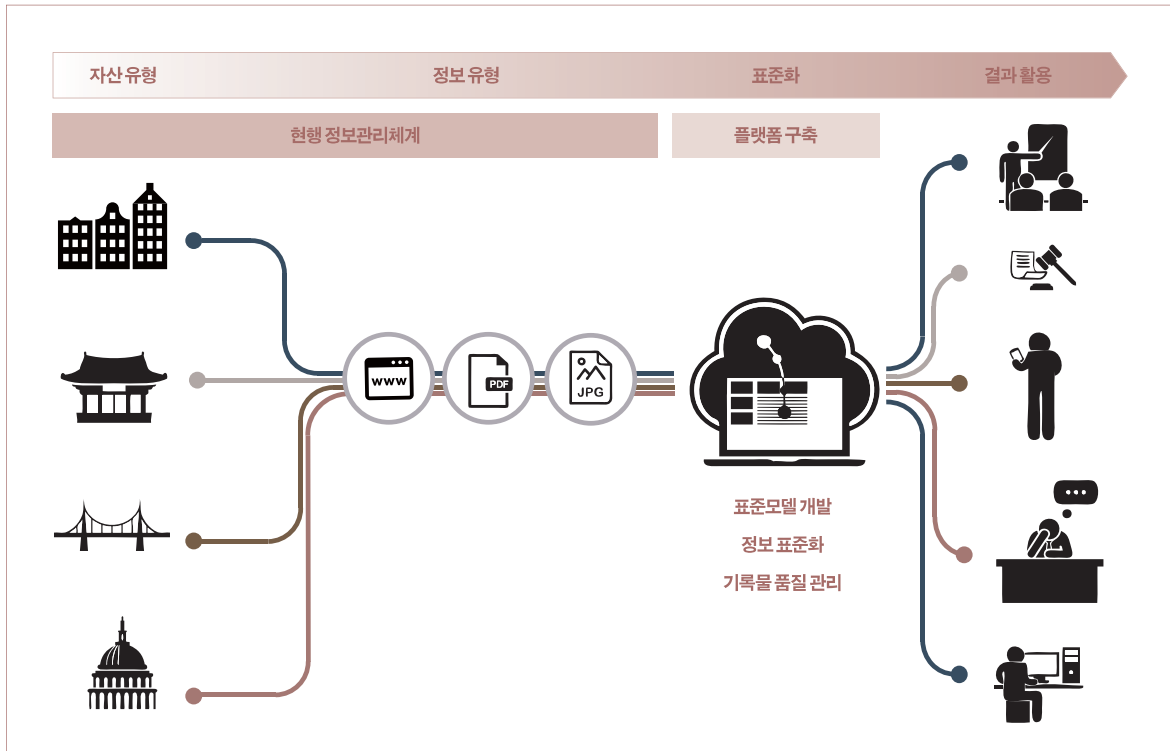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의미와 목적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사업은 2000년을 전후하여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조사사업 결과는 국내 건축자산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정보이지만, 결과물의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체계 부재로 조사 당시의 결과물이 현행화되지 않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졌다. 또한 조사 주체가 조사 결과를 디지털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자료가 멸실·누락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협의적 의미는 조사된 건축자산 정보의 누락과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 결과를 디지털로 저장 관리하는 정보화를 지칭한다. 광의적으로는 구축 정보 분석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체계를 포함하여 정보의 수집·가공·분석·서비스라는 일련의 플랫폼을 의미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보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요즘 건축자산 정보체계는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광흠 외(2007), 「건축도시공간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등 다수

** 전국건축문화자산 조사사업(1999),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사업(2002~2005),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일제조사사업(2005~2008),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1999~2003), 충남의 건축(1999) 등 중앙과 지자체에서 지역 건축자산 현황 파악을 위한 각종 사업이 이루어졌다.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목적은 ▲첫째, 자료를 수집하고 ▲둘째, 자료를 디지털화 및 표준화하며 ▲셋째, 표준화한 정보를 정책·연구·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정보의 수집·가공·분석·활용 과정이 자동으로 순환되는 ‘정보의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는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정보 흐름이며, 건축자산 정보체계 각각의 과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배경

2015년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시행으로 광역지자체의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자산 정보

체계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개발한 건축자산 정보체계 시스템을 이용해볼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매뉴얼>을 2016년에 공동 발간하였다.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 건축자산 정보시스템의 통합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건축자산 정보시스템 관리항목이 해당 법령의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차이가 없고, 해당 법령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에서 각 지역의 건축자산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는 2016년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특히 시스템을 공동 활용할 경우 정부 예산 절감, 주요 정책목표

의 효율적 달성, 이미 구축된 데이터 공동 활용, 데이터 표준화, 부처 및 지역 간 정보소통과 협업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예상되었다.

추진 과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토교통부는 2017년 4월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였다. 시범사업 공모 시 해당 지역의 건축자산 현황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자산 보유 현황을 검토한 후 서울시·경기도·전라남도(목포·영암)를 최종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건축자산 기초조사 등 관련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목포시와 영암군은 건축자산 조사 및 한옥을 활발히 조성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주요 내용

• 건축자산 공동 활용 시스템 개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모델을 개발해 왔다.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건축자산 기초조사 양식을 기반으로 해당 모델을 고도화하여 시범사업에 사용

할 건축자산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건축자산 신규 등록, 건축자산 검색, 건축자산 수정·삭제, 광역건축자산 지정, 우수건축자산 선정이며, 주요 데이터 항목은 정리번호·명칭·주소·용도 등 건축자산 기초조사 양식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건축자산 입력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목록조사, 기본조사, 심층조사 3단계로 구분하고 건축자산 기초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자료(관련 보고서, 수상이력, 도면 등)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 건축자산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공무원 교육은 건축자산 정보시스템의 구조와 활용, 자료의 수집·가공·입력 및 관리, 콘텐츠 기획·개발, 관련법에 대한 실무자 이해도 제고 등 건축자산 정보체계 전반에 대한 실무자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 각각의 교육은 사업의 단계별 이행 시기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며, 통상적인 공무원 교육보다는 세미나·회의·자문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 보유 자산 정보의 현행화

보유 자산 정보의 현행화는 건축자산 정보의 디지털화 및 목록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적으로는 정보수집, 아날로그 정보의 디지털화, 수집 정보의 분석·가공을 수행한다. 또한 정보 통합을 위한 정보 이관 및 자료 통합,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한옥등건축자산법」 제6조에서는 건축자산 정보를 관련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지자체 보유 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화하고,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아카이빙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시스템 자료 신규 등록 화면 예시



있는 건축상 수상작 정보와 한옥 정보,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정보를 건축자산정보시스템으로 이관하여 통합할 예정이다.

- 수집 자료 분석을 통한 건축자산 콘텐츠 기획·개발

건축자산 활용 콘텐츠는 일반 대중을 위한 홍보 콘텐츠와 정책이나 시책 발굴을 위한 정책 콘텐츠로 구분할 수 있다. 홍보 콘텐츠는 지역명소와 자산정보를 활용한 건축자산 홍보책자나 건축테마지도 등이 있으며, 건축자산 위치정보를 활용한 건축문화진흥구역 후보지 선정과 지역별 통계정보 생성 등이 정책 콘텐츠에 해당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과 중앙부처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기획·개발할 예정이다.

- 사업 모니터링 및 시스템 운영·관리
-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시스템 시범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백업 등의 시스템 운영·관리와 시범사업의 구축 현황 등에 대한 사업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시스템이 시범사업에서 발전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공동 활용하고, 지

속가능성을 가지고 작동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모니터링과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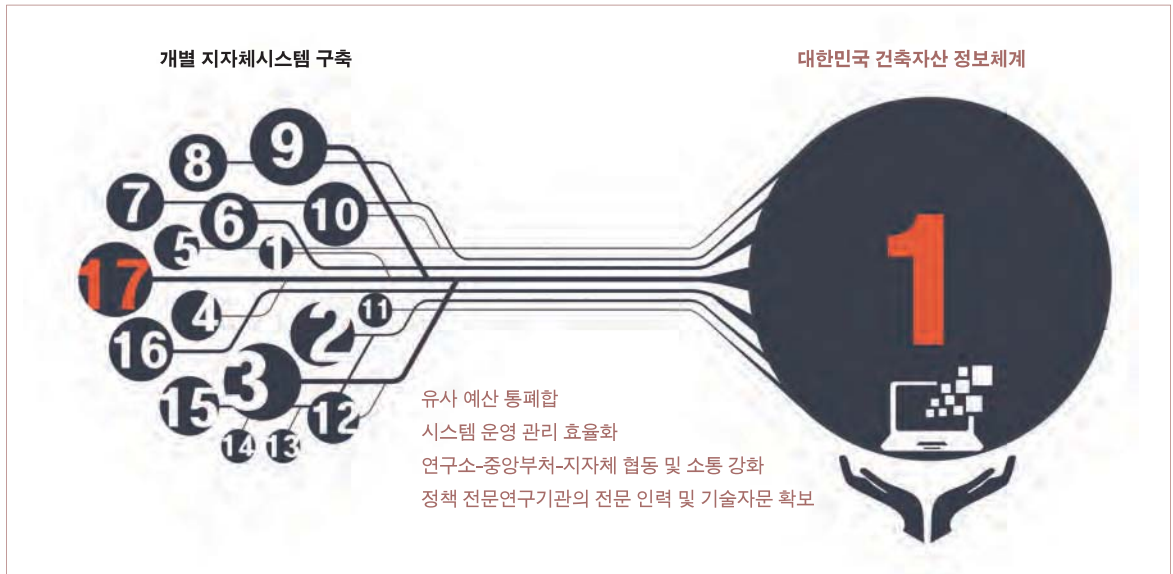
기대효과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의 법정 의무화는 공공에서 건축자산 기록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카이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시행으로 지자체에서는 법정업무를 이행하고 중앙부처에서는 정책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법적 세부 기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별 지자체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개발·운영할 경우 정보의 표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동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정보의 유형·형태·단위 등을 표준화할 수 있다. 이는 향후 학술연구, 정책 발굴, 국가 통계 개발에 필요한 원천자료의 표준화를 의미하며, 제정되고 통일된 정보의 활용은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건축자산 정보 생산에 기여할 것이다.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초기 시스템 개발 비용은 광역지자체별로 5억 원 내외, 매년 유지·관리 비용은 3~4억 원으로 추산되며,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된다. 이를 통합 개발·운영할 경우 전체 지자체에 소요 예산의 약 8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개발 비용만 하더라도 70억 원 이상의 감축이 예상되고, 매년 최대 60억 원의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역시 절감할 수 있다.

정보체계 공동 활용을 통한 인접지역 간의 건축자산 연계활용이 가능하고, 중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해당 정보체계를 통해 맞춤형 정책 사업을 발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구축정보를 공개하여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건축자산 정보의 생성
에서부터 소비까지 건전한 정보 선순환 체계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치며

현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는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세종 · 경기 · 전남 · 경북 · 제주 등
9개 지역에서 수립 시행하고 있다(2017년 4월 기준).
그러나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중 경기도를 제외한 지
역은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이 누락되
어 있는 실정이다. 법률에서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
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상위법과의 불일치 조항이 발
생한 것이다.

건축 아카이브는 일상의 건축 · 도시공간에 대
한 기억으로 아카이브의 부재는 건축 · 도시공간의
기억상실을 의미한다. 이번 정보체계의 구축은 건축
· 공간 환경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근원이다. 이제 막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건축자산 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작동
하고, 삶의 일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건
축도시공간연구소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산관리
주체이자 업무수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2017 미스 판 데 로에 유럽 건축상 발표

<http://www.miesarch.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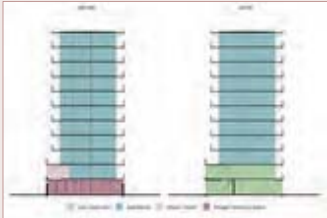
https://ec.europa.eu/programmes/creative-europe/actions/architecture-prize_en

<http://www.archdaily.com/806243/deflat-nl-architects-plus-xvw-architectuur>



©Stijn Poelstra

DeFlat Kleiburg 전경



©NL Architects + Xvw architectuur

프로젝트 전후 단면도



©NL Architects + Xvw architectuur

다양한 아파트 유닛 유형

자료: <http://www.archdaily.com/806243/deflat-nl-architects-plus-xvw-architectuur>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미스 판 데 로에(Mies van der Rohe) 재단이 2017 미스 판 데 로에 유럽 현대건축상 수상작으로 'DeFlat Kleiburg'를 선정하였다. 미스 판 데 로에 유럽 건축상은 유럽연합과 미스 판 데 로에 재단이 2년마다 유럽의 우수한 건축 프로젝트 가운데 문화적·사회적·기술적 측면에서 우수한 건축물을 기리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DeFlat Kleiburg는 암스테르담 바일머(Bijlmer)에 위치한 높이 400m,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이다. 5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네덜란드의 아파트 건물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바일머 지역에서 1960년대 주거단지 개발이 추진되면서 1971년 Kleiburg가 건설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 지역의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벌집 모양의 슬래브들은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대체되었지만, 일부 상징적 공간은 그대로 남아 떠나지 않은 주민들의 '은신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모더니즘의 상징이자 지역의 역사를 함께하며 남아 있던 Kleiburg가 결국 철거 위기를 맞게 된다. 그리고 이를 철거 없이 되살리기 위해 제안된 아이디어가 바로 'Klusflat'이다. 'flat'에 합성된 'Klussen'이 'DIY(Do it Yourself)'를 뜻한다고 할 때, Klusflat이 '주민이 만들어 완성하는 아파트'를 의미한다는 것이 짐작 가능하다.

아파트의 주요 구조는 그대로 남겨두었지만 아파트 내부는 덜 지어진 채로, 가구 없이 입주자에게 제공된다. 일례로 주방, 샤워실, 방(room), 난방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입주자는 아파트 공간을 매우 낮은 가격에 구매하여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하고 완성할 수 있다. 아파트가 가지기 쉬운 획일성을 지양하고, 다양성과 인간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는 방식부터 공동소유 방식까지 중산층과 빈곤층이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저렴주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심사위원들로부터 받기도 하였다.

더불어 1층에 있던 창고공간을 지상 층으로 옮기고 1층에 주거공간, 사무실, 탁아소 같은 상호작용의 공간을 배치하는 등 건물 내부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기존에 유일한 사회적 활동 공간은 아파트 근처의 공원이었는데, 이러한 배치를 통해 입주민들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공간이 확장되었다. 내외부를 구분하고 다소 방어적 느낌을 주었던 불투명 유리창은 투명한 이중 유리창으로 교체되어, 입주자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성을 보여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 입주자들에게는 파사드 모듈 카탈로그도 제공되는데, 이 카탈로그를 슬라이딩 도어나 이중 문과 식물을 위한 셋백(set-back) 공간 등 입주자들이 자신의 아파트 공간과 어울리는 외관을 만드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차량 소유 감소에 따른 변형 가능한 주차장 설계 경향

<http://www.latimes.com/business/la-fi-car-future-real-estate-20170405-story.html>

<https://www.curbed.com/2017/4/26/15421594/parking-garages-driverless-cars-gensler>



© Gensler

다른 용도로 변경 가능한 주차장 설계안



© Gensler

차고를 코워킹 스페이스로 리모델링한
노스웨스턴대학교 사례

자료: <https://www.curbed.com/2017/4/26/15421594/parking-garages-driverless-cars-gensler>

최근 LA 타임스는 “라이드셰어링, 카셰어링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차량 소유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 아래 재개발에 용이한 구조로 주차장을 설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업체 가운데 하나인 아발론베이 커뮤니티(AvalonBay Communities Inc.)가 4년 뒤 완공을 목표로 LA 시내에 대규모 주거용 복합단지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때 주차장을 이후 다른 용도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아발론베이 커뮤니티의 이러한 계획은 ‘우버 같은 라이드셰어링 서비스나 자율주행 차량의 등장’이 차량 소유를 감소시킬 것이고 곧 주차장 공간에 대한 필요와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여타 주차장과 달리 경사지지 않고 평평하게 설계된 이 주차장은 이후 상점이나 운동시설, 극장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로브(Grove)와 같은 고급 쇼핑센터의 소유주인 릭 카루소(Rick Caruso)도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구글과 함께 작업하고 있으며, 이후 쇼핑물의 주차장을 아파트와 식당·상점으로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젠슬러(Gensler)의 공동대표이자 건축가인 앤디 코언(Andy Cohen)은 2025년까지 다수의 미국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라이드셰어링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차량 소유율은 2020년 정점에 달하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코언은 차후에 주차장을 사무실 공간으로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천장을 통상보다 높게 계획해야 하고, 지상 주차장의 경우 이후 창문을 만드는 것을 사전에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조지워싱턴대학교 부동산·도시분석센터(Center for Real estate & Urban Analysis)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토퍼 라인베르거(Christopher Leinberger)도 향후 20년 사이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주차공간의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의 등장이 주차공간의 수요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정교한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사람들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부르는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렌트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량 소유가 줄어든다는 것이 라인베르거의 설명이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새로운 보행자 공간 공식 개장

<http://www.timessquarenyc.org/mediapress/news-detail/index.aspx?nid=263#.WSTul5LyUk>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978-16/de-blasio-administration-completion-times-square-re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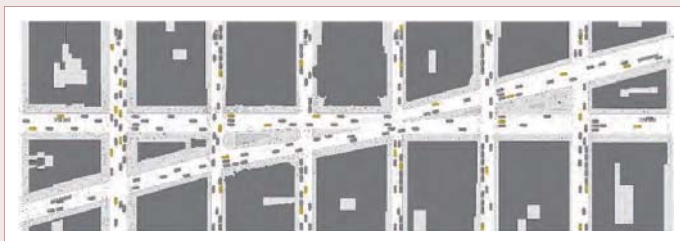
<http://snohetta.com/project/9-times-square-reconstruction>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새로운 보행자 공간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 4월 19일 타임스 스퀘어 얼라이언스(Times Square Alliance), 시의원, 뉴욕 교통국과 디자인·건설국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타임스 스퀘어의 새로운 보행자 공간 공식 개장 행사가 열렸다.

타임스 스퀘어는 엔터테인먼트와 문화, 도시생활의 중심지로 불려왔다. 그러나 가로공간과 보도·하수도과 같은 지하 기반시설 등 물리적인 조건이 악화되면서, 그 상징성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타임스 스퀘어 재조성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2009년 42번가와 47번가 사이 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 지역을 영구히 보행자도로로 조성하는 사업이 구상되었다.

설계는 노르웨이 건축사무소인 스노헤테(Snohetta)가 맡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사이트는 그 형태 때문에 ‘보타이(bowtie)’라 불리는 타임스 스퀘어 중심 공간으로, 보행자도로가 확장되고 ‘보행자 광장(pedestrian plaza)’이 조성되면서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11만 제곱피트 증가하였다. 이는 기존보다 보행자 공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서쪽으로 포트 어소리티 버스 터미널(Port Authority Bus Terminal), 동쪽에 그랜드 센트럴 역(Grand Central Station)을 둔 타임스 스퀘어는 도시의 중요한 관문으로, 하루 평균 33만 명의 사람이 오간다. 새롭게 조성된 보행 공간은 보행자들의 순환 방식과 속도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보행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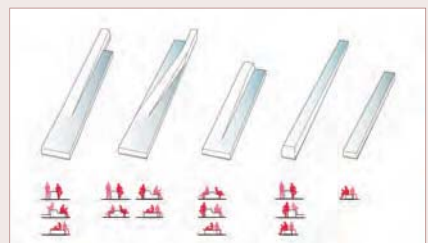
©Snohetta



상 타임스 스퀘어 보행자 공간 조성 전

하 타임스 스퀘어 보행자 공간 조성 후

자료: <http://www.timessquarenyc.org/mediapress/news-detail/index.aspx?nid=263#.WSTul5LyUk>



©Snohetta



상 화강암 벤치 계획

하 동전 크기의 철제가 부착된 보도 포장재

타임스 스퀘어 보행자 공간과 방문객들의 모습

자료: <http://www.timessquarenyc.org/mediapress/news-detail/index.aspx?nid=263#.WSTul5LyIUk>



©Shutterstock

곳곳에 50피트 길이의 화강암 벤치 10개가 다양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데, 새로운 타임스 스퀘어가 지향하는 ‘광장’의 역할을 한층 부각시킨다. 더불어 벤치의 배치를 통해 길 위에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 내고, 사람들이 멈추고 모이도록 하는 등 보행 흐름을 조절하게 된다. 이미 시각적 요소와 자극이 충분한 타임스 스퀘어 가로 환경을 고려해 표지판 등을 배제하고 벤치 등 보다 암시적인 요소를 활용토록 설계함으로써 방문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맞춤 제작된 보도 포장재도 눈길을 끈다. 이 보도 포장재에는 동전 크기의 철제가 붙어 있는데, 브로드웨이의 옥외 광고판 빛이 반사되어 흩어지도록 하여 방문객들에게 타임스 스퀘어를 찾는 재미를 더해 줄 예정이다.

타임스 스퀘어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2014년 첫 보행자 공간이 공개된 이래로 보행자 부상이 40%, 자동차 사고가 15%, 전반적인 범죄사고는 2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에 차량이 지나지 않게 되면서 공기 오염도도 6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80% 이상의 방문객이 타임스 스퀘어가 보다 안전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3%의 방문객이 보행자 공간이 타임스 스퀘어를 더 즐거운 공간으로 만든다는 데에 동의하였으며, 88%의 뉴욕 시민들도 보행자 공간이 타임스 스퀘어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답하였다.

뉴사우스웨일스, 새로운 주택 유형 개발 위한 설계공모전 개최

<https://www.nsw.gov.au/news-and-events/news/designing-the-future-of-housing-nsw/>

<http://www.planning.nsw.gov.au/About-Us/Office-of-the-Government-Architect/Design-competition>

<http://www.planning.nsw.gov.au/Policy-and-Legislation/Housing/Medium-Density-Housing>

뉴사우스웨일스 주가 새로운 규모의 주택 유형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작년 부터 진행했던 설계공모전 'Missing Middle Design Competition'의 당선작을 지난 4월 발표하였다.

주 정부는 인구의 증가와 인구구조의 변화,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저렴한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택 수요가 양적으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주택 유형을 발굴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설계공모전을 기획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현재 공급되고 있는 전통적인 형태의 대형 독립주택이나 아파트가 모든 주민들의 필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중층·저층 규모의 주택에 대한 공급과 선택권이 적었던 점을 고려하여 '중간 밀도의 주택(middle density housing)' 모델을 제안하는 설계공모를 통해 새로운 주택 유형을 찾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대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렴한 점 ▲벽을 공유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연효과 등이 더 뛰어난 점 ▲결혼·은퇴 등 생애주기와 변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형태의 옵션을 넓혀 준다는 점을 '중간 밀도 주택'의 이점으로 꼽았다.

이번 설계공모전은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주 정부는 수상작 중 일부를 시범주택으로 실제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Missing Middle Design Competition 공모 부문 및 수상자

유형 부문	유형 내용	수상자
Dual occupancy	하나의 대지에 두 채의 주택이 들어선 형태	Youssofzay & Hart Architects
Terraces	테라스하우스, 타운하우스	Platform Architects
Manor houses	3~4채의 소규모 저층 주택이 하나의 대지에 지어진 형태	Madigan Architecture,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middle density housing 개념

자료: <http://www.planning.nsw.gov.au/Policy-and-Legislation/Housing/Medium-Density-Housing>

일본 국토교통성, 「자전거활용추진법」 시행 및 자전거활용추진본부 설치

[http://www.mlit.go.jp/
common/001182780.pdf](http://www.mlit.go.jp/common/001182780.pdf)

[http://www.mlit.go.jp/
common/001182654.pdf](http://www.mlit.go.jp/common/001182654.pdf)

[http://www.mlit.go.jp/
common/001182653.pdf](http://www.mlit.go.jp/common/001182653.pdf)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6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전거활용추진법」을 2017년 5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법 시행과 함께 국토교통성 내에 ‘자전거활용추진본부’도 발족시켰다.

국토교통성은 자전거가 이산화탄소·소음 같은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재해 시 기동력이 뛰어난 교통수단으로, 그 이용률을 높이고자 「자전거활용추진법」을 제정하였다. 국민들의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교통 혼잡을 줄여 경제적·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자전거활용추진법」에서는 총 14개의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①자전거 전용 도로와 자전거 전용 통행 구역 정비 ②노외(路外)주차장 정비, 시간제한 주차구간 지정 검토 ③세어사이클 시설 정비 ④자전거 경기 시설 정비 ⑤높은 안전성을 갖춘 양질의 자전거 제공 체제 정비 ⑥자전거 안전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 및 자질 향상 ⑦정보통신기술 등 활용에 의한 자전거 관리 최적화 ⑧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계발 ⑨자전거 활용에 의한 국민 건강 증진 ⑩학교 교육에서의 자전거 활용을 통한 청소년 체력 향상 ⑪자전거와 공공교통기관과의 연계 촉진 ⑫재해 시 자전거의 효과적인 활용 체제 정비 ⑬자전거를 활용한 국제교류 촉진 ⑭관광객 촉진 및 그 밖의 지역활성화 지원 등이 주요 시책으로 추진된다.

또한 「자전거활용추진법」에서는 ‘자전거활용추진본부’ 설치를 통해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어, 국토교통상을 비롯해 각계 관료로 구성된 자전거활용추진본부가 법 시행과 함께 발족하였다. 더불어 도로국에 본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도로국장이 사무총장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바르셀로나, 도시 녹지 확대 계획 발표

<http://ajuntament.barcelona.cat/premsa/2017/05/15/ajuntament-de-barcelona-incrementara-44-hectarees-de-verd-entre-2015-i-2019-i-en-165-hectarees-a-lhoritzo-2030/>

http://eldigital.barcelona.cat/en/more-greenery-for-a-healthier-city_508531.html

<https://www.citylab.com/cityfixer/2017/05/barcelona-green-urban-forest-climate-plan/526998/>

바르셀로나의 도시 내 녹지가 2030년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도시 내 녹지공간을 2019년까지 44ha, 2030년까지 165ha 늘리는 계획인 '도시 녹색인프라 확대 프로그램(Program of Promote Urban Green Infrastructure)'을 지난 5월 발표하였다.

계획은 세 가지 주요 시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녹색인프라를 늘리는 것 ▲둘째, 기존의 녹지공간을 보다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 ▲마지막으로 초목과 종 다양성 증진을 위해 시민들 간 공동 책임을 늘리는 것이다.

시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2019년까지 공원, 광장, 정원, 블록 녹지 공간, 공공공간의 녹지 등을 늘리고 정비해 도시 내에 44.4ha의 새로운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검토해 2030년까지 165ha의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시 환경위원회 위원인 프레데릭 시메노(Frederic Ximeno)는 "세계 보건기구(WHO) 권장 1인당 녹지 비율이 15m²에서 20m²인 데 비해 바르셀로나의 시민 1인당 녹지 비율은 7m²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전역으로 녹지 공간을 고르게 확대·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보다 자연적인 녹색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나무를 심고 연못을 조성하며 '곤충호텔(insect hotel)' 등 곤충과 새·박쥐 등이 쉽게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또한 공공 정원과 도시 텃밭 등 녹색인프라 조성 관리에 시민들의 참여와 역할이 강조될 예정이다. 단순히 시 정부가 나서서 하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자체적인 운영을 독려한다는 목적에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와 도시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옥상에 옥상녹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모전도 열 예정이다.



바르셀로나 녹지 분포 현황

2019년까지 녹색인프라 조성 계획

자료: <http://www.ajuntamentbarcelonaprensa.info/download/infraestructuraverda.pdf>

도시재생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협업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2017.4.10.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공동으로 도시재생 정책 자문기구인 ‘도시경제 자문위원회’와 현장 지원을 맡는 ‘도시경제 지원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공공기관·학계·업계 전문가 20인 내외로 구성되어 도시 분야 사업·금융 지원 방향 결정,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사업 발굴 등의 자문 응대를 진행한다. 도시경제 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총괄하되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LH가 사업지원센터, HUG가 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각 센터는 사업 발굴부터 관리(인큐베이팅), 금융 건설팅, 사업 구조화 등 도시재생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자체·민간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두 기관은 전국 11개 LH 지역본부 및 13개 HUG 지사를 활용한 거점별 현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밀착형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전국 지자체·민간사업자 대상 사업 발굴과 금융상담 업무를 벌여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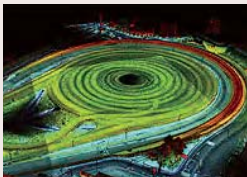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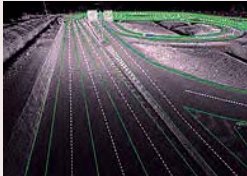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이후 선도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자문 위원회와 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실무 지원 시스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며 “LH와 HUG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자체·민간기업 맞춤형의 체계적 사업·금융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뿐 아니라 주민 주도형 소규모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지원 사업을 발굴해 민간 참여형 도시재생이 원도심 경제 활력 창출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경제 지원센터 사업 추진 프로세스

단계	수행 내용	주체
사업 발굴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 발굴	지자체 → 지원센터
코디네이팅	사업구조 설계	사업지원센터(LH)
재무 구조화	자금조달 구조 설계	금융지원센터(HUG)
기금지원 사전검토	도시경제 지원 여부 사전 검토	자문위원회
사업 추진	도시재생리츠 설립 및 사업 시행	지자체, 민간, 기금

자율주행 시대 대비하는 '3차원 정밀도로지도' 구축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2017.4.28.



대구규제프리존 정밀도로지도

자료: 국토교통부(2017), "3차원 정밀도로지도"로 자율주행 시대 준비",
4월 28일자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대구규제프리존과 여의도 일대 등의 '정밀도로지도'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정밀도로지도는 도로 규제선(차선, 정지선, 경계선 등), 시설(중앙분리대, 터널, 교량 등), 표지정보(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기 등)를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 개발(자차 위치, 경로 설정 변경 등)과 이를 위한 도로 교통체계 고도화에 기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15년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 구간 등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 시범 구축하여 2016년 12월부터 민·관에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정밀도로지도가 공개되는 구간은 2016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구축한 자율주행 시범운행구간 2개 노선과 대구규제프리존(자율주행 특화도시), 여의도 일대까지 총 194km이다. 이번 지도에는 자율주행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과속방지턱,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주 시설 등이 보완·개선되었다. 또한 차량기반 멀티센서 측량시스템(Mobile Mapping System: MMS)*을 통해 지도를 구축할 때 취득하는 포인트 클라우드(레이저 반사파를 이용한 3차원 위치정보)도 추가로 온라인 공개된다. 더불어 2015년에 구축된 약 277km 구간**의 정밀도로지도 또한 동일하게 개선하여 제공한다.

현재 정밀도로지도는 44개 기업과 기관에서 자율주행차 개발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어 그 활용도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의도 일대의 정밀도로지도는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중심 시가지에 대해 처음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 사례로, 도심지 내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차량 등에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라이다(LiDAR), 카메라 등 각종 센서를 탑재하여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와 시각정보를 취득하는 시스템

** 자율주행 시범운행 3개 구간, 첨단자동차 주행시험장, 일부 고속도로(서울 톨게이트·신갈 분기점·호법 분기점)

건축물 지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7.5.12.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8월경 공포될 예정이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였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명확화 |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 없이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 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 중 저층 건축물은 지하굴착 깊이가 알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형 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빈집의 효율적 정비·관리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2017.5.16.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적·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빈집 제외 대상 규정 |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하였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요건 구체화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인면서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일 때 실시하도록 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빈집 판정 시점 기준 마련 |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 '확인한 날'에 대한 시점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 일자를 '확인한 날'로 보고 빈집을 정하도록 하였다.

* 일단의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함

지자체의 청년주거 지원정책 가시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2017.4.7.

서울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2017.4.17.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2017.5.8.

경기도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2017.4.9.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2017.4.21.



청년 창업오피스텔과 내부 네트워킹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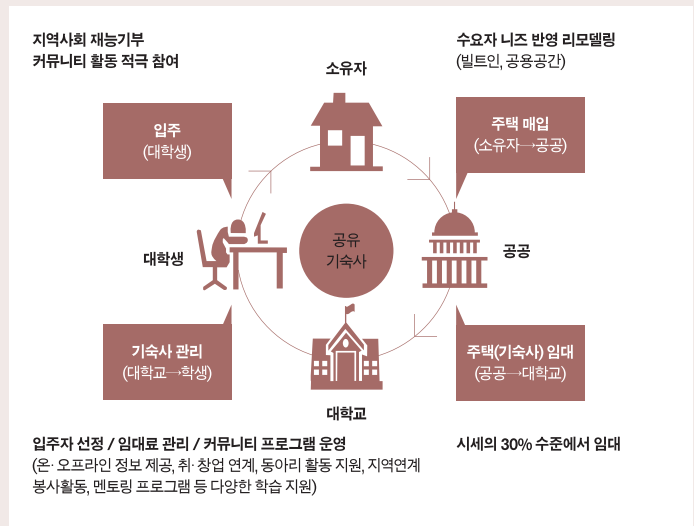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2017), “한 지붕 20명…서울시
청년창업가들 ‘함께 살기’ 첫 시도”, 4월 7일자 보도자료.

서울시, 젊은층 위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

주거와 창업 결합한 ‘청년 창업 오피스텔’ 공급 | 서울시가 노후 건축물을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7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청년 창업오피스텔’은 청년 사업가들에게 다른 청년 창업자와 네트워크 조성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신촌 지역의 낡은 모텔을 시가 매입해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며, 주거 및 업무공간은 물론 회의실, 강연·교육 등이 가능한 네트워킹 공간이 마련된다. 8개 팀 총 20여 명이 입주하고, 별도의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지불하고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확대 | 노후 고시원, 여관, 모텔 등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청년 1인가구에게 제공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도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확대 공급된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비주택을 매입·임대해 리모델링 후 청년 1인가구(무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게 최장 6~10년 동안 시세 80%의 임대료로 제공하게 된다.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40호가 공급되었던 것을 올해는 대폭 늘려 290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대학생 공공기숙사 공급 |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임대 분량을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로 공급하는 안도 추진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가 민간사업자에 용적률·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 방식으로, 이 가운데 10~25%를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 대비 60~80%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임대주택 분량(10%~25%)을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마포구·서대문구·관악구 등 대학생 주거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공공기숙사에는 스터디 카페·창업지원공간 등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사업에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해당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일부를 공공기숙사로 제공받는 대신, 기숙사 운영비 등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시는 타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참여 지자체 확정 후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공유기숙사 조성 주체별 역할

자료: 경기도(2017), "청년 제한 공유기숙사 경기도 정책했다. 안양대서 시범사업", 4월 9일자 보도자료.

경기도, 청년이 직접 제안한 '공유기숙사' 시범사업 실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경기도에 제안한 공유기숙사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공유기숙사는 공공이 대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대학생에게 공급하고, 운영은 대학교가 전담하는 정책이다. 도는 '1대학 1기숙사'를 목표로 오는 2021년까지 5년 동안 총 1,480호의 공유기숙사를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안양대학교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안양대학교 인근 200m 내에 있는 다가구주택 2개동을 7월까지 매입 완료하고 8월부터 대학생 입주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도, 창업시설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경북도가 젊은층이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지원주택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시·군·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관련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창업지원주택사업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기존 유형을 활용해 회의실·사무공간·창업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을 복합하고 창업지원시설과 연계해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계층에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청년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지자체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대전시 도시주택국 도시경관과
2017.4.4.

울산시 도시창조과
2017.4.12.

대전시, '2025 대전 도시디자인기본계획' 확정

대전시가 기존 '2020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재정비한 '2025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정비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국내외 도시디자인 사례 분석과 시민의식 조사를 통해 '대전, 도시디자인을 켜다'라는 비전과 '도시디자인으로 구현되는 아름다운 과학도시, 대전'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더불어 실행체계 정립과 선도사업 발굴, 디자인가이드라인 등을 여건 변화에 맞게 조정하고 구체화하였다. 시는 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등을 통합, 지향점을 분명히 하여 일관된 대전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기본계획과 도시디자인지침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환경색채 기본계획의 색채 범위를 개선하였으며 ▲18개의 도시디자인사업을 발굴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7개 선도사업을 선정하였다.

시는 이번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각 자치구, 유관기관·단체에 전파하여 통합 디자인의 기본 틀로서 각종 시책과 관련 사업 등에 반영하고, 심의 및 자문 응대 때 검토 기준으로 활용하여 도시경관에 대한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울산시,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

울산시가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지원사업'에 총 8개 공동주택을 선정·지원한다.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지원사업은 시의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사업지 공모를 통해 29개 공동주택이 신청하였으며, 현장조사와 입주자 대표 면담을 거쳐 16개 공동주택을 1차 선정한 뒤 가구 수, 예산 확보 여부, 노후화 정도 등을 평가하여 8개 사업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는 오는 12월까지 공동주택 색채 디자인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색채디자인 자문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방문해 입주자 대표와 상담하고, 현장조사 및 분석을 통해 색채디자인 조언을 진행하게 된다.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지원사업
진행 전후 모습(부평맨션아파트)

자료: 울산시(2015),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지원",
1월 12일자 보도자료.

원도심 재생과 건축자산 복원을 위한 사업 실시

부산시 도시재생과
2017.4.12.

대전시 도시주택국 도시경관과
2017.5.10.



대전시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계획
자료: 대전시(2017), "대전시,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특화사업 착수", 5월 10일자 보도자료

부산시, 청자빌딩 원형 복원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 실시

부산시는 근대건축문화자산인 청자빌딩의 리모델링 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1918년 건립된 청자빌딩은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인 한성은행 부산지점으로, 당시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가치가 높은 근대유산이다. 2015년 개인에게 매각되어 철거 위기에 놓인 청자빌딩을 시가 매입하였고, 2016년 원형 복원 및 활용을 위한 조사진단 용역과 구조안전진단을 거친 데 이어 실시설계까지 마쳤다.

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외벽 창문 등 청자빌딩의 원형을 최대한 복원하여 역사 문화적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고, 다양한 문화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공유하는 공연·전시·강연·프리마켓·동아리 및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시민들의 생활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대전시,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착수

대전시가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설계 공모의 당선작을 선정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은 대전 원도심 일대에 산재한 10여 개의 근대문화유산*을 둘러볼 수 있는 순환형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탐방로는 대전역~목척교~옛충남도청 관사촌~대전여중~대전역으로 돌아오는 연장 4km의 구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해당 지역이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된 이점을 살려 특구 활성화 사업, 원도심 마중물 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탐방로에는 특화된 디자인 보행로, 바닥명판, 안내 사인물, 그림자 조명, 편의 휴식시설 등이 설치되고, CPTED 기법을 도입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쉽고 편안한 유니버설 보행로로 조성된다.

* 옛 철도청 보급창고, 옛 충남도청상무관·관사촌, 대전여중강당, 대흥동성당, 옛국립농수산품절관리원, 옛 대전부 청사, 목척교, 옛 산업·조흥은행 대전지점

공공의 계획역량을 끌어올리는 네덜란드 정주환경연구소

강빛나래

델프트공과대학교 건축건조환경학부

OTB건조환경 연구단,

토지개발거버넌스 연구부 박사과정 연구원

네덜란드의 공간계획 및 정책, 도시건축 분야의 대표 연구소인 네덜란드 정주환경연구소(Planbureau voor de Leefomgeving: PBL)*는 2008년 출범하였다. 기반시설환경부 산하로, 정주환경과 공간계획 분야에서 다른 대학 단위 연구소가 하지 않는 광범위한 기초연구를 일상적으로 수행한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연구사업과는 차별되게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과 대응에 관해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는 PBL의 연구는 상·하원 논의 중 인용된 횟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PBL 전체 임직원

자료: PBL 2015년 연차보고서(http://www.pbl.nl/sites/default/files/cms/publicaties/20160721%20-%20PBL%20Jaarverslag%202015_def.pdf)

“네덜란드의 공간계획
연구에서 공공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크다. 네덜란드
정주환경연구소는
환경과 자연, 공간계획
분야에서 정부의
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략 연구를
책임지고 있다.”

들어가며

툴립과 풍차, 나막신의 나라로 유명한 네덜란드는 ‘계획가의 천국(The planners’ paradise)’으로도 불린다(Faludi and Van Der Valk, 1994). 다핵화된 도시지역 체계, 정돈된 농촌 경관, 옛 것과 새 것이 조화를 이룬 활기찬 도심, 다양한 건축문화, 대중교통은 물론 자전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연결된 이동체계, 서로 다른 소득계층이 한 동네에 살도록 설계된 주거단지, 야외 레저활동을 하기 좋은 공원과 녹지 등 어디든 주의 깊은 설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신이 지구를 만들었다면,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인이 만들었다(God schiep de aarde, maar de Nederlanders schiepen Nederland)”는 속담이 암시하듯, 거센 물과 바람에 맞서 필요한 정주환경을 함께 힘을 합쳐 만들고 가꾼 네덜란드인은 자연과 공존하는 공간조치 적극적인 ‘조성’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공간계획의 전통, 특히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과 소통적 계획(communicative planning)의 모범을 찾기 쉬운 곳이 네덜란드이다. 사실 현지에서는 정착 네덜란드가 더 이상 계획가의 천국이 아니라는 날카로운 평가도 들린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더 나은 과정과 결과를 위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소리일 것이다. 공공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공공이 집중할 역할과 그 역할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는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정치·사회·경제·환경적 변화를 인식하고 적응하면서, ‘문제 발견과 연구, 해결책 모색, 대안 검토, 정책 결정, 집행, 평가, 반성, 개선’이라는 정책주기의 반복 속에 교훈을 얻고, 지금 이곳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그리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맥락에서 공공 정책주기의 최첨단에 서 있는 공간계획 및 정책, 도시건축 분야의 대표 연구소 ‘네덜란드 정주환경연구소(Plan Bureau voor Leefomgeving: PBL)’를 소개한다.

PBL의 역할

PBL은 기존 공간계획연구소(Ruimtelijke Planbureau: RPB)와 환경자연연구소(Milieu- en Natuurplanbureau: MNP)의 후신으로 2008년 설립되었다. PBL의 공식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현 국토의 환경·생태적, 공간적 질(quality)을 조사·기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정책들을 평가한다.
- ② 국토의 환경·생태적, 공간적 질에 향후 사회 트렌드가 미칠 영향을 탐구하고, 잠재적 정책 대안들을 사전 검토, 평가한다.

* ‘Planbureau voor de Leefomgeving’의 직역은 ‘정주환경계획청’이며, 공식 영문명은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이다. 여기서는 그 역할과 취지에 부합하게 ‘정주환경연구소’라 칭한다.



도시와 관련된 정보와 현황을 파악하여 전달하는 PBL의 인포그래픽

상 도시별 일자리
하 도시 내 소득격차

자료: <http://www.pbl.nl/onderwerpen/ruimtelijke-ontwikkeling/feiten-en-cijfers>

- ③ 국토의 환경·생태적, 공간적 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들을 파악하여 의제화한다.
- ④ 환경과 자연, 공간계획 분야에서 정부의 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가능한 선택안들을 파악한다.

PBL의 설립 배경

2010년 기반시설환경부 산하가 된 PBL의 출범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져 온 네덜란드의 공간계획 및 주택 정책의 진화에도 관련이 깊다. 1901년 주택법 발효 시 이미 주택 개발과 도시계획을 법제상 밀접하게 연결하였을 정도로 주택 공급 전략에 도시계획적 고려요소들을 면밀히 반영해 온 네덜란드 정부는 관련 책임을 하나의 부에 부여했고, 이를 1965년부터는 '주택공간계획부'라 칭하였다. 이는 전후 주택난 해소와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큰 예산을 집행하는 막강한 부였다. 1982년부터는 환경관리 책임도 더해져 해당 부는 2010년까지 '주택·공간계획·환경부(Ministerie van Volkshuisvesting, Ruimtelijke Ordening en Milieubeheer: VROM)'로 존재하였다.

1990년대 들어 건설·공급 측 보조금과 도시재생 지원 예산을 본격적으로 폐지하고, 또 중앙정부는 점차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 기반시설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하는 가운데 2010년에는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중도우파인 자유민주당이 전후 최초로 원내 제1당이 되면서 출범한 1기 쿼터 내각에서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은 내무부로, 환경 관리와 국토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책임은 기반시설환경부(Ministerie van Infrastructuur en Milieu)로 이관되었다. 주택 개발 및 건설 관련 예산은 줄어드는 대신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환경 관리 예산은 비교적 큰 것을 반영하는 조직 개편이다.

이 가운데 공공 부문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유럽연합 지침과 더불어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한 결과, 네덜란드 내 주요 공공지식생산기관은 현재 29개가 남아 있다(Koens et al, 2016). 공공지식 생산기관은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면서도 학문적 연구기관과 구별되고,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연구 수요를 충족하는, 정부 관련 조직이다. 예를 들어 총리실 산하 왕립기후처(KNMI)와 '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 응용자연과학연구소(TNO), 재단화된 수자원연구소(Deltares), 부서 지위의 교통정책연구국(KiM) 등이 있다. 그중 주무부 직속을 뜻하는 '계획청(planbureau)' 지위로는 현재 PBL과 경제부 산하 '경제정책연구소(Centraal Planbureau: CPB)', 보건복지체육부 산하 '사회문화연구소(Sociaal Cultureel Planbureau: SCP)' 등 세 곳이 있다. 이들은 특별히 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마련된 '계획청에 관한 총리령'을 따른다. 정식 명칭이 '계획청'이라 하여 계획 권한을 지닌 것은 아니다. 계획 권한을 지닌 정부가 그 의사결정 시 참고하거나 정책 수립과 개선에 활용할 만한 분석과 정책 검토, 평가, 예측을 독립 연구소로서 제공한다.



PBL의 조직 체계와 연구 성향

PBL은 현재 7개의 연구국이 있다. '기후와 대기, 에너지', '지속가능한 개발', '공간 계획 및 지역환경의 질', '도시화와 교통', '자연과 농촌', '물과 농업, 먹거리', '정보와 데이터, 방법론'까지 주제별로 편성되어 있다. 또 2개의 행정국이 '대외공보 및 지원'과 '조직인사 관리'를 담당한다. 200여 명의 직원 중 80%가 연구직이다. 전 공은 계획학, 사회학, 도시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생물학, 수학, 농업기술학 등 다양하다. 이는 소속 주제국에만 매이지 않고 연구 질문에 따라 팀을 결성하여 학제 간 협력과 통합 연구를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다.

PBL이 수행하는 연구 과제는 매년 연구계획과 연구소 재정 결산보고서로 그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연구 과제는 주로 기반시설환경부 외에도 주거복지 및 주택 개발의 역사, 유럽연합의 영토 상 응집력(territorial cohesion) 강화 등 주제별 필요에 따라 내무부·경제부·외교부 등 다양한 정부 조직으로부터 받고 있다. PBL의 연 수입은 2014년 기준 약 3,020만 유로(약 381억 원)로 그 규모가 총 29개 공공지식생산기관 중 14위이다.

PBL 초대 원장은 계획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마르틴 하여르(Maarten Hajer) 교수가 맡았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는 <환경담론의 정치학(The Politics of Environmental Discourse)> (Oxford, 1995)을 집필하고, 이후 <숙의적 정책 분석 –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거버넌스 이해(Deliberative Policy Analysis – Understanding Governance in the Network Society)> (Cambridge, 2003, 공저)를 공동 편찬하였으며, 암스테르담대학교 공공정책학 교수와 2016년 로테르담 국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등을 역임하였다. 현 2대 원장은 틸부르흐대학교 '법과 지역 거버넌스 연구소'에서 지역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한스 모마스(Hans Mommaas)이다.

이러한 인선은 공간계획과 공적 지식의 생산에 대한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관점을 반영한다. 즉 공간계획이 사실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문제 정의와 공적 의제화, 해결책 모색과 적용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지식의 객관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가능성 있는 선택지들을 탐색하여 이를 다양한 사회적 가치관에 비춰 검증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공간계획 정책의 포괄적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 관점에서 공간계획은 정치적 결정에 앞서 그 결정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닦고 넓히는 역할을 하며, 이는 PBL이 지향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PBL의 주요 연구 주제와 출판물

따라서 PBL 내 7개의 연구국은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며, 빠른 사회 변화 속에 시급한 혁신적 연구 주제들도 심도 있게 다룬다. 먼저 다년에 걸쳐 집중하는 전략적 주제로는 '물, 에너지, 먹거리 전략 간 통합과 기회(농촌의 생태다양성과 먹거리, 물관리)', '친환경 순환경제 만들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도시의 미래', '주택시장의 변화와 부동산', '네덜란드의 공간적 불평등(농촌 지역의 과업과 가능성)', '유럽 내 네덜란드 및 도시지역 간 공간적 경쟁력과 경제적 네트워크' 총 7개

“7개의 연구국은
빠른 사회 변화
속에 시급한 혁신적
연구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며,
각 주제에 수년 간
집중하는 장기 연구
과정에서 매년 크고
작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가 있다. 각 주제에 수년 간 집중하는 장기 연구 과정에서 매년 크고 작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외에 정기보고서는 네덜란드 전체의 인구학적 공간변화 분석 및 예측, 국토 공간계획 정책 평가 및 전망 등 PBL의 핵심 임무 네 가지에 일차적으로 충실한 보고서를 뜻한다. 그 예로 ‘2016년 전국 도시지역 공간 분석과 합의:편향된 성공(Ruimtelijke Verkenningen 2016: De verdeelde triomf)’, ‘기반시설과 공간 모니터링(Monitor Infrastructuur en Ruimte)’, ‘지역별 인구 및 가구 구성의 변화 추계(Regionale Bevolkings- en huishoudensprognose)’, ‘국토 에너지 현황(Nationale Energieverkenning)’ 등이 있다. 특히 ‘정주환경 현황(Balanse van de Leefomgeving)’은 PBL이 통계청(CBS) 및 바허닝언(Wageningen)대학교와 공동 개발해 운영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네덜란드의 자연환경과 공간에 대한 각종 통계와 수치, 700여 개 지표에 대한 값을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학계·언론계에서 접속하여 활용하고 있다.

단기 연구보고서로는 ‘국토 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한 중점 의제 설정 보고서(Omgevingsopgaven voor de Nationale Omgevingsvisie)’, 하원의 의회를 받아 CPB 및 SCP가 공동으로 수행한 ‘포괄적 웰빙 개념 정립(Breed welvaart-begrip) 및 삶의 질 측정 지표 개발 보고서’ 등이 있다.

이러한 PBL 연구활동의 부산물로 동료평가를 거쳐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영문 소논문은 2014년 83편, 2015년 47편, 2016년 87편이었다. 즉 PBL 소속 연구원들은 수행한 연구과업과 관련된 학문적·이론적 반추 결과를 학술지 논문 형태로 국제 학계에 활발히 발표하고 있다.

PBL의 연구성과 관리와 평가

PBL은 연구결과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반시설환경부가 임명해 구성하는 ‘감독 위원회’로부터 1년에 최소 세 번 연구활동에 대한 정기 검토를 받는다. 그 외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에 관해 학문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결과를 꾸준히 내놓기 위해 연 단위에 국한되지 않는 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해 매년 갱신하고, 5년마다 외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평가위원회의 방문 감사를 받는다. 내부적으로는 연구팀 간 교류를 위해 내부 세미나를 수시로 열고, 외부 전문가도 초청하여 관련 주제를 토론하는 PBL 자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PBL 연구원의 외부 강연 및 공개 발표, 기고도 장려된다. 또 연구윤리나 학문적 진실성에 대해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는 내부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다. 보고서 초안에 대해서는 외부 연구자 또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주환경 관련 정보와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대외에 공개, 공유한다.

연구가 실제 정책 결정 및 사회적 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평가, 즉 연구성과 평가는 기본적으로 ①장기적으로 다년간 집중하는 전략 주제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와 새로운 발견을 내놓았는지에 대한 정성적 평가, ②상·하원에서 정책에 관한 공개 질의응답과 토의에서 PBL보고서가 얼마나 인용되었는지에 대

“불확실한
사회·경제·환경적
조건에 반응해 한 발 앞서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현재의 정책과 제도상의
미비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가능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정량적 평가(2016년 199번), ③온라인 및 신문·라디오·TV 등 각종 언론 매체에서의 PBL보고서 다운로드 및 언급, 보도자료 활용, 보도 횟수에 대한 정량적 평가로 이뤄진다.

닫는 말

네덜란드 공간계획의 특징은 ‘통합성’과 ‘정합성’이다. 도시·건축·조경 계획에서 광역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 전략에서 교통·에너지·주거·일자리 등 부문별 정책(sectoral policy)의 목표와 전략이 서로 조화되도록, 부문별 정책 목표가 지닌 공간적 함의를 분석하고 조율하여 그 고려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공간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이 최대한 사업화 단계에 반영되도록 힘써 왔다. 또 ‘토지 용도’와 ‘이해관계자’, 토지 용도를 실현할 ‘자원’이라는 세 가지 요소 간의 합리적 관계 설정도 중요하게 여겨왔다.

이런 ‘통합성’, ‘정합성’이란 특징은 PBL의 조직과 연구활동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불확실한 사회·경제·환경적 조건에 반응해 한발 앞서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현재의 정책과 제도상 미비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환경과 먹거리’, ‘공간적 불평등’, ‘시민 삶의 질 지표’ 등 중요한 정치적 의제를 먼저 찾아 거시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가능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소, 정주환경과 공간계획 분야에서 다른 대학 단위 연구소가 하지 않는 광범위한 기초 연구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또 지자체가 발주하는 연구사업과는 차별되게 중앙 정부 차원의 전략과 대응에 관해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는 공공연구소, 상·하원 논의에서 그 연구결과물이 인용된 횟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BL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참고문헌

- Faludi, A. and A. Van Der Valk(1994), *Rule and Order: Dutch Planning Doctrine in the Twentieth Century*,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Koens, L., Chiong Meza, C. Faasse, P. and J. De Jonge(2016), *De publieke kennisorganisaties*, Den Haag, Rathenau instituut.
- Needham, B.(2014), *Dutch Land Use Planning: The Principles and the Practice*, Surrey, Ashgate Publishing Limited.
- Planbureau Leefomgeving(2017), *PBL Jaarverslag 2016*.
- Planbureau Leefomgeving(2016), *PBL Jaarverslag 2015*.
- www.pbl.nl [Accessed on 29 May 2017].

INTERVIEW



리즈 판 더르 바우던 박사
(Dr. Ries van der Wouden)

‘도시계획 및 정주환경의 질’
연구국 책임연구원

“우리 연구국은
도시계획,
도시혁신,
토지정책과 부동산
개발에 대해
주력하며, 다른
연구국과 학제 간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Q ‘도시계획 및 정주환경의 질’ 연구국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연구주제는 무엇입니까?

A 지난 수년 간 ‘도시계획’, ‘도시혁신’, ‘토지 정책과 부동산 개발’ 세 가지 주제에 주력해 왔습니다. ‘도시계획’의 경우 네덜란드 국토계획, 특히 미래에 어떤 사회·경제적 변화에 국토계획이 대응해야 할지 탐색하는 연구와 지난 국토계획 정책의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평가하는 연구입니다. ‘도시혁신’의 경우 도시공간이 경제 활동과 성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동시에 사회계층 간 격차와 환경, 보건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가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 각 도시 단위가 취한 전략과 그 전략이 효과 있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토지 정책과 부동산 개발’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지 정책의 효과와 그 토지 정책이 주택·오피스·상업시설 등 부동산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최근에는 업무 및 상업시설의 높은 공실률이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Q ‘도시계획 및 정주환경의 질’ 연구국이 수행하는 연구가 네덜란드 내 다른 도시 건축 연구 단위들이 수행하는 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A PBL은 경제학자·사회지리학자·도시설계학자·생물학자·기후변화 전문가 등이 함께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에너지, 기후, 주거, 교통, 농업, 환경, 자연환경, 순환경제 등의 주제를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도시계획 및 정주환경의 질’ 연구국은 특히 공간 정책이나 도시계획과 관련해 연구소 내 다른 연구국들의 전문성으로부터 시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제 간 협력이나 전문 분야 간 통합성과 실용성이 특정 분야에 세분화하는 타 연구 단위와 다른 점입니다.

Q 최근 수행한 연구 중 특히 네덜란드 도시형태(urban morphology)와 도시공간 간 발생하는 상호 영향에 초점을 둔 연구보고서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A PBL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연구소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동 단위의 도시공간을 분석하여 맞춤형 계획전략, 도시설계안이나 개발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한 수요는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하는 연구사업을 통해 채워집니다). 그러나 도시형태, 도시공간의 형성기제, 도시공간 간 역동에 대한 연구결과로 다음을 언급할 수 있겠네요.
첫째, 요스트 테너커스(Joost Tennekes)와 아르얀 하버르스(Arjan Harbers)가 2012년에 수행한 <대규모 또는 소규모 도시화(Grootschallige of kleinschallige verstedelijking)> 연구 보고서입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플랑드르 주,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주택 개발 계획을 비교한 연구로, 각 주거단지의 형태론적 차이와 그런 차이를 형성하는 제도적 요인들, 주거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둘째, 2015년에 바로 제가 책임편집인으로서 기획·출간한 <네덜란드의 공간적 변이 1988~2015(De ruimtelijke metamorphose van Nederland 1988~2015)>라는 책입니다. 피넥스(Vinex; 제5차 공간계획추가문건;



대규모 또는 소규모
도시화(2012)

자료: <http://www.pbl.nl/publicaties/2012/grootschalige-of-kleinschalige-verstedelijking>



네덜란드의 공간적 변이
1988-2015(2015)

자료: <http://www.pbl.nl/publicaties/de-ruimtelijke-metamorfose-van-nederland-1988-2015>

1991년 발간) 프로그램(1995~2005년 집행)에 따라 신축된 주거단지, 특히 기존 시가지 재개발과 신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실현된 도시공간의 형태와 변화를 추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연간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주된 연구발주처,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연간 연구계획 수립 시 우리는 관계된 주요 부처, 즉 기반시설환경부·경제부·내무부의 각 대표들과 논의합니다. 그 대표들이 각 부처 차원에서 중요한 주제, 바라는 연구 질문을 제시하면 우리가 그 의견을 듣고 고려하여 연구계획에 반영합니다. 연구과업에 따라서는 중앙정부 부처나 때로는 도 정부와 시 정부에서 연구자문위원을 파견하여 연구설계에 직접 참여합니다. 정책상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고 그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 과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 예로 2019년에 발효하는 ‘국토환경관리법(Omgevingswet)’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공간계획법(Wet ruimtelijke ordening), 지반보호법, 환경관리법, 도로관리법 등 물리적 환경에 관련한 각종 26개 법을 통합해 대체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이 의도하는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상향식 도시개발의 촉진입니다. 아직까지는 공공이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청사진을 공공이 직접 실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 대규모의 공영토지개발을 이제는 점점 더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리는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재정적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민간의 상향식 부동산 개발 의향을 도시 전체의 공간 전략에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유기적 도시개발(organische ontwikkeling)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민간의 상향식 부동산 개발을 허가해 주다 보면, 당장 그 필지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으나 광역 단위로, 또는 도시 전체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법제가 개발이익 환수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즉 국토환경관리법 초안을 검토해 보충·삭제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신규 법제가 그러한 개선 없이 가져오게 될 부작용 등을 실사례 분석에 근거하여 추정·파악해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닐스 소렐(Niels Sorel)과 요스트 테너커스(Joost Tennekes), 마이커 할러(Maaike Galle)가 2014년 발표한 <유기적 도시개발에서의 공적 기반시설 비용 조달(Bekostiging van publieke voorzieningen bij organische gebiedsontwikkeling)>입니다.

이렇듯 부동산개발 행태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공간계획법제를 정비하는 데 PBL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도시공간

Vol. 26

Summer 2017

장소 탐방

Place Review

배곧생명공원은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명의 땅이자, 도심 속 생활에 지친 시민들과 동물들이 휴식을 취하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 참여형 공원 모델을 만들고자 한 처음의 의도대로 배곧생명공원은 시민들과 함께 오늘, 어제보다 더 '완성'되어 간다.

포격 사건 이후 연평도에는 구호와 위로를 위한 방문이 이어졌지만, 연평도의 본질은 '방문자의 공간'이 아니다. 배 한 척 없는 노인들과 소수의 학생들, 그리고 섬을 지키러 온 군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터전이다. 연평 도서관은 기록의 공간이자 문화의 공간으로, 평범한 연평도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오늘도 조용히 쌓여가고 있다.

독립공원야생전경



연평도서관전경



도심 속
생명력 넘치는
시민공간
- 배곧생명공원
106

연평도의 삶과
일상이 쌓이는 곳
- 연평 도서관
118

도심 속 생명력 넘치는 시민공간 - 배곧생명공원 | 배곧생명공원은 설계 초기단계부터 ‘배곧숲학교’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 함께 계획하였다.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워 ‘시민정원사’라는 조직으로 육성함으로써,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 공원을 관리하고 운영을 맡는 이용자 중심의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평도의 삶과 일상이 쌓이는 곳 - 연평 도서관 | 연평 도서관의 실제 사용자를 만나고 그들이 원하는 도서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사소한 이야기는 사소하지 않게 들었고, 뻔한 이야기는 교훈으로 삼았다. 엉뚱한 생각은 좋은 아이디어가 되었고, 웃지 못하는 간절한 고백은 반드시 작게라도 계획에 반영하고 싶었다.

배곧생명공원

도심 속 생명력 넘치는 시민공간

송인선

시흥시 배곧공사와 공사2팀
주무관

개요

위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면적	23만 2,464m ²
사업기간	2013~2015
소요예산	약 240억 원
설계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시공	상록건설
건축주	시흥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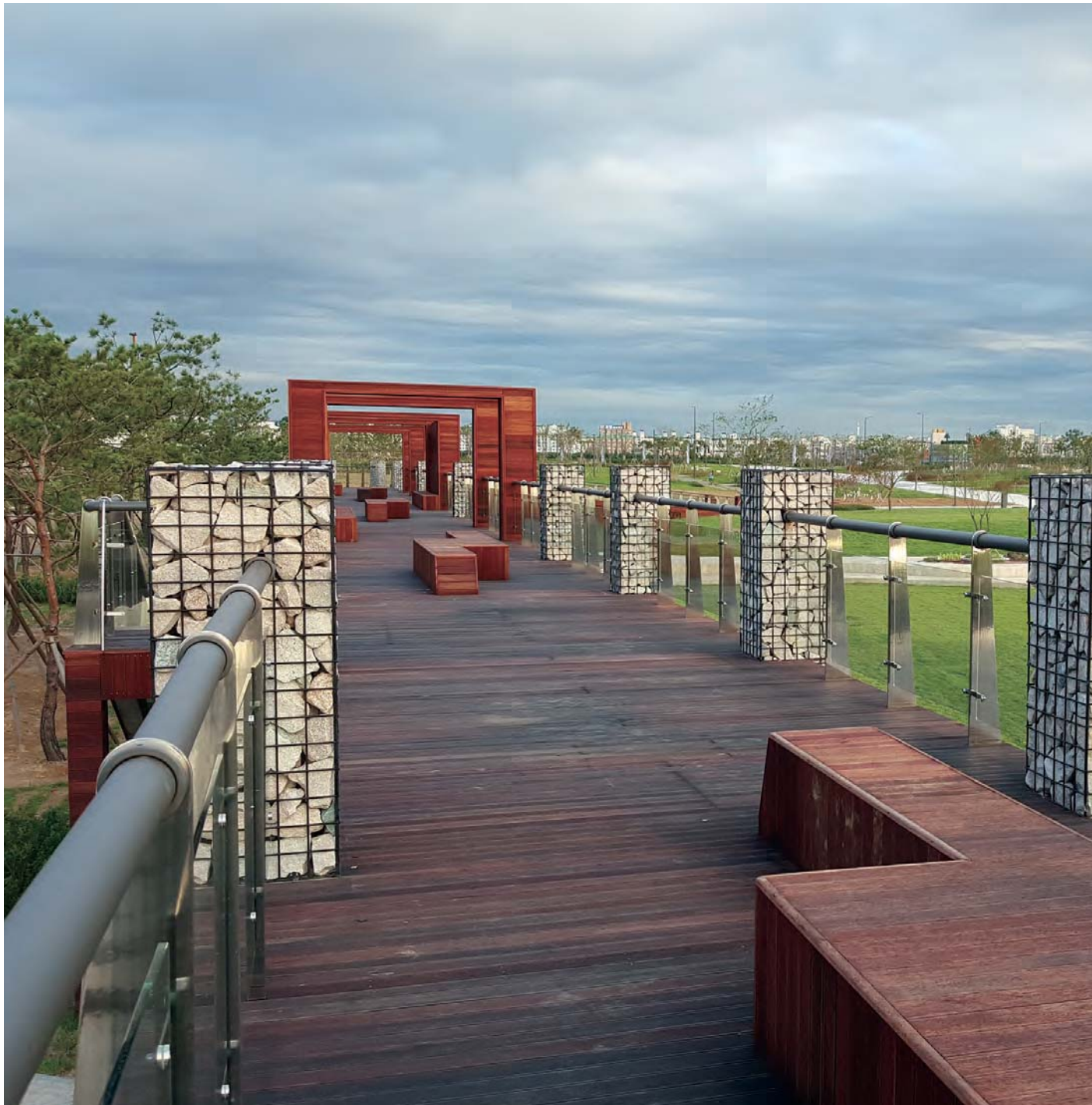
갈대숲과
데크 하부 생물 서식을
배려한 관찰데크



배곧생명공원 전경

도시의 뛰어난 경관
조건을 적극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이용자인 시민의 참여를
통해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고 완성해 가는
공원을 조성하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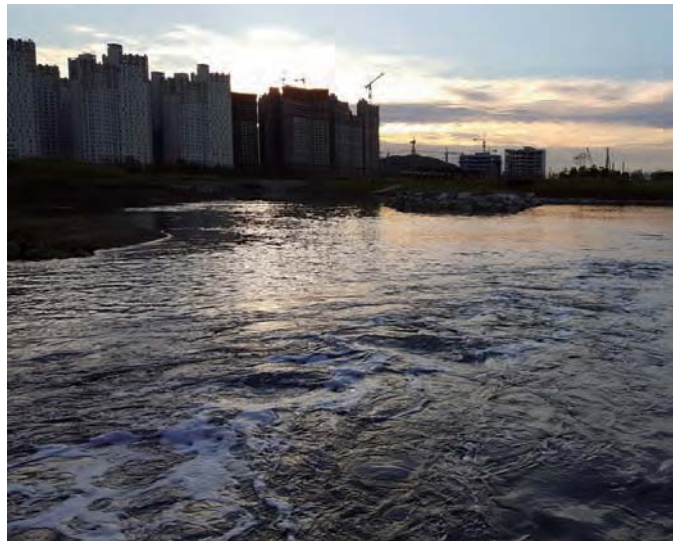
해수생태연못과 공원 조망이 가능한
조형 스카이드েক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상
하

보존 갈대숲의 탐조대 전경
서해바다 만조와 함께 해수생태연못으로 바닷물이 채워지는 전경



배곧생명공원에서 본 도시 야경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 상 시민들이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배곧생명공원
 중·좌 다양한 생물의 서식이 가능한
 기존습지 보존
 중·우 시민참여마당 내 단체,
 또는 가족 나무심기 행사
 하 만조와 함께 해수생태연못으로 유입된 송어떼

배곧생명공원의 콘셉트는
 '생명·참여·문화'다.
 이러한 키워드 아래
 생명이 호흡하는 건강한
 치유공원,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시민참여의 공원,
 사람과 도시의 삶을
 담은 문화공원 조성을
 배곧생명공원의 주요 사업
 방향으로 정하였다.

©시흥시



연말 배곧마루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해넘이 행사

염전에서 배곧신도시로

1970년대 개펄과 천일염 생산을 위한 염전이 있었던 지금 배곧신도시 지역은 1980년대에 매립되어 충포화약성능시험장이 들어섰다. 1990년대에는 주변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2000년대에 충포화약성능시험장의 폐기와 토지 매입을 거쳐 배곧신도시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 염전에서 신도시로 탈바꿈한 이 지역에는 곧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조성될 예정이다. 배곧신도시라는 이름은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의 한글 교육 장소인 ‘한글배곧’에서 착안한 것이다.

인간과 자연을 품은 공원을 향해

배곧신도시의 도시 브랜드를 형성하고, 시민들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오픈스페이스 개념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하는 것이 ‘배곧생명공원’이다. ‘생명도시 시흥’의 정신 아래 ‘인간을 품은 도시’, ‘자연을 품은 도시’라는 시흥시 개발 목표에 부합하고, 도시의 뛰어난 경관 조건을 적극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이용자인 시민의 참여를 통해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고 완성해 가는 공원을 조성하려 하였다.

공원 조성을 위해 2012년 3월 현상설계 공모에 들어갔으며 그 해 6월에 ‘그룹한 어소시에이트’의 설계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2013년 5월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8월에는 공원 조성공사가 첫 삽을 떴다. 2015년 11월 공사 준공과 개장식을 개최한 이후 시흥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숨 쉬고 편안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친환경 생태도시의 랜드마크인 배곧생명공원은 그 특화 전략으로 바다(해수)·개펄을 활용하고, 사업지구 내에 조류 서식처 등의 공간을 조성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효율적인 보호·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흥시



상 배곧생명공원 전경
하 갈대숲과 데크 하부 생물 서식을
배려한 관찰데크



상 해수생태연못과 공원 조망이 가능한
조형 스카이다크
중 보존 갈대숲의 탈조대 전경
하 서해바다 만조와 함께
해수생태연못으로 바닷물이 채워지는 전경

배곧신도시는 그 위치가 북측으로는 월곶포구, 남측으로는 오이도, 서측으로는 서해바다와 면하고 있다. 또 인근에 옥구공원과 ‘시흥늪 내길’이 조성되어 있다. 그안의 배곧생명공원은 서해바다, 수변공원과 면하여 경관이 우수할 뿐 아니라 배곧신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주변에 공동주택·상업시설이 들어서 있다. 그런 만큼 시민들이 많이 찾는다.

‘생명, 참여, 문화’를 아우르는 공원

배곧생명공원의 콘셉트는 ‘생명·참여·문화’다. 이러한 키워드 아래 생명이 호흡하는 건강한 치유공원,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시민참여의 공원, 사람과 도시의 삶을 담은 문화공원 조성을 배곧생명공원의 주요 사업 방향으로 정하였다.

자연과 사람의 공존

배곧생명공원은 기존의 생태계와 경관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공원 면적 가운데 30% 정도의 갈대숲과 습지를 보존하여 개발하였고, 국내 최초로 바닷물과 조수간만의 차를 활용하여 생태연못을 조성하였다.

해수생태연못은 인위적 에너지(동력)를 배제하고 서해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하루 두 번 해수가 연못으로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스스로 작동하는 습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해수생태연못은 공원 내에서 집수되는 우수(담수)와 만나 기수역을 형성하고, 이렇게 조성된 공간에서 서식환경이 각기 다른 동식물이 살아가게 된다. 이를 통해 공원 이용자들이 종 다양성을 체험하고, 조류 서식지로서 다양한 먹이활동이 가능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다.

또한 해수생태연못을 조성하기 위해 터파기한 기존 개펄 흙은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토양 개량하여 공원 내 식재토로 재활용하는 시도도 하였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채워 나간다

배곧생명공원은 발주자 또는 설계자의 일방적 주도하에 조성된 공원이 아니다. 설계 초기단계부터 ‘배곧숲학교’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 함께 계획하였다. 또한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워 ‘시민정원사’라는 조직으로 육성함으로써,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 공원을 관리하고 운영을 맡는 이용자 중심의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초기 완성형의 공원이 아니라 미래에 시민과 함께 완성한다는 개념으로 ‘시민참여마당’ 공간을 넓게 비워 두었다. 일부 공간에는 수목헌수운동으로, 시민·기업들이 참여해 마련한 기금으로 시민들이 직접 수목을 식재하여 녹색 숲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서해 낙조와 도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

공원 내에는 29m 높이의 배곧마루가 조성되어 있다. 배곧마루는 배곧신도시의 전체적인 전망대 역할뿐만 아니라 서해의 경관과 낙조, 매력적인 송도 야경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흥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내일 더 완성된 생명공원을 바라며

2015년 개장한 배곧생명공원은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명의 땅이자, 도심 속 생활에 지친 시민들과 동물들이 휴식을 취하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멸종위기인 야생동물들이 공원에 터를 잡기 시작하였고, 각종 새들도 날아와 공원의 생명력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휴일에는 산책이나 나들이를 즐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축제나 행사의 무대로도 활용되어 북적이기도 한다.

시민 참여형 공원 모델을 만들고자 한 처음의 의도대로 배곧생명공원이 많은 시민이 방문하고 또 그들이 만들어 가는 공간으로 자리하는 모습을 그려 본다. 그래야 오늘보다 더 즐거운 도심 속 공원을 ‘완성’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상 시민참여마당 내 단체, 또는 가족 나무심기 행사
- 중 다양한 생물의 서식이 가능한 기존습지 보존
- 하 시민들이 여유로운 일상을 누리는 배곧생명공원

연평도의 삶과 일상이 쌓이는 곳

연평 도서관

정이삭

에이코랩 대표,
동양대학교 조교수

개요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구 90대대 생활관)
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건축면적	215m ²
연면적	435m ²
규모	지상 2층
높이	8m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	정이삭
설계담당	최세롬
설계기간	2014.8.~2014.12.
시공기간	2015.1.~2015.3.
공사비	약 1억 원
건축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연평 도서관 전경



'집 속에 집' 같은 서가



@a.colab



@a.colab



@a.colab

상
하 휴식을 위한 작은 공간
개인적이면서 자유로운 공간



도서관의 내부는 불규칙한 미로처럼 복잡한 골목길 같은 모습이다.
우리가 골목길에서 재미를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다음 걸음으로 인한 장면이 쉽게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도시공간의 힘을 믿으며, 이곳이 군대 속 작은 책의 도시가 되길 희망하였다.



상하
층계의 구분을 허물어 답답함을 탈피한 구조
골목길 같은 내부 구조



©aocolab



©aocolab



©aocolab

상
중
하

장병들의 생각을 반영한 공간
휴식의 공간이자 배움의 공간
하나의 도시처럼 인식되는 공간

도서관은 곧 문화이고, 동시대의 문화가 긴 시간 축적되어 결국 역사가 된다.
역사가 없는 지역과 도시공간에서는 오늘의 일상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지역과 마을 그리고 도시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기억의 저장소,
도서관을 가져야만 한다.



©a.colab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하는
연평 도서관

포격 사건

연평도의 기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964년 5월 22일의 모습이 담긴 한 장의 연평도 사진을 찾았다. 현 연평호프 앞바다에 조기잡이 배가 해안 가득 작은 틈도 없이 뺨뺨하다. 해변에는 큰 조기잡이 그물을 널어 말리고, 각지에서 몰려든 어부들로 섬이 북적거린다. 당시 조기를 잡으러 일본과 대만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연평도로 몰려든 어선이 3,000여 척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어로한계선이 설정되고 그곳을 중국 어선이 들어와 조기 씨를 말린 탓에, 지금 연평도에서 자연산 조기를 맛볼 수 있는 집은 한 곳 정도 남아 있다.

이후 그 조기를 대신하는 것이 꽃게다. 봄과 가을 꽃게 철이면 연평도 바닷가 인근 작업장에서는 밤까지 그물에 걸린 꽃게를 떼어 내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꽃게마저 요즘은 그 어획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조기와 꽃게의 섬 연평도에 북의 포격 도발이 일어났다. 섬 곳곳에서 포탄으로 인한 연기가 솟아오르고 주민들은 섬을 떠나 육지로 대피하였다. 군인 한 명과 민간인 한 명이 사망하였다. 대통령과 수많은 정치인이 섬을 방문하고 갑작스레 여러 관심이 이 작은 섬에 쏟아졌다.

관심에 비례하여 국가와 여러 단체의 구호 행위가 이어졌다. 포격사건 기념관도 짓고, 골목과 도로를 알록달록하게 포장하여 꾸몄다. 포격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집을 수리해 주는 등 긍정적인 도움도 많았다. 하지만 선전용에 그친 지원도 적지 않았다.

영상과 불탄 철모의 모습만으로, 꾸며진 골목들로 연평도 사람들에게 대한 위로나 사건의 기억, 삶의 지속 같은 것은 불가하다. 연평도는 조기를 잡으러, 꽃게를 잡으러, 포격의 현장을 구경하러 오는 ‘방문자의 공간’이 아니다. 배 한 척 없는 노인들과 소수의 학생들, 그리고 섬을 지키러 온 군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터전이다. 한번 가고 안 가는 기념관이 아니라 포격으로 사라진 그들 일상이 기록되고 쌓여 온전히 그들의 것으로 남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버려진 막사

2014년 4월 연평도를 방문하였다. 마을과 군부대의 경계가 모호하였다. 마을에는 기능적인 것들 외에 딱히 문화시설이라고 할 것도 없고, 부대 내에도 작은 골방 같은 도서관을 제외하면 문화나 휴식의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 그나마 있는 작은 도서관은 오래된 책이나 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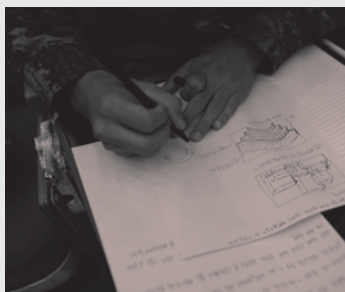
©a.co.kr



상 연평 도서관 전경
하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하는 연평 도서관



©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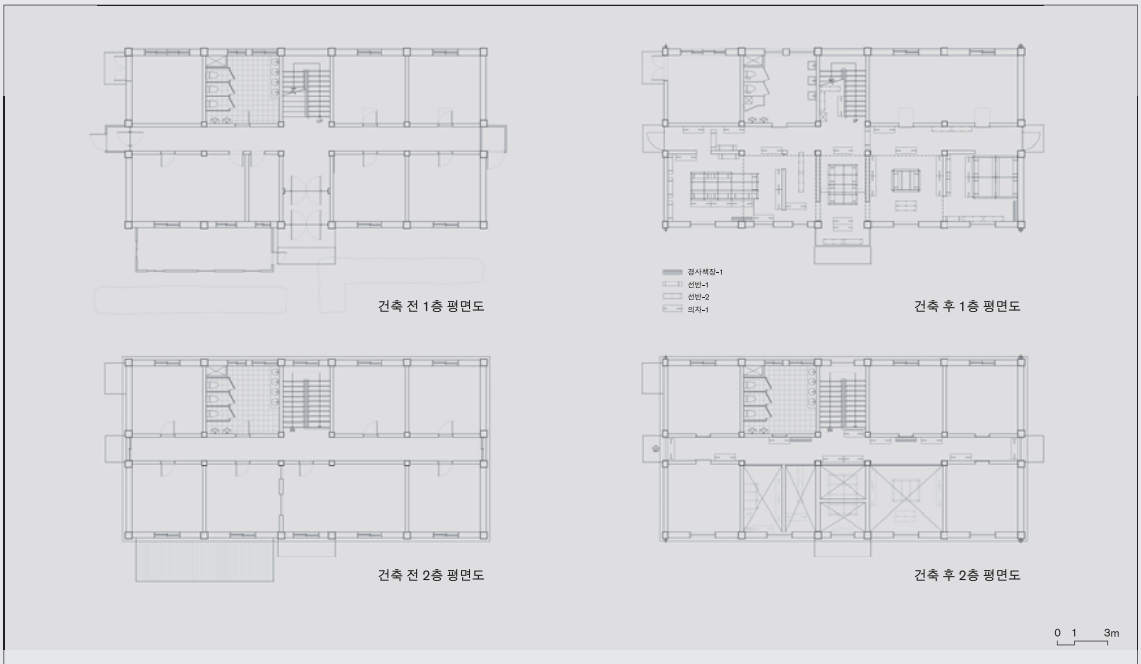
상 의견 반영을 위한 워크숍
중·하 장병들이 원하는 도서관

도 보지 않기에 기증된 책들로 가득하였다. 전쟁에 대비해 만들어진 기능으로만 가득한 섬이라는 인상이 강하였다. 아름다운 섬은 영문도 모르고 이런저런 무기들로 가득하게 된 꼴이다. 그래도 본연의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섬이어서 중간중간 그런 풍경을 발견하게 될 때 안심하고 숨을 돌릴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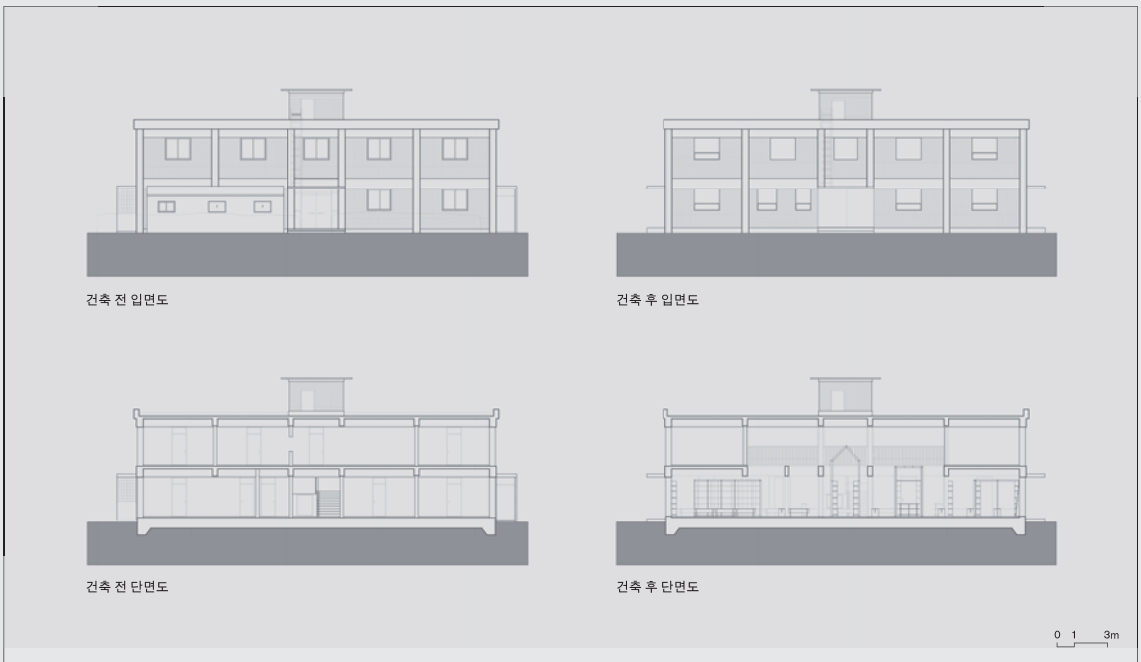
섬과 부대를 돌아보고 난 뒤에 든 첫 번째 생각은 군사적 기능, 어긋난 관심과 도움이 가득한 이곳에 진정성 있는 문화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그 문화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땅이나 건물을 찾는 작업이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은 1억 원뿐이었다. 상징성에 그치는 무엇이 되길 바라지 않는 마음에, 새것이거나 예쁘지 않아도 크고 넉넉한 공간을 찾아 고치고 닦아 좋은 내용으로 가득 채우고 싶었다. 부대에서 제일 먼저 제안한 것은 기존 도서관의 리모델링이었다. 하지만 기존 도서관이 부대 안쪽 깊숙이 위치하여 인접 부대의 군인들에게나 추후 주민들에게 개방하였을 때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기가 너무 작아 그곳을 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 공간을 증축하여야만 했는데, 그 비용이 새로 짓는 비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러자면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데에 많은 돈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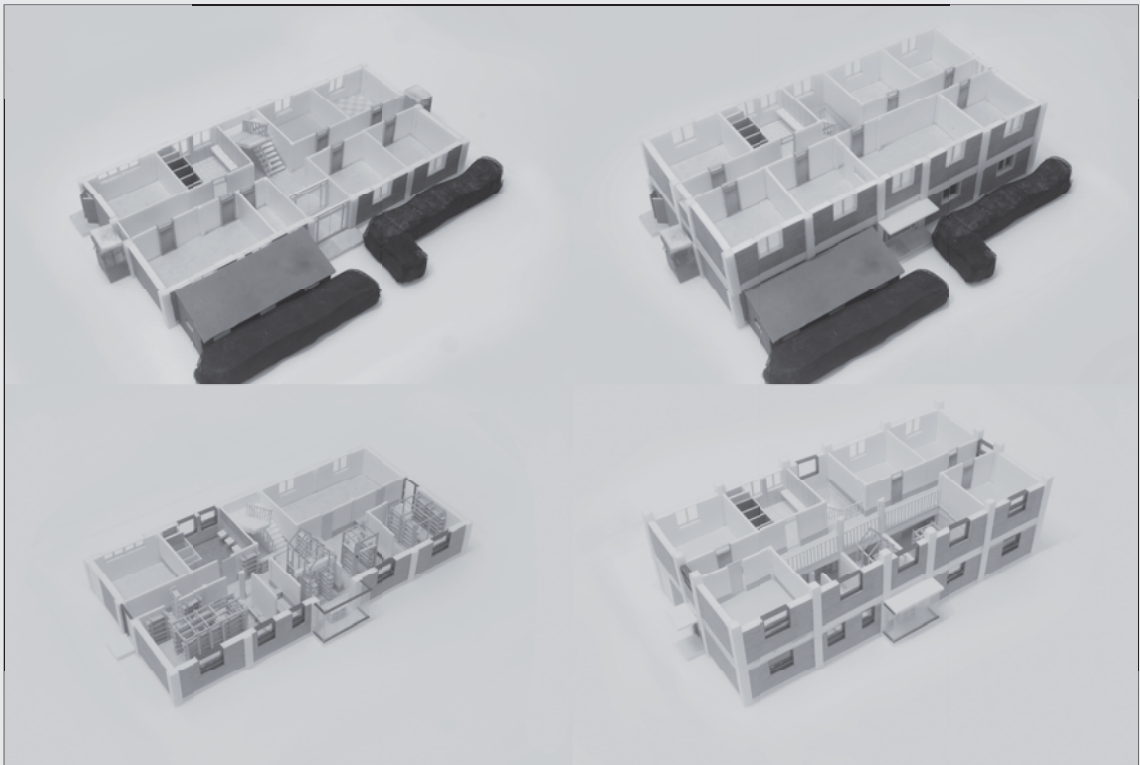
같이 방문한 다른 건축가를 비롯하여 문화 기획자 선생님들과 함께 부대 내에서 입구 쪽에 가까운 시설 가운데 몇 개의 대상을 찾아 부대에 검토 요청을 하였다. 하나는 탄약고였고, 하나는 버려진 막사였다. 막사가 왜 버려졌을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군이 병영 시설 현대화라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조금씩 하나씩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 기간에 전체 군 막사 시설을(군인 생활관 시설)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연평부대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러한 차원에서 새로운 막사가 지어지고 옛 막사는 창고로 쓰이며 곧 철거될 예정으로 유휴된 상태였다. 멀쩡한 건물인데 새로운 생활관이 있고 관리의 목적이 사라진 이유로 철거되는 것이 낭비처럼 느껴졌다. 그 구형 막사가 목적을 갖고 철거되지 않기를 바랐고, 그 건물의 사용을 부대 측에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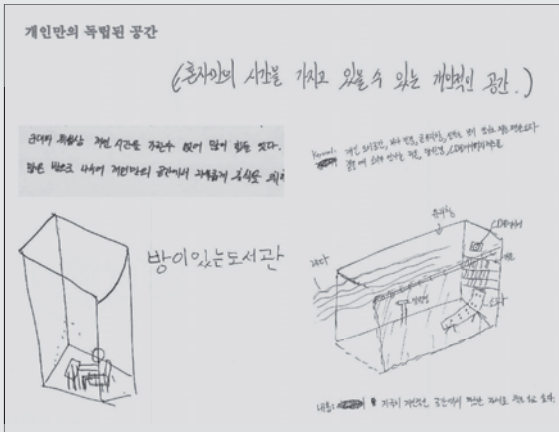
연평 도서관 건축 전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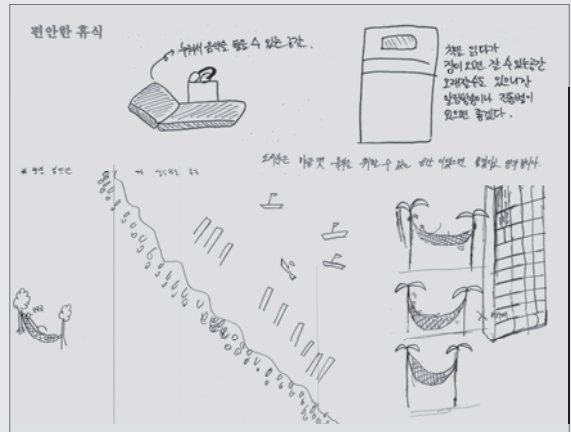
연평 도서관 건축 전후 입면도와 단면도



연평 도서관 평면 계획



장병들이 그린 '내가 바라는 도서관'



첫 번째 도서관

군으로부터 그 구형 막사 공간을 사용해도 좋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 당시 이 사업의 문화 기획 파트너였던 뎡스북스의 이기섭 대표와 프로그램을 논의하던 중이었고, 그 건물의 사용이 확정되었을 시점에 우리는 그곳의 기능을 도서관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정하였다. 이름은 좀 더 나중에 결정되었지만 ‘연평 도서관’이라 부르기로 하였다. 연평도에 처음으로 정식 도서관이 생긴 것이다.

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상상할 수 없다. 도서관은 곧 문화이고, 동시대의 문화가 긴 시간 축적되어 결국 역사가 된다. 역사가 기념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고, 역사가 없는 지역과 도시공간에서는 오늘의 일상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지역과 마을 그리고 도시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기억의 저장소, 도서관을 가져야만 한다.

공간을 계획하는 과정과 책을 선정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20대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래서 그들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종류의 책은 어떤 것일지 고민하였다. 이기섭 대표는 본인의 경험을 살려 재미있고 유익한 책을 잘 골라주었다. 뎡스북스 북카페에서는 매달 ‘이 달의 책’을 발표하는데, 연평 도서관에서도 그런 기획을 살려 이 달의 책을 선정해서 2015년 연평 도서관 브로슈어를 만들었다. 많은 책들이 있어서 무엇을 봐야 할지 고민되는 장병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되었을 것이다.

병사와 하급 간부를 만나다

본격적인 설계가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누구를 만나 어떤 질문을 하는가와 군에서 무언가를 만든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의중을 묻고 기획을 시작할까 생각하는 일이었다. 상명하복의 군 질서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시설은 대부분 그 서열을 공고히 하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이용자인 일반 장병들과 하급간부들은 그 공간의 주체가 아니라 길들여져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모두 그러한 시설뿐인데 하나 정도는 그리고 문화시설이라면 일반 시설을 계획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도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a.co.kr



유휴 막사가 도서관이 되는 과정



©a.co.kr



상 '집 속에 집' 같은 서가
중 개인적이면서 자유로운 공간
하 골목길 같은 내부 구조

처음 부대를 방문하였을 때 부대장을 만나고 이후로는 일반 병사와 하급 간부들만 열심히 만났다. 실제 사용자를 만나고 그들이 원하는 도서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사소한 이야기는 사소하지 않게 들었고, 뻔한 이야기는 교훈으로 삼았다. 엉뚱한 생각은 좋은 아이디어가 되었고, 웃지 못하는 간절한 고백은 반드시 작게라도 계획에 반영하고 싶었다.

첫 번째 워크숍을 큰 강당에서 진행하였다. 작업을 하거나 훈련을 받다 들어온 장병들이 햇볕에 검게 탄 손등 밑으로 그들의 간절한 꿈을 그림과 글로 적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상상을 따라 그 옆에서 말없이 웃으며 대부분의 계획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들의 수많은 생각들과 간절함이 고마웠다.

가장 많은 의견은 '개인의 독립된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단체 생활인 군대 내에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밥도 잠도 훈련도, 심지어 기합도 단체로 받는 게 군대 아닌가. 모두에게 하나씩 방을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그러한 기분이라도 들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로 많은 의견은 '편안한 휴식'이었다. 수많은 장병들이 해변에 해먹을 그려 제출하였다. 어쩌면 진부한 상상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그들의 생활을 고려하면 그 간절함을 헤아릴 수 있을 듯하였다. 바다를 앞에 두고도 마음 편히 해변에 앉아 쉬지 못하는 그들인데, 해변은 몰라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편히 쉬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의견이 자기계발과 소규모 공부모임에 대한 요청이었다. 20대 초반 가장 활발히 익히고 배워야 하는 나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시간을 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시간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지금이 그들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운 시간임을 알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치 없는 휴식과 긍정을 위한 배움

‘휴식’ 그리고 ‘배움’,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은 더없이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그 휴식과 배움의 수식어들을 공간으로 구현하는 일만 남았다. 우선 예산을 따졌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공비는 1억 원이 전부였다. 50평 단독주택 한 채를 짓는 일반적인 가격이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다. 게다가 섬 공사는 육지와 같은 규모의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예산은 1.6배 정도 더 필요하다.

필자는 군에서 시설장교 생활을 하였고, 연평도와 조건이 비슷한 섬에서 근무를 해 봤기에 효율적인 공사 진행의 절차와 좀 더 경제적인 방식의 공정관리에 대해 소소한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 그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경제적인 공사를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구조물을 보강 없이 그리고 추가 없이 불필요한 부분만 없애기로 하였다. 그리고는 필수적인 요소로 냉난방 효율을 위한 창이나, 제 구실을 못하던 화장실의 보수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진행하였다. 그러자 이제 남은 돈은 3분의 1 정도였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때 떠오른 생각이 ‘집 속에 집’ 같은 서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자니 자연스레 그 집들은 굳이 집이 아니어도 되니 자유롭게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집처럼 내외부를 적절히 구분지어 주니 여러 개의 작은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렇게 ‘눈치 보이지 않는 개인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넓지 않은 공간에서 작게 분절된 공간은 자칫 개인적인 느낌보다는 답답한 느낌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1, 2층 사이 바닥을 열어 층고를 6m 이상 확보하였다. 높은 층고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공간의 높이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생산력과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들이 개인적이면서도 자유롭게 자신들 상상의 세계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곳은 미로 같다. 서가와 집 같은 가구들을 통해 복도를 막고 주출입구를 쇼윈도로 활용하고 기존 건물의 사용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이동 경로를 계획하였다.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곳이 하나의 도시처럼 인식되기를 바랐다. 이유는 군대 안의 모든 시설이 예측 가능하고, 그리하여 비상시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형식으로만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a.co.kr



상 휴식을 위한 작은 공간
하 층계의 구분을 허물어 답답함을 탈피한 구조



©a.co.kr



상
하
장병들의 생각을 반영한 공간
하나의 도시처럼 인식되는 공간

하지만 편리와 기능만을 위한 도시는 없듯이 이곳 역시 그렇게만 만들어져서는 정상적인 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하다. 수많은 군 문제는 분명 그 환경의 문제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 도서관의 내부는 불규칙한 미로처럼 복잡한 골목길 같은 모습이다. 우리가 골목길에서 재미를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나의 다음 걸음으로 인한 장면이 쉽게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도시공간의 힘을 믿으며, 이곳이 군대 속 작은 책의 도시가 되길 희망하였다.

마치며

나는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목소리를 공간으로 옮기는 단순한 작업을 한 것뿐이다. 그러나 요즘의 많은 공공 작업의 경우 그 단순하고 기본적인 일이 잘 실행되지 않는다. 기본이 없는데 새로움을 찾는다. 나는 그런 종류의 새로움이 주는 가치는 믿지 않는다. 우리에게 아직 충족되지 않은 기본들이 산재해 있다. 그 우리는 한국이기도 하고, 서울이기도 하며, 하나의 건물이기도 하고, 우리 한 명 한 명이기도 하다.

미래는 기술이나 새로운 미디어, 창의적인 혁신으로 찾아온다고 믿지 않는다. 대신에 그저 단단한 매일의 충족된 삶이 서서히 진화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앞날이라고 믿는다. 많은 돈을 들여 미술관과 광장 앞에 조형물을 만들고 결벽증에 걸린 듯 깔끔하고 완성도 높은 디테일에 파묻혀 그 공간의 삶은 고려하지 못하는 또는 고려하지 않는 공공적 건축행위가 기본보다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연평 도서관이 예쁘고 참신한 것이라고 읽히지 않았으면 한다. 이것이 그저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 철학과 결벽, 신기술, 신소재를 논하는 건축가들 앞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 나는 이 도서관이 사진 찍고 떠나는 위정자들이 남긴 공간과 폭격 맞은 집터, 사라진 기념, 뜨내기 어부들과 소외된 군인, 늙고 어린 주민들 사이에 놓인 내일의 수많은 창작자들에게 기본을 환기하도록 하는 작은 동기가 되길 바란다.

auri 소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134

포럼 및 세미나
139

연구소 단신
143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신규 과제를 소개하고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과제	택티컬 어바니즘 기반의 가로활성화 방안 연구	손동필
수시과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김용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임유경
	건축물 성능 및 철거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유광흠
	행정중심복합도시 가로벽 디자인 지침 연구	임유경
	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성은영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연구	여혜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개선방안 연구	오성훈

기본과제

① 택티컬 어바니즘 기반의 가로활성화 방안 연구

가로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공간이며, 가로활성화는 도시재생과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선결 조건이자 핵심 전략이다. 가로활성화의 중요성이 강조됨과 동시에, 가로활성화를 위한 가로 구성방식에 있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 ▲첫째, 차량 중심 공간에서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둘째, 배타적 공간에서 공유 공간으로 ▲셋째, 통행 공간에서 활동 공간으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로의 유연한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최근 해외에서는 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의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양적 성장과 대형개발 기조가 질적 개선과 소규모 재생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변화로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 개념에 기반을 둔 상당수의 도시설계적 조치가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택티컬 어바니즘 기반의 도시계획 및 설계 기법과 그 효과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가로활성화와 가로공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적용 가능한 택티컬 어바니즘의 계획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측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로단위에서 적용가능한 택티컬 어바니즘의 개념, 특징 및 사례를 조사하고, 적용 대상, 적용 방식 및 시행 주체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국내에 택티컬 어바니즘 기법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로조성 및 관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택티컬 어바니즘 기반 가로활성화 정책의 도입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손동필

①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조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경진흥법」이 2015년 제정되었다. 「조경진흥법」에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경진흥시설(제7조)과 조경진흥단지(제8조) 조항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조경 산업 현황과 공간집적의 필요성을 분석했다. 설계, 시공, 소재 생산 및 유통, 유지 관리 등 조경 분야별 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조경 산업 집적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외 관련 사례를 검토 분석했다. 국내 산업지원법을 토대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시설과 단지 사례를 조사하였다. 조경 분야에서 사업체 간의 집적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국내 외 사례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조경 산업종사자 대상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제도의 필요성, 집적에 적합한 조경 산업 유형,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지정기준과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운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불명확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예상되는 사업모델을 제시하였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조경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제안하였다. 또한 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고,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사후 감독과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제도 개선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조경진흥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영세한 조경사업자 지원과 침체된 조경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용국

②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각 지자체는 행정청사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공건축물을 조성, 관리하고 있다.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공공서비스의 균형적 공급과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공건축을 조성하고 운영·관리하는 지자체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 여러 지자체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건축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건축정책위원회, 총괄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 등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면서 공공건축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며, 충청남도는 충남공공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디자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이 외에도 경기도와 수원, 영주 등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건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나, 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유일하게 동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에 대한 응답,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법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 센터 지정 이후 법정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건축 조성 지원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추가 지정과 국가-지역 간 역할 분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관리 지원 업무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의 공공건축 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며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협력체계 구축되면, 공공건축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공공건축의 질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임유경

3 건축물 성능 및 철거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물 유지관리는 단순관리 측면만 고려되고 있고 성능 전반에 대한 예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률에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성격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과 항목 및 관리수단은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준공 당시 성능의 유지를 기본으로 하며, 수명주기 동안 점검·교체·개량·성능 향상 등의 다양한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건축물 수명주기의 최종 단계인 철거의 경우, 신축공사와 마찬가지로 현장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철거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사고지대 해소에 대한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건축물 준공 이후 관리되어야 하는 건축물의 성능, 관리범위, 수단 등을 명확화하고 철거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물의 성능 및 철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관계법령 간의 연계 및 체계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광흠

4 행정중심복합도시 가로벽 디자인 지침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신개발 사업으로 규모와 성격에서 중요성과 상징성을 갖는다. 2005년에 실시한 도시개념 국제공모 결과를 발전시켜 환상형(環狀形) 교통축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도시의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환상도시’를 목표로 10년 동안 개발이 진행되었다.

대중교통순환축은 행복도시 계획의 핵심 공간이며, 계획 초기부터 디자인 정책 목표로 상정한 ‘조화로운 통합이미지 구현’의 공간적 대상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로변 일정폭의 구간을 ‘가로벽(Urban Wall)’ 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용도와 형태를 규제하고 있다. 행복도시 착공 이후 10년이 흐른 현재 1~4생활권 가로벽 구간의 건설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6생활권은 계획 중이다.

가로벽 구간에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저층부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엄격한 지침을 적용한 결과, 조화로운 가로경관을 창출하고 행복도시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의견도 있으나 가로경관이 획일적이고 단조롭다는 비판, 건축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개발 수요를 억제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가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접하는 공간인 만큼, 가로 디자인 규제는 사회적 합의 형성을 전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행복도시 건설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대중교통순환축의 통합이미지 실현’과 ‘보행 활성화와 활기 있는 가로경관 조성’이라는, 가로벽 구간 설정과 디자인 지침의 초기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진단하여 향후 가로벽 구간의 디자인 지침의 운영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 연구에서 행복도시 가로벽 지침 적용 현황을 진단하고 시민과 전문가,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권과 구역별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지침 운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건설지역에서 디자인 지침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활력 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임유경

5 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인구절벽’, ‘지방소멸’이라는 충격적인 단어들에 유행할 정도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일본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이미 인구성장률은 둔화되었고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30% 이상 시군구에서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역시 지역별로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극단적으로는 지방소멸될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기성시가지의 저이용으로 빈집과 유휴공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 중에 162개의 지역에서 지난 5년간 빈집이 증가하였으며, 이들 지역들 중 빈집 증가율이 100%를 상회하는 지역들도 40개 이상이며, 2015년 역시 2010년에 비해 빈집이 31% 증가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 빈집이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주거환경의 악화, 붕괴 위험, 미관 저해, 범죄 및 재해 증가, 집값하락, 행정비용의 가중 등 물리·사회·경제의 총체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이러한 빈집의 공간적 밀집과 확산은 인근 지역까지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17년 2월,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별도의 법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활용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자원조달계획, 빈집 철거 등의 조치, 지원 대상과 내용을 포함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230여 개 시군구 중 30여 개의 지자체에서 빈집정비 관련 조례를 수립하고 있을 뿐 빈집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은 요원한 일로 여겨진다. 따라서 동법과 시행령에서 제시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조항 보다 상세한 계획 절차와 계획 기준 등을 담은 지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집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한 정비계획 과제를 도출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관련 국

내외 정책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법제를 고려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상세한 절차 및 기준을 담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발·제시하고자 한다.

성은영

6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연구

새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복지 등 사회공공서비스의 확충 및 맞춤형 제공을 위해, 읍면동 행정청사를 단순 내방위주 행정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사회서비스의 거점이자 주민 자치의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행정자치부, 2017.5.). 또한 최근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읍면동 행정청사를 중심으로 행정, 복지, 보건서비스, 공동체지원 프로그램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기획단계부터 운영관리단계까지 모든 프로세스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요를 반영하고, 주민에게 24시간 개방하여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읍면동 행정청사의 서비스 기능과 공간프로그램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동 행정청사 시설기준은 미흡하고 기존 청사의 용도전환 및 공간프로그램 재구성을 위한 리모델링 관련 기준은 전무한 상황이다.

한편, 읍면동 행정청사를 중심으로 한 사회공공서비스 및 공동체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정부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역이 스스로 주민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사업 및 관련 예산을 총괄 지원하는 행정자치부와 희망하는 자치단체, 참여하는 건축사 및 지역주민 등 다양한 참여주체가 지역의 여건 및 수요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읍면동 행정청사 공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획단계부터 참여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읍면동 행정청사의 서비스프로그램 및 공간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혜진

7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개선방안 연구

한국 어린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도시환경이 그만큼 아동친화적이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활동적인 삶뿐만 아니라 체험과 성장의 기회까지 보장하는 근린환경, 즉 '아동친화'적인 근린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도 기실 아동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는 도시공간이 부족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하지만 아동을 위한 도시공간의 개선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은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관련되어 국내외 공공 부문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주광역시, 서울 송파구, 세종시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여러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이해부족과 아동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간적 조건에 대한 지식체계가 불완전한 형편이다. 이로 인해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이 나타나고, 특히 공간부문에 있어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요구되는 '아동의 삶의 실질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공간적인 요구조건을 도출하고, 아동친화적인 공간적 요건에 기반하여 아동친화도시계획 수립 시 필요한 공간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계획안을 수립할 때 상세한 절차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함으로써 실제로 아동이 누리는 삶의 질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오성훈

‘역사도시 유적지 주변의 공공건축, 도전과 과제’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5월 18일 경주 화백컨벤션 센터에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공동으로 ‘역사도시 유적지 주변의 공공건축, 도전과 과제-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선도적인 공공건축 조성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세미나는 경주시 월성 문화재구역 내 출토 유물의 발굴·조사·수장·전시를 위한 운영시설의 조성과정과 계획(안)을 소개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련 사례 리뷰를 통해 시사점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 1부에서는 첫 번째로 김상호 선임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조성 과정을 소개하였으며, 두 번째로 이관석 교수(경희대학교)가 유럽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문화유산

인근의 박물관 건축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세 번째로는 민현준 교수(홍익대학교)가 경복궁과 인접한 옛 국군기무사령부 부지의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강성원 대표(건축사사무소 강희재)가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를 통해 건립 예정인 건축물의 주요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1부의 4개 주제발표에 이어 2부에서는 8명의 토론자와 객석에서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최영기 원장(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땅속 유구 위주인 우리나라 문화유산 여건에 맞는 과거와 현재 공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으며 서동철 위원(서울신문)은 “발굴 자체(현장, 과정)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에 보다 방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임시 운영시설 조성보다는 항구적인 ‘월성 박물관 건립’을 위한 최적의 부지와 건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성배 과장(문화재청)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조화롭게 조성할지가 핵심인 사업으로,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때 31번의 심의를 거쳐 설계안이 완성되었듯이 월성에서도 그와 비슷한 면밀한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주 지역의 전문가와 일반인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재구역 내 공공건축물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가 되었다.

박석환



2017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6월 2일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17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을 열었다.

한옥포럼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 2011년부터 열어 온 행사로, 한옥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옥정책과 한옥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고 있다.

2017년 한옥포럼은 '한옥 짓는 사람들'을 주제로, 좋은 한옥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한옥 짓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양질의 한옥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김대익 소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개회사로 문을 연 이번 포럼은 고영호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세 편의 주제발표와 산·학·연·관의 한옥 전문가들과 발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체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정태도 도편수(참우리건축협동조합)가 맡아 생생한 '한옥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태도 도편수는 현장에서 한옥을 지으며 경험한 현재의 한옥설계 및 시공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참석자들과 나누었다.

이어 홍성호 연구위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한옥 짓는 사람들,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홍성호 연구위원은 한옥시공의 특수성과 현 실태를 짚어본 뒤 한옥건축업 등록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치후 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이 '한옥 짓는 사람이 되려면?'을 주제로, 양질의 한옥을 짓고 보급하기 위해 전문인력 인증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전체토론에는 김왕직 교수(명지대학교)를 좌장으로 강석목 대표(고진티앤시), 김용미 대표(금성건축사사무소), 박준영 선임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 최태용 과장(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방청객과 함께 양질의 한옥을 보급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이번 한옥포럼은 양질의 한옥을 보급하고 한옥문화를 확산하려면 한옥 설계와 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장이 되었다.

구본현

2017년 제1차, 제2차 지식강연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4월 13일과 5월 17일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1차, 제2차 지식강연회를 열었다.

지식강연회는 소내 연구원들에게 다양한 지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전문가 초청 강연회이다.

제1차 지식강연회는 '인간장소, 도시건축디자인에 부치는 인간적임에 관한 논평'을 주제로 민병호 경영위원(행림종합건축)이 강연을 맡아주었다. 민병호 경영위원은 가치와 목적을 품은 사람이 공간을 만나 행위자원을 발굴하고, 이런 목적 행동이 반복되어 의미가 축적되면 그 공간이 장소로 바뀌게 된다는 인간장소의 개념 소개로 시작하여 Place 디자인, Pragmatic 디자인, Artistic 디자인 등 인간장소의 일곱 가지 디자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건축과 공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건축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제2차 지식강연회는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후 박사(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지리학과

펠로)가 '도시재생과 사회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스페인 빌바오, 런던의 테이트 모던과 밀레니엄 브리지, 바르셀로나의 산타카테리나 시장, 2012년 런던 올림픽 개최지인 스트랫퍼드 등 네 곳의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성공요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들 사례는 도시의 성공적 재생이 단순한 건축물 정비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도시의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총체적 재생전략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제2차 지식강연회는 우리나라 도시재생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백혜인

2017년 제1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는 지난 4월 24일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동네 청소년과 함께하는 마을재생'이라는 주제로 '2017년 제1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지역사회의 주요 실행주체로서 인식되지 못하던 동네 청소년들이 재생지역 현장에서 실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계 전략과 참여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총 3인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을 벌였다.

첫 주제발표는 오해섭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맡았다. 그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모형과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군산시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마을재생에서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에 대해 설명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 총괄코디네이터 반영선 소장(선 건축사사무소)이 맡아 주었다. 반 소장은 영주시 관사골 새뜰마을사업 중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청소년 참여 사례를 들려줬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원도심 활동가 유병준 대표(예비사회적기업 잉글컴퍼니)가 '마을재생의 새로운 활력, 동네 청소년'을 주제로, 천안시 원도심 내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 경험을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동네 청소년의 마을재생 관련 사업 참여 방안,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방안,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조성 및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민경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7년 4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최하여 열린 이번 공청회는 2016년 4월부터 수립을 진행 중인 조경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산업 종사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공청회는 김명준 과장(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김용국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주제발표를 통해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조경에 대한 국민 인

식 제고 ▲조경서비스의 양적 확충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 ▲조경산업의 기반 마련과 산업 활성화 ▲조경 교육체계 구축 ▲한국 조경 분야의 국제적 위상 제고까지 6개의 정책별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실행 방안을 설명하였다.

이어 안승홍 교수(한경대학교 조경학과)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된 토론회에는 진승범 대표(이우환경디자인), 김현 교수(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김철홍 상무(도화엔지니어링 조경레저부), 윤영관 사무국장(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김명준 과장(국토교통부 녹지도시과) 등 조경 분야 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조경진흥기본계획(안)의 보완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토론자들은 조경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넓게 설정할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의 개념과 지정 기준을 보완·명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조경진흥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조직 정비, 도시공원 조성·관리 주체로서 주민·민간기업의 역할 규정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5년간의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비중 있게 개진되었으며, 조경 전문 인력 육성 방안과 조경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 과제라는 점 또한 지적되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안)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얻은 보완 방향을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된 후 수립 완료·공고될 예정이다.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보고서 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보고서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발간물 구입에 관해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실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실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2016년 연구보고서

AURI-기본-2016-1
건축물 범죄 안전 디자인 성능에 관한 연구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범죄안전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21,000원

AURI-기본-2016-2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공공·민간분야 활용방안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6-3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방향 연구
22,000원

AURI-기본-2016-4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복합화 실행 모델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 방향
20,000원

AURI-기본-2016-5
식치지역 공·폐가 재생 및 활용 정책방안 연구 17,000원

AURI-기본-2016-6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방안
17,000원

AURI-기본-2016-7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23,000원

AURI-기본-2016-8
의료시설의 원내감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건축적 지원방안 연구 -외래진료부를 중심으로
19,000원

AURI-기본-2016-9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19,000원

AURI-기본-2016-1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비 건축·도시분야 대응방향 연구
24,000원

AURI-기본-2016-11
도시건축박물관 건축기록물 수집·관리방안 연구
9,000원

AURI-기본-2016-12
국공립어린이집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설정 연구
24,000원

AURI-기본-2016-13
경관협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20,000원

AURI-기본-2016-14
역사문화도시 경관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고도(古都) 보존육성지구를 중심으로
22,000원

AURI-기본-2016-15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 기금지원 프로그램 개발
17,000원

AURI-기본-2016-16
시지각특성을 기반으로 한 경관계획 개선방안 연구 -건축물 등의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22,000원

AURI-기본-2016-17
영상정보를 활용한 가로환경 평가 체계 연구 -360°동영상과 VR 기기의 활용을 중심으로
25,000원

AURI-정책-2016-1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연구 -건축규제 및 기부채납 기준을 중심으로
11,000원

AURI-정책-2016-2
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활성화 방안 -주거서비스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및 운영방안
11,000원

AURI-정책-2016-3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건축법 및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9,000원

AURI-정책-2016-4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연구
8,000원

AURI-정책-2016-5
지구단위계획 변경제도 합리화 방안 -경미한 사항 변경을 중심으로
11,000원

AURI-정책-2016-6
도시재생사업 청년층 참여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9,000원

AURI-정책-2016-7
건축협정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령 정비방안 연구
9,000원

AURI-정책-2016-8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에 관한 정책 방향 연구
9,000원

AURI-정책-2016-9
소규모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심 집짓기 정책 방안
10,000원

AURI-정책-2016-10
행정중심복합도시 보행환경 진단 및 향후 조성방향 제안
13,000원

AURI-협동-2016-1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2)
19,000원

AURI-한옥-2016-1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변화 진단을 통한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방안 연구
16,000원

AURI-보행-2016-1
보행정책 성과 평가체계 개발 연구
25,000원

AURI-보행-2016-2
가로단위 보행환경 평가체계 개발 연구
26,000원

AURI-보행-2016-3
보행자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11,000원

AURI-건축서비스-2016-1
건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공건축 설계 대가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13,000원

AURI-건축서비스-2016-2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물 공사감리 대가기준 개선 연구
11,000원

AURI-범죄예방-2016-1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20,000원

AURI-마을재생-2016-1
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 단계의 경험과 과제
9,000원

AURI-공공건축-2016-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및 향후 개선방향
13,000원

AURI-공공건축-2016-2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15,000원

2015년 연구보고서

AURI-기본-2015-1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 연구 -공공재산취득사업을 중심으로
19,000원

AURI-기본-2015-2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건축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연구
17,000원

AURI-기본-2015-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교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연구
32,000원

AURI-기본-2015-4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위험평가 도입 방안 연구
24,000원

AURI-기본-2015-5 공공건축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 23,000원	AURI-정책-2015-8 국가 교육훈련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연구 10,000원	AURI-기본-2014-5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32,000원	AURI-정책-2014-8 안전한 실내건축을 위한 마감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에 관한 연구 10,000원
AURI-기본-2015-6 사람 중심 가로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 연구 31,000원	AURI-협동-2015-1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1) 26,000원	AURI-기본-2014-6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축기준 정비방안 연구 12,000원	AURI-협동-2014-1 주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 21,000원
AURI-기본-2015-7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27,000원	AURI-한옥-2015-1 한옥 부분수선에 관한 거주자 면담 및 점점 사례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4-7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미집행 도시공민 관리체계 마련 정책 연구 14,000원	AURI-한옥-2014-1 현대 한옥기술의 변화와 전망 29,000원
AURI-기본-2015-8 지역의 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18,000원	AURI-한옥-2015-2 목재수종 및 제재방법에 따른 단가변화 연구 11,000원	AURI-기본-2014-8 여건변화에 따른 공공청사 계획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18,000원	AURI-한옥-2014-2 한옥활성화를 위한 신한옥 모델 개발 연구 (3) 19,000원
AURI-기본-2015-9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건축분야 기초연구 18,000원	AURI-한옥-2015-3 한옥 공공건축물 발주절차 개선방안 10,000원	AURI-기본-2014-9 주거다양성을 위한 단독주택지의 계획적 조성 정책 연구 30,000원	AURI-한옥-2014-3 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 연구 (1) 16,000원
AURI-기본-2015-10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 연구 28,000원	AURI-보행-2015-1 2014년 보행자우선도로 현황과 평가 27,000원	AURI-기본-2014-10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사례 및 중장기 운영방안 22,000원	AURI-한옥-2014-4 한옥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기준 및 실행방안 연구 24,000원
AURI-기본-2015-11 건축사의 호칭과 업무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연구 17,000원	AURI-건축서비스-2015-1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13,000원	AURI-정책-2014-1 건축진흥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연구 8,000원	AURI-한옥-2014-5 한옥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연구 23,000원
AURI-정책-2015-1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을 위한 주요 쟁점 분석 12,000원	AURI-건축서비스-2015-2 리모델링 설계 표준업무 설정 및 대가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12,000원	AURI-정책-2014-2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지침 마련 연구 13,000원	AURI-한옥-2014-6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 (3) 22,000원
AURI-정책-2015-2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9,000원	2014년 연구보고서		AURI-한옥-2014-7 2014 한옥 통계 백서 12,000원
AURI-정책-2015-3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10,000원	AURI-기본-2014-1 생활환경개선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지원제도 연구 22,000원	AURI-정책-2014-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6,000원	AURI-보행-2014-1 보행환경과 행태: 조사분석 보고서 (Ⅱ) 19,000원
AURI-정책-2015-4 2014년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17,000원	AURI-기본-2014-1-자료 [별책] 생활환경개선사업 수행 마을기업 면접조사 9,000원	AURI-정책-2014-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론 연구 10,000원	AURI-보행-2014-2 2013 아마존 시범사업 현황과 평가 27,000원
AURI-정책-2015-5 활용 가능한 국유건축물 유형 정리 및 현황 조사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4-2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재생정책 연구 21,000원	AURI-정책-2014-5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 개발 방안 연구 7,000원	AURI-보행-2014-3 2013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현황과 평가 24,000원
AURI-정책-2015-6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향 11,000원	AURI-기본-2014-3 용도지역제도를 고려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책 연구 23,000원	AURI-정책-2014-6 한옥의 효율적 등록관리를 위한 건축물대장 개선방안 연구 9,000원	
AURI-정책-2015-7 건축물 옥상공간의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9,000원	AURI-기본-2014-4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29,000원	AURI-정책-2014-7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11,000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신간 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소개 및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홍보팀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한옥 시공 핸드북(3)
신치후, 고영호, 김꽃송이
비매품



협력적인 건축심의 운영을
위한 8대 과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비매품



한옥마을 이야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지역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을재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비매품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매뉴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비매품



사제로 보는 마을재생 시리즈 1
-장소중심 마을재생의
열 가지 키워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비매품



마을재생 리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계획 및 사업 특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비매품



2016 건축·도시 정책과
연구 동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비매품



도시활성화 마스터플랜
-부산 진구를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비매품



공공건축 제안공모
운영 가이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건축서비스산업의 가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비매품



한옥 시공 핸드북
이강민, 고영호, 김꽃송이
비매품



한옥건축기준 안내서
이강민, 이세진
비매품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
제정 안내서
신치후, 김가람
비매품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15
차주영, 이상아, 현태환
비매품

보내는 사람

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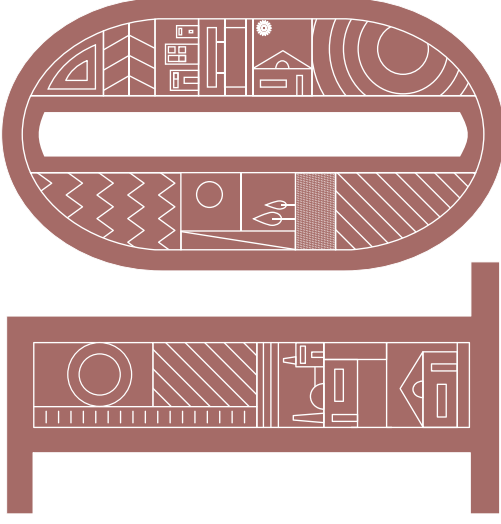
주소



받는 사람

(a u r 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 홍보팀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층



이번 호 <건축과 도시공간> 코너에 대한 생각, 필자와 편집진에게 바라는 점을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이번 호 <건축과 도시공간> 코너에 대한 의견

(예) 좋았던 코너와 이유, 해당 코너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 등

▪ <건축과 도시공간>에 바라는 점 또는 제안하는 점
